

2023

국정감사 백서

PEOPLE POWER PARTY

2023

국정감사 백서

PEOPLE POWER PARTY



2023
국정감사 백서

PEOPLE POWER PARTY

목차

제1부 발간사

원내대표	008
정책위의장	010

제2부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법제사법위원회	013
정무위원회	019
기획재정위원회	027
교육위원회	03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041
외교통일위원회	047
국방위원회	063
행정안전위원회	06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07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8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089
보건복지위원회	097
환경노동위원회	103
국토교통위원회	111



제3부 상임위 의원별 주요성과

국회운영위원회	117
법제사법위원회	129
정무위원회	139
기획재정위원회	149
교육위원회	15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65
외교통일위원회	175
국방위원회	185
행정안전위원회	19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19
보건복지위원회	233
환경노동위원회	245
국토교통위원회	251
여성가족위원회	263



제1부

발간사

원내대표 발간사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



23년도 국정감사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으로 21대 국회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국정감사였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생부터 민생까지’라는 국정감사 슬로건을 정하고 민생국감, 책임국감, 희망국감이라는 3대 기조 아래 정쟁이 아닌 민생문제에 집중하여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국정감사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국제적 3高 위기 속에서 경제활력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시민단체, 건설노조 등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던 각종 카르텔을 밝혀내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통계조작, 가짜뉴스 등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경제 활력 제고뿐만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체질 개선과 산업구조 혁신, 규제개혁, 미래성장동력 발굴에 주력했고, 현재 정부의 지원방안을 뒷받침하고 강화하여 국민께서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야당은 국정감사의 본연의 취지에 집중하기보다는 가짜뉴스 제기, 과도한 정쟁 유발에 집중해 국회가 해야 할 역할에 미흡했던 점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신공격, 아니면 말고 식의 구태 정쟁 유발 행태에 대해 국민의힘은 더욱 논리적이고 철저한 검증과 대응으로 가짜뉴스를 무력화시켰고, 유능한 여당의 능력을 입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며 4년간의 최종 성적표와 같은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경제와 민생 안정에 기여하는 민생밀착형 국감을 만들고, 무조건 정부의 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꼼꼼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부의 부족한 점을 찾아내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민에게 약속한 국정과제와 세부 정책을 실현하는데 있어 책임 있는 태도와 미래 비전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으는 모습이야말로 국민이 원하는 집권여당의 모습이며,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단단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내년은 윤석열 정부 3년 차인 동시, 22대 국회를 구성하는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은 더욱 민생을 위한 정책 개발과 예산 지원에 당력을 집중하여 정부의 국정과제를 가시화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생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재호

정책위의장 발간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유 의 동



2023년 국정감사가 대장정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제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정기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21대 국회 4년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와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올해 국정감사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4개월 만에 열렸던 만큼, 헌법이 부여한 국정감사 취지에 맞게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고, 국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우리 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문제에 초점을 두고 국정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더욱 분명히 하고자 슬로건도 ‘민생부터 민생까지’로 정했고, ‘민생국감’, ‘책임국감’, ‘희망국감’을 3대 기조로 삼아 국민께 신뢰와 희망을 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가 호통, 막말,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정쟁의 장’으로 흐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하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실천 가능한 정책 대안을 내놓는 ‘정책 국감’으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백서에는 국감 현장의 기록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거대야당의 정치공세와 발목잡기에도 불구하고, 수준 높은 정책질의로 국정감사를 이끌어주신 당 소속 모든 의원님과 보좌진, 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전문위원, 그리고 사무처당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민생을 살리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일에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언제나 ‘국민 눈높이’에서 각종 현안을 바라보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으로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드는 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년 11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유 의종



제2부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I 주요 내용

■ 민생안전 위협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주문

- 최근 증가하는 문지마·강력 범죄, 마약 등 민생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하여 예방, 단속·수사, 처벌 등 대응 강화 주문
- 사회적 약자,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회복 적극 지원 촉구
 - 부산돌려차기 사건 관련 범죄피해자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 등 형사소송 재판 제도 개선, 기초생활수급자 범죄피해자구조금 지원 관련 피해자 보호 취지와 상충되는 법제 정비 주문

■ 국기문란, 권력형 비리 사건 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및 재판 촉구

-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 대선공작게이트(대선개입 여론조작)
- 국기문란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후원금, 위증 교사, 배우자(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정의 실현 촉구

-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 재판지연으로 인한 사법부 신뢰 저해, 국민 불편·피해 지적
 - 각급 법원들의 재판 마비로 인한 사법 정의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사법부의 개선 노력 당부
 -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의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이면합의 등 위법 행태 지적, 시정 촉구
-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 심판 등 재판 지연으로 인한 위헌 상태 방기를 지적하고 헌법수호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이행해 줄 것 촉구

[민생안정]

민생안전 위협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I 주요 내용 및 성과

■ 문지마·강력 범죄, 마약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의 급증으로 인한 국민 피해와 불안 가중

-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민생 안전 위협 범죄에 대하여 수사·처벌 뿐만 아니라 치료·예방까지 망라한 범정부차원의 대응 강화를 통한 민생 보호 주문
- 교정시설 내에서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비율 증가 지적 및 약물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 촉구

■ 사회적 약자, 범죄피해자 보호 및 회복 적극 지원

- 부산돌려차기 사건 관련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제한으로 인한 방어권 침해 문제 지적, 형사 소송재판 제도 개선 주문
- 기초생활수급자가 범죄피해자구조금 지원을 받게 될 경우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되어 수급권 박탈 위기에 처하게 되는 모순 지적, 범죄피해자 회복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법제 정비 필요성 제기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문지마·강력범죄 방지 관련 법률 개정

-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형법」, 공중합박죄 신설 「형법」, 공공장소 흉기 소지행위 처벌 「폭력행위 처벌법」, 강력범죄피해자 개인정보보호 「민사소송법」, 보복범죄 법정향 상향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 '23.10.6.,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공개법」 국회 통과 ('23.10.24. 공포)
내란·외환죄, 범죄단체조직죄, 폭발물사용죄,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일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일부 마약범죄 등 대상

■ 마약 예방교육 및 홍보, 마약범죄대응 정책 및 예산 지원

■ 피해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재판제도 개선

■ 범죄피해구조금 분할지급 또는 피해자 재산 합산 예외 특례조항 마련 등 입법체계 정비 검토

[수사 및 재판]

국기문란, 권력형 비리 사건 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및 재판 촉구

Ⅰ 주요 내용 및 성과

-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 대선공작게이트(대선개입 여론조작) 관련 철저한 수사를 통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 당부
-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을 밝히 감사원의 감사결과 관련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 신뢰를 추락시키는 국기문란 사안임을 지적하고 철저한 수사 촉구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위증교사, 배우자(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사건 등과 관련하여 엄정하고 조속한 수사 및 재판 촉구
-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합의부 배당 관련 사건 병합을 통한 재판 지연 우려 강력 제기

Ⅱ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철저한 수사 및 엄정하고 조속한 재판 지속적으로 촉구

[사법부 신뢰]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정의 실현

I 주요 내용 및 성과

■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 재판지연으로 인한 사법부 신뢰 저해, 국민 불편·피해 지적

- 각급 법원들의 재판 마비로 인한 사법 정의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사법부의 개선 노력 당부
-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의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이면합의 등 위법 행태 지적, 시정 촉구

■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 심판 등 재판 지연으로 인한 위헌 상태 방기를 지적하고 헌법수호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이행해 줄 것 촉구

- '노란봉투법', '방송3법' 권한쟁의 심판 기각 관련 거대정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견제 역할 포기 지적, 편향성 우려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재판 지연 개선 방안 촉구 및 지원

■ 법원행정처-법원노조 불법이면합의 및 불법적 전임활동에 대한 감사원 감사, 부당 지급된 급여 환수·징계 촉구



제2부

상임위원 평가 및
후속조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서민금융 강화 및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I 주요 내용

■ 가계부채 관리 및 서민금융 지원 확대 필요성 강조

-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촉구 및 서민금융지원 확대 요청
- 부동산PF 부실 우려,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관리 요청

■ 금융회사 내부 통제 강화 촉구

- 금융지주 등 금융권의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지적
- 내부통제 실패에도 지속되는 금융권의 과도한 수익 추구에 대한 문제 제기

■ 불법공매도 등 자본시장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제도 개선 촉구

-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불법공매도 전수조사 요구
- 전환사채 악용, 시세 조정 등 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 주문

■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촉구

- 가맹사업 필수품목 강제 등 가맹사업상 불공정거래 제도개선 촉구
- 거래상 지위 남용, 입찰담합 등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사 촉구

■ 통계조작 등 문재인 정부 실정에 대한 지적 및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 점검

- 국책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연구원 내부규정까지 위반해 가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성을 통계 수치 왜곡하여 조작했음을 지적
- 조작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 연구결과에 대한 전수조사와 연구과제 폐기로 인한 예산회수 방안 등 점검필요

■ 증인 채택 이후 해외 체류 연장 등 고의적인 국감 불출석에 대한 국회의 단호한 대처 강조

[지난 문재인 정부 실정]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역효과 은폐 통계 조작 등
문재인 정부의 엉터리 국정운영

I 주요 내용 및 성과

■ 통계조작 참여 등 국책연구기관의 편향적 연구

- 국책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연구원 내부규정까지 위반해 가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성을 통계 수치 왜곡하여 조작했음을 지적
- 국책연구기관에서 조작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각종 연구자료가 100건이 넘으며 이에 활용된 예산도 수십억원에 달함. 이와 관련된 전수조사와 조작된 통계를 활용한 연구과제 폐기로 인한 예산 회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특위 위원 선정이 이사장의 정치적 성향에 맞는 인물로 구성되었으며, 지정 연구과제 선정이 인문특위 구성원 상호 셀프용역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의혹이 있으므로 조사 필요성 지적

■ 국책연구기관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 국책연구기관이 경상경비로 지출할 수 없는 연구적립금을 경상경비로 지출하고, 작년 국감 지적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커피값 지출 등 방만한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요구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조작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 연구결과에 대한 전수조사와 연구과제 폐기로 인한 예산회수 방안 등 점검필요

■ 부당한 연구과제 선정에 대한 필요한 후속조치 진행 및 국책연구기관 내 연구과제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국책연구기관 예산 집행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민생경제]

금융회사 내부 통제 강화 촉구

I 주요 내용 및 성과

■ 금융회사의 반복적인 대규모 금융사고를 지적하며 내부통제 실패를 질타

- 끊임없는 횡령, 배임 등에 대해 CEO까지 책임을 묻는 등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
-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횡령 규모가 급증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

■ 금융지주 등 금융권의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지적

- 금융그룹의 주인이 없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집권 문제와 회장추천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

■ 내부통제 실패에도 지속되는 금융권의 과도한 수익 추구에 대한 문제 제기

- 금융위가 은행권 제도개선TF를 구성했음에도 내부통제나 과도한 수익 추구 문제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질타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윤한홍 의원 대표발의, 23.9.11) 처리 추진

- 대표이사 등의 직무구조도 마련과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부여를 법제화

[민생경제]

가계부채 관리 및 서민금융 지원 확대 필요성 강조

I 주요 내용 및 성과

■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촉구 및 서민금융 지원 확대 요청

-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취약계층, 중저신용자, 자영업자 등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으므로 관련부처 TF 등을 통한 적극적인 선제대응 필요성 강조
- 금리상승기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연체율도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당국의 특단의 대책 요청
- 코로나로 인한 매출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가중되고 있어 결국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폐업사태에 직면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강구 요청

■ 부동산PF 부실 우려,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관리 요청

- 과도하게 높은 부동산 PF자금 금리가 주택 공급가격 상승과 공급부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서민거주용 주택 공급을 위한 PF금리 인하 노력을 통해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적극적인 금융당국의 역할 당부

I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예산심사 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증액 적극 추진

[민생경제]

불법공매도 등 자본시장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제도 개선 촉구

I 주요 내용 및 성과

■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불법공매도 전수조사 요구

- 불법공매도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투자자 요구를 과감히 수용하여 적극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을 촉구
-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엄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강력한 제재 필요성 제기
- 최근 글로벌IB의 불법공매도 적발 사례 등을 참고해 전수조사 주문

■ 전환사채 악용, 시세 조정 등 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 주문

- 전환사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는 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악질의 금융범죄라고 지적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촉구
- 카카오의 주가조작 의혹은 시장 교란을 통해 선량한 일반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공매도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불법공매도 전수 조사,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민생경제]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 촉구

I 주요 내용 및 성과

■ 가맹사업 필수품목 강제 등 가맹사업상 불공정거래 제도개선 촉구

-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구입해야 할 필수품목에 가맹본부 이익을 위해 불필요한 것까지 포함하는 등 악용사례가 많음. 과도한 필수품목 강제를 규제하는 제도개선 필요성 강조
- 학습교재를 제작하는 본사의 물량밀어내기, 본사와 무관한 사주 관련회사의 영업행위 참여 강요 등 본사 갑질에 대한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 요청

■ 독과점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 당부

- 이동통신서비스는 사실상 필수재임에도 독과점으로 인해 과도한 요금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공정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

■ 거래상 지위 남용, 입찰담합 등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사 촉구

- 공공기관이 입점 업체와 체결한 표준계약상 문제점(해지 시 과도한 손해배상금) 지적
- 해외사업 하도급 계약에서 공정위는 관련조항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해외사업을 수주한 수급사업자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
- 입찰담합을 주도했음에도 리니언시를 활용해 적극 가담자가 오히려 과징금을 면제받고 있는 등 리니언시 제도 악용사례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엄정한 조사 촉구

■ 가맹사업 필수품목 관련 가맹사업법 개정안, 정기국회 내 처리 추진



제2부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I 주요 내용

■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정부의 입장을 국민께 설명하는 국감

- 정부가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상저하고(上低下高) 경제 전망을 유지한 이유와 예기치 못한 기업 실적 악화와 자본시장 침체로 인해 59조원의 세수 결손이 난 이유에 대해 국민과 야당에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
-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 재정 기초 견지와 재정 정상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2.8%로 줄이는 대신 약자 복지와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산업 지원에는 총력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편성한 이유를 설명

■ 현 경제 상황과 쟁점 사안에 대한 여야 인식 차를 좁히려 노력한 국감

- 고금리·고물가·고유가가 지속되어 서민경제가 어려운 만큼 정부의 역할 강화를 주문하고 지원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
- 국가과학기술 R&D 예산 삭감 등에 대한 야당 공세에 R&D 예산이 수년간 방만하게 늘어나 비효율·낭비·중복지출 사례가 있었음을 강조하고 과학계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방안을 찾으려 노력한 국감

■ 정쟁 아닌 민생에 집중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국감

- 과세 사각지대 탈루 방지를 위한 인프라 보강, 개인통관고유번호 명의 도용 방치책 마련, 존치 필요성이 낮은 부담금 정비,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간 과세 불평등 개선, 안전위해물품에 대한 규제 강화, 잘못된 통계로 오염된 분석보고서 개선 필요성 등 집중 제기

■ 향후 개선과제

- 현안과 쟁점에 대한 토론보다 현 정부의 감사원 감사를 두고 '정치 감사' 운운하며 피감기관을 갈라치기 하는 행태,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 등은 국감장에서 자제할 필요
- 정부도 쟁점에 대해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국민과 야당을 설득해야 함에도 국회 자료 요구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고 회피하는 행태는 개선 필요

[경제 상황 진단 및 대응(Ⅰ)]

정부의 경제 전망과 R&D 예산 삭감 논란

I 주요 내용 및 성과

■ 기재부의 '상저하고' 경제 전망, 현재도 유효한가?

- 야,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5차례 연속 하향 조정. IMF 이후 처음으로 한국경제 성장률(1.4%)이 일본(2%)에 역전당했다며 정부가 경제 낙관론을 펴며 서민 고통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비판
- 기재부, 현재 경제 상황이 정부가 전망한 궤도로 움직이고 있으며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기대된다며 기존의 '상저하고' 전망 고수. 내년으로 가면서 회복세가 점차 뚜렷해질 것이며, 일부 IB나 신평사에서 1%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은 가짜뉴스라고 반박

* 국제 신용평가사 Fitch 올해 1%, 내년 2.1% 하향 조정

■ 저성장 기조 고착화 우려 ... 잠재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은?

- 한은, 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2%보다 더 낮아진다는 게 일반적 견해. 노동시장, 경쟁 촉진, 여성 및 해외 노동자 활용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할 시점
- 야, 정부가 이벤트 중심으로 단기 대응을 하다 보니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
 - 5000조에 육박한 민간 부채, 건설사 줄도산 우려, 미분양 주택 증가, 고금리 지속 등이 우려 되는데 짧은 대응만 반복하며 부실을 밀어내고 있다고 지적
 - 일본도 여러 위기 징후에 계속 '좋다. 별일 없다'며 무시하다 2년 지나 0% 바닥으로 주저앉았다고 경고. 지금은 게임의 판을 바꿀 정도의 큰 정책이 나와주어야 한다고 강조
- 기재부, 잠재성장을 하락을 이겨내기 위해 국가 첨단전략산업 14개 과제·12개 섹터를 정해냈고 신성장 전략도 마련했다고 반박

■ 국가과학기술 R&D 예산 삭감 공방

- 야, 30년 만에 R&D 예산이 삭감됐다며 IMF 때도 줄이지 않았던 예산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폭 삭감했다고 비난
- 여, 文 정부에서 R&D 예산이 53% 증가. 예산 부정 사용에 따른 환수금이 126억에 달하고 쓰지도 못한 예산이 2.5조원을 넘는다고 반박. 제대로 된 성과평가 통해 나눠먹기 식 예산을 한번 정리할 필요

[경제 상황 진단 및 대응(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통화정책 '딜레마'에 빠진 한국은행

I 주요 내용 및 성과

■ 현 경제 상황은? “경기 침체기 맞지만, 1.4% 성장으로 가고 있다”

- 현재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경기 침체기가 맞다고 인정
- 7, 8월이면 반도체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10월 들어서야 회복세 보이는 등 지연. 향후 대외요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볼 필요
- 美 고금리 장기화 예상했으나 예상보다 금리가 더 올라가고 있고, 현재는 美 통화정책보다 중동 사태가 더 위험한 상황. 내년 경제 전망 원점 재검토

■ 최근 가계부채 급증... “가계 빚 안 잡히면 금리 인상 고려”

- 야, 한은이 기준금리를 3%p 인상했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정책 엇박자’에 대해 비판
- 한은, 고금리가 상당히 유지될 때 부채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안 잡힌다면 ‘금리 인상 고려할 것’

■ 향후 물가와 금리 상황은? “답답한 상황, 불확실성 커져”

-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유가가 크게 변동하면 어느 쪽으로 갈지 자신할 수 없는 상황. 국제 유가, 환율 등의 변동성 확대로 향후 물가 경로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지금의 美 금리 상승 기조가 일시적이라면 관리 수준에서 머물러야겠지만, 장기적이라고 하면 많은 정책 딜레마를 주기 때문에 좀 더 연구가 필요

■ 급격한 저출생·고령화... 구조적 저성장 문제에 대한 해법은?

- OECD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 추산.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3년 3.5%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올해 2% 선 붕괴, 내년에는 1.7% 전망
-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면 통상 중립금리도 하락. 주요국에 비해 한국의 잠재성장률 낙폭이 커지면서 주요국 중립금리와 격차가 커질 경우, 통화정책 여력은 그만큼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

[반복되는 세수 추계 오류]

3년 연속 두 자릿수 세수 오차율 역대 최대 세수 결손

I 주요 내용 및 성과

■ 세수 재추계를 통한 올해 결손액 59.1조원으로 역대 최대

- 여, 3년 연속 큰 폭의 세수 오차(21년 +17.9%/ 22년 +13.3%/ 23년 -14.8%)가 발생하고 있다며 외부 전문가 참여와 국제기구 컨설팅을 받아 세수 추계의 부정확성을 개선할 것을 주문
- 야, 관련 통계를 전산화한 1990년 이후 결손 기준 최대치. 文 정부는 2021년 역대 최고치인 62조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다음 해 2월 세수 추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당시 세제실장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단행. 尹 정부에서는 60조원의 세수 '펑크'가 났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
 - 어닝 쇼크가 발생해 미리 반영하지 못했다고 하나,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이미 3분기에 50.5% 감소해 세수 변동 특이사항을 알 수 있었다고 지적
- 기재부, 경기 변동성이 확대된 현 상황에서는 정확한 전망에 한계가 있으며 세수 전망 오차는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

■ 세금감면 법정 한도 계속 어긴 기재부

- 야,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국세 감면율은 14%인데 내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감면율이 16.5%로 한도를 어겼다고 비판
- 기재부, 의무조항 아닌 '권고조항' 강조. 금년 예산 편성할 때보다 실제 세수 감이 많이 일어나 사후적 감소가 일어난 것으로 문 정부 집권 때인 '19, '20년에도 일어난 일이라고 반박

■ 지키지 못한 재정준칙 ... 내년 예산안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3.9%

- 야, 기재부가 도입하겠다고 공언한 재정준칙도 스스로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
- 기재부, 3% 적자를 하면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마이너스로 해야 한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재정적자 비율을 3% 높게 편성했다고 강변. 이후 연도부터 3% 밑으로 수립했다고 반박

■ 여야, 대규모 세수 결손에 지방재정 부담 가중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 촉구

[중앙은행 독립성 논란]

중앙은행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부 지출 관행 개선 필요

I 주요 내용 및 성과

■ 기재부의 ‘한은 사금고화’ 관행 개선 필요

• (한은 발권력 동원한 일시차입금 급증)

한은이 국회 제출한 ‘대정부 일시대출금 내역’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기재부가 한은에서 빌려 간 누적 금액은 총 113.6조원으로 전년 대비 3.32배 규모.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부 지출이 컸던 2020년 대출액(102.9조원) 상회

- 이자도 1497억원으로 연간 최대치였던 2020년 471억원의 3배 초과
- 대정부 일시차입 증가는 통화량 증가와 같은 효과를 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 미국에서는 재무부가 美 연준으로부터 직접 차입을 못하도록 금지
- 한은, 정부가 중앙은행 발권력에 의존한다는 단점은 있으나 단기 유동성을 조절할 때 효율적이라는 장점도 존재. 세수가 한 달 뒤에 들어오니 좀 갖다 쓰겠다는데 한은이 하지 말라고 할 명분은 없다며 국회가 한도를 결정해야 할 문제이며, 평잔은 5조원으로 유지

• (외환보유고에서 빠져나간 국제기금출자금)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은이 정부 대신 국제금융기구에 출연·출자한 금액은 12.6조원, 같은 기간 정부 납입액은 1조원에 불과. 지난 10년간 전체 출연·출자금의 92%를 한은이 대납

- 현행법에 ‘정부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기재부는 단서조항을 활용해 한은에 부담 전가.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대부분 국회 승인을 거쳐 국제금융기구 출자 규모 결정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기재부의 지출 관행 개선 노력 필요

-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외환보유고를 사용하는 대납 관행 개선
- 예정처, 정부가 적자국채·일시차입금 정보를 매달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

[文 정부 통계 조작]

소득주도성장 홍보 위해 소득통계 조작한 통계청

I 주요 내용 및 성과

■ 쟁점 ①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무단 유출

- 당시 靑 경제수석실이 통계자료제공심의위 승인 없이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유출해 노동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에게 보내 분석 의뢰
- 자료 제공 전 청와대의 문서 요청 없이 마이크로데이터가 외부로 나간 것은 절차상 하자가 분명. 법적 절차를 위반해 국민의 소득·지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정치적 목적에 악용된 것에 대해 비판

■ 쟁점 ② 소득분배 개선 목적의 가중값 조정

-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하던 가계소득이 감소로 전환되자,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새로운 가중값을 적용해 소득을 올리는 방식으로 2017년 2분기 통계 조작
- 규정상 표본설계담당부서인 표본과에 의뢰해 표본에 맞는 가중값을 받아 계산했어야 함에도 표본과가 통계의 불안정성을 들어 이를 반대하자 실사 부서인 복지통계과가 내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

■ 쟁점 ③ 시스템 뚫려도 몰랐던 통계청

- 가계동향조사를 담당하던 복지통계과 사무관은 2017년 8월 외주업체 직원을 불러 무단으로 '가구 사회부문 통합관리시스템'의 소스 코드를 변경
- 가중값을 허가 없이 임의로 사용해 생산된 통계들은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계속 악용, 조작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초고속 승진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정부에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

- 승인받지 않은 통계 시스템 변경을 막을 내부 통제장치 마련 시급
- 가중값이 일정 정도 이상 변경될 경우, 관련 절차를 내규화 할 필요



제2부

상임위원 평가 및
후속조치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I 주요 내용

■ 예비군 대학생 학습권 보장, 졸업유예제도의 개선, 대학원생의 권리보장 등 대학생의 당면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민생국감에 주력

- 졸업유예시 유예금 납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학습권 보장 미흡에 대한 정부와 대학의 노력을 촉구
- 의대정원 증원,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위한 입법조치 필요성 강조하면서 대학이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체제 개편을 강조

■ 교권보호, 학교폭력 예방 등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육공동체 정착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정부 대책이 일선학교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없는 후속조치를 요청

- 교권4법 통과 이후 현장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업무 경감과 교육활동 보호 조치 강화, 교사관사 확보 및 시설개선 등 교원복지 지원 강화
-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통학로 개선, 학교무인경비시스템을 지자체의 무인관제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제안

■ 모듈러 교실 카르텔 문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예산낭비 사례, 인사비리 의혹 문제를 지적하며 前 정부의 이권 카르텔 개입 의혹을 심도있게 제기하였으며, 기관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촉구

- 그린스마트교실 구축사업(모듈러 교실) 추진에 있어서 특정기업에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관련 부처의 부당업무 처리 등 카르텔 의혹 제기
- 시도교육청의 방만한 교육재정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 요구
- 국립대학/국립대병원/시도교육청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조치 필요성 강조

[대학생 청년대책]

대학생 청년 자원 강화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I 주요 내용 및 성과

■ 대학생 학습권 보장

- 대학들이 고용 한파에 대학을 못 떠나는 학생들에게 졸업유예금 명목으로 지난해 10억 넘게 걷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육부와 대학에 학생들의 졸업유예에 따른 추가 부담을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
- 예비군 대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학의 적극적 조치 요청
- 국내 소재 외국대학교 내국인 재학생(4천4백여명)은 국가장학금 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도 불가능한 현실을 지적하며, 글로벌시대에 대학의 소재와 관계없이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검토 요청

■ 대학원생 학습연구권리 보장

- 서울대 등 대학원생 인권보장을 위해 ‘대학원생 권리장전’ 등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대학원생 학습연구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조치 촉구

■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역대학혁신 시스템 구축

- 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지원법’ 조속 통과 강조
- 지역의료 격차완화를 위한 의대정원 증원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요청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대학생 청년 지원을 위한 정부와 대학에 제도개선 촉구

- 예비군 대학생 학습권보장 등 교육부와 대학의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를 통한 의대정원 증원 등 추진

[신뢰받는 교육공동체 만들기]

교권보호 강화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시스템 개선

I 주요 내용 및 성과

■ 교권 보호 및 복지 대책 강화

- 초·중·고교 기간제교원의 60%가 담임 업무를 맡고 있고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13년 53.5% → 22년 60.2%)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담임교사 업무의 기피 원인으로 지목되는 행정 업무의 경감과 교육활동 보호 등을 통해 정규교사가 담임을 맡도록 조치
-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사 관사의 공급부족과 열악한 시설로 교사가 농어촌지역을 외면하게 되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

■ 학교폭력

- 학교폭력 예방에 있어서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SPO 멘토링 사업을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학교폭력 강의시 강의자료를 표준화하는 방안 제안

■ 지자체 등과 연계를 통한 학교 안전시스템 구축

- '안전한 학교 통학로 만들기'에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을 활용하여 학교밖 통학로 개선에 적극 활용 촉구
- 학교의 무인경비시스템을 지자체가 운영하는 무인관제시스템과 연결하여 범죄예방 사전 조치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교권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후속 입법조치 및 제도개선

- 교권보호 4법 통과 이후 추가 입법 추진
- SPO 역할 강화 및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협업 강화

[대한민국 역사 바로세우기]

학교현장의 정율성 우상화 및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강력 대응 촉구

I 주요 내용 및 성과

■ ‘정율성 우상화 초등학교’ 문제점을 집중 지적하며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사례에 대해 엄정 조치 요구

- 관련 학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관련 문제점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학교는 해당 지자체에 정율성 벽화 철거를 요청

■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강력하고 전략적인 대응 촉구

- 6.25전쟁을 ‘항미원조’라고 서술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질책하며 교육부 산하기관의 역사왜곡 전수조사,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
- 역사왜곡에 대응하여 전·근대 시기에 있어서 동북아국가간 역사적 자리매김을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유관기관간 전문적 공론화 장을 마련하여 논의하기를 교육부와 관계기관에 제안
- 대학내 설치된 22개 공자학원과 서울대 ‘시진핑 자료실’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학에 대하여 조속한 시정을 요구

■ 평화통일교육-안보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균형감 있는 안보관 확립

- 2020년 통일강원연구원 주도로 개발한 ‘중고생 북한지역 현장학습 가이드북’은 편향된 역사관, 북한 미화 등 교육의 정치적 이용에 대한 문제점 지적(前 강원도교육감 증인 출석)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역사왜곡에 대한 교육부와 유관기관의 적극 대응 촉구

-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유관기관의 적극 대응 및 협업강화

[前정부 실정 및 카르텔 의혹]

모듈러 교실 카르텔 의혹과 지방교육재정 낭비 지적

I 주요 내용 및 성과

■ 모듈러 교실 카르텔 의혹 조사 촉구

- 모듈러 교실 관련 업체가 조달청에서 혁신기업으로 선정되는 과정에 의혹이 있으며, 이를 통해 특정 3개 업체가 독점하고 그 중 1개 업체의 매출액은 4천억원에 달함(23년 9월 기준, 3개사가 64.5% 물량 수주)
-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비로 일부 교직원 뮤지컬 관람, 자격증 취득 등 국민혈세를 편법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지적하며,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예산 낭비가 없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 감독 요청

■ 지방교육재정 낭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방만한 운영(학교통폐합지원예산으로 과도한 국외현장체험연수 집행 사례)을 지적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점검과 개선 요구
- 경남교육청 노트북 보급 사업(1600억원, 대만산 29만대)이 당시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사업이라는 지적과 보급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해 의혹 제기

■ 알박기 인사전횡 및 코드인사

-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에 선거캠프 관계자였던 무자격 인사 채용 문제
- 부산 前 교육감과 인천교육청의 부당 인사 지적
- 경북대, 전북대병원 등의 부당 인사 의혹과 전북대(수의대)의 전과 과정에서 비리 의혹 등을 제기하며 교육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비리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

- 모듈러 교실 관련 비리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 요구

제2부

상임위원 평가 및
후속조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I 주요 내용

■ 민주주의 훼손 및 국민 불신 조장하는 가짜뉴스 근절 강조

- 반사회·반민주 가짜뉴스가 표현의 자유로 포장돼 공동체와 개인을 위협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사전 예방·사후 처벌 및 법규 정비에 만전 당부
- 불법·유해 정보를 신속히 차단·삭제하여 피해를 구제하고, 허위 조작 콘텐츠의 사각지대를 없애 건강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조성
- AI 활용 가짜뉴스 확산 등 위험성 완화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

■ 국민께 신뢰받는 공영방송 위상 정립 요청

-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치로 정론 보도, 공정 보도에 역량 집중
- 내부 알력과 저성과를 개혁하는 정도 경영, 생산 경영으로 경영난 타개

■ R&D의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내고 선도적 R&D로 전환 촉구

- 지난 정부에서 4년 만에 급격하게 예산이 증가되는 과정에서 관리역량 취약, 온정주의 평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비효율과 낭비 등 그릇된 관행이 발생
- 윤석열 정부 R&D 혁신은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 지원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 동력과 인재를 육성하는 것임을 강조

■ 글로벌 우주강국 도약 위한 우주항공청 신설

- 우주의 경제적·안보적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전문성과 유연성을 갖춘 우주항공 전담 부처 조속 출범 노력
- 항우연·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직속기관화 추진을 통해 연구 역량 고도화

■ 서민 가계 부담 완화 위한 통신비 인하 강조

- 단말기 가격 상승과 통신사들의 고가 요금제 집중 전략에 소비자 선택권 제한
 - 중저가 단말 출시를 독려하고 국내 리뉴드 단말(리퍼폰) 시장의 활성화 도모
 - 5G 저가요금제, 5G·LTE 통합요금제 등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편 권유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 확보, 최우선 과제 명시

- IAEA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계획대로 안전하게 방류되는지 지속 점검
 - 빈틈없는 방류 데이터 모니터링, 우리 전문가 현지 파견 등

가짜뉴스 근절 추진과 포털의 사회적 책무

I 주요 내용 및 성과

■ 사회통합과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가짜뉴스 폐해 심각

- 중대한 공익 침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심각한 혼란 유발 등에 대해 신속심의와 후속 구제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패스트트랙)구축 등을 통해 가짜뉴스 확산 방지 필요
- 인터넷 사업자의 영향력 강화 추세를 고려할 때 가짜뉴스 퇴치를 위해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사업자 등의 자율적인 심의 협력과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
 - 자율규제의 한계가 나타나는 영역에 대해 입법 수단 보완 강구 권고
- ‘다음. 축구 한중전 클릭 응원 논란’ ‘드루킹 사건’ 등에서 입증되었듯 매크로 프로그램, 비로그인 기반 중복 클릭 등을 활용해 여론을 왜곡·조작하려는 부정한 시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함

■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무 자각

- 범죄·허위사실·괴담·선동 등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대·왜곡 재생산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내외 사업자들이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것을 권유
 -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 및 2차 가해 방지, 불법스팸 차단, 보이스피싱 대응 등
- 국민 대다수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며 여론의 생성과 흐름을 인식하는 포털 중심의 뉴스유통·소비 구조
 - 양질의 뉴스콘텐츠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뉴스·검색 추천 시스템 및 기사 배열 알고리즘 구성 모색 시급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국민 일상으로 안착한 디지털 미디어 및 포털 뉴스 생태계에 대한 중립성과 자율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인식과 지속 가능 경영 확립

I 주요 내용 및 성과

■ ‘김만배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MBC 편파보도는 자유민주주의를 농락한 ‘제2의 김대업 병풍 사건’ ‘제2의 드루킹 사건’을 연상시킴

- 불공정 보도, 편향 보도는 ‘언론윤리헌장’,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에 정면으로 반하는 언론 권력의 남용이며 공익 훼손 행위임을 지적
- 2008년 광우병 선동 등 나라가 혼돈에 빠지는데 일조했던 과거의 그릇된 행태에 대한 성찰이 부족

■ 방송문화진흥회의 방임과 해태

- ‘가짜뉴스’를 보도한 MBC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는 방문진의 방임, MBC의 몰상식 경영, 자회사의 적자경영을 사실상 방치한 방문진의 무책임 비판
- 방문진은 안형준 MBC 사장의 차명 주식 소유 의혹과 관련해서 본인의 명쾌한 해명 없이 유아무야 눈 감고 지나갔던 ‘답정너’ 선임 일관

■ KBS의 편향보도 및 방만경영은 공적 미디어의 역할 미흡

- OTT 약진 등 급변하는 미디어환경, 지상파 광고 시장 위축 등 경영 악화에도 도덕적 해이 만연 등 뼈를 깎는 구조 개혁 의지 부족 일침
 - 기형적인 인력구조, 외부변화에 둔감한 무사안일 운영 등 방만경영 혁파
- 좌편향 출연자 일색인 KBS 라디오 보도, 비과학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접근 등 공적 책임과 균형감각을 상실한 편향 보도 일색
- 팩트체크 시스템 정비, 사전·사후 모니터링 등 자체 심의 기능 강화를 통해 ‘정론 보도’라는 공적 미디어의 본분을 자각 권유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공영방송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다각적 자구방안 마련 촉구

- 시청자들의 신뢰 회복과 시청률 제고 등 경쟁력 강화 제고 시급

R&D 예산 구조개혁 및 우주강국 도약

I 주요 내용 및 성과

■ R&D 혁신으로 그간 누적된 비효율 해소

- R&D 예산은 지난 5년간 53% 상승, 10조 원 이상 증가한 31조 원에 육박하여 세계 최상위 R&D 투자국 반열에 올랐으나, 양적 팽창에 걸맞은 내실있는 질적 성장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도 상당.
- 가파른 R&D 예산 증가는 'R&D 나눠먹기, 소액·단기 과제 뿌려주기, 주인이 있는 R&D 기획' 등을 유발하는 등 R&D 집행·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 증폭
- 유사 중복 투자, 비생산적 자원 투입 등 혁신성이 낮은 사업들을 구조조정하여 그간 누적된 낮은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는 구조개혁 필요성 공감

■ R&D 다운 R&D로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 창출 강조

-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데 중점적으로 사용해야 함을 강조
-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혁신적 연구를 지원하고, 글로벌 수준의 젊은 인재 육성에 방점
-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

■ 우주시대 본격화, 우주산업 육성 기반 강화 방점

- 우주항공 분야 총괄 및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우주항공청' 설치
 - 우주 경제 가치증대, 안보의 중요성 확대 등 뉴스페이스 시대 선도 담당
-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중심의 우주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내 우주항공기업들의 성장과 세계시장 진출 지원 등 우주경제시대 본격 대비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국민 혈세인 국가 R&D 예산의 투명하고 생산적인 설계 및 집행 강조

- PBS 등 기존 시스템 등을 고찰한 종합 개혁 방안 마련 권고

■ 우주항공청법 연내 처리 추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해외 빅테크의 공정경쟁 촉구

I 주요 내용 및 성과

■ 고가 단말기는 통신비 상승의 주된 요인,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및 중고폰·리퍼폰 시장 활성화로 단말기 값 인하 모색

- 프리미엄폰 위주 단말기 고가화가 지속되어 이용자의 부담 날로 가중
 - 제조사, 이동사와 협의하여 중저가 단말 출시를 확대해 소비자가 편리하고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선택권 확대
- 경기침체와 스마트폰 성능 상향 평준화로 세계 리퍼폰·중고폰 시장 급속 확대
 - 중고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중고폰 사업자 공시, 중고폰 거래 사실 확인 서비스 도입 등 중고폰 인증제 도입이 시급함을 강조

■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통신 요금체계 개편 촉구

- 단말의 종류에 관계 없이 LTE·5G 요금제를 이용자가 선택해 가입할 수 있고, LTE·5G로 요금제를 따로 나누지 않고 데이터 전송속도와 용량, 부가서비스 등에 따라 요금을 내는 통합요금제 도입 적극 권장
- 5G 요금제의 최저구간이 여전히 높아 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됨에 따라 최저구간 요금 하향, 요금제 세분화 등 이용패턴에 적합한 요금제 선택 가능토록 개선 권고

■ 구글, 애플 등 해외 빅테크의 공정경쟁 촉구

- 국내 통신망 중 전송량(트래픽 비중 28.6%)이 가장 많은 구글, 망 사용료는 0원
 - 구글이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고 정당한 대가 지불 방안 마련 촉구
 - 애플이 한국 시장에서 타국 대비 높은 출고가와 배터리 교체 비용 등으로 한국 소비자를 홀대하며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지적
 -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회사 메타의 국내 대리인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되는 실상을 공개하며 국내 이용자 보호 의무 회피에 일침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실질적인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제조사와 통신사의 동참 촉구

■ 해외 빅테크에 대한 엄정한 잣대 적용 통해 국내 업체들의 역차별 해소 촉구

제2부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I 주요 내용

-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750만 재외동포의 숙원인 ‘재외동포청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는 재외동포청이 6월 5일 공식 출범
 - 출범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조속히 조직을 정비하고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발전을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과 인류의 공동번영에 기여한다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실태 점검
- 국민의힘 대선공약이자 현 정부 국정과제인 공적개발원조(ODA) 확충 목표를 조기에 달성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구
- 한일 외교, 한미 외교, 한미일 정상회의, 중동 경제 외교 등을 통해 국익을 최대한 증대시킨 현 정부의 성공적인 정상외교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성과 부각
- 하마스 세력의 이스라엘 민간인 공격으로 촉발된 최근 중동 위기 상황과 관련 현지 우리 교민의 안전대피 현황을 점검하고 UN평화유지군으로 인근 레바논에 주둔하는 우리 파병부대(동명부대)의 안전대책 촉구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원칙과 과학을 바탕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정치적 공세를 목적으로 논리적 설득력이 결여된 민주당 주장의 허구성 지적

통일부·민주평화통일위원회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 경주

I 주요 내용

■ 대한민국 안보태세를 제약하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촉구

- 사문화된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통한 안보태세 재건
- 향후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9.19군사합의의 효력정지 지속 추진

■ 문재인정부 졸속 개정법인 「남북관계발전법」의 위헌성과 개정 필요성 지적

- 김영정 하명법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대북전단금지조항’의 위법성·비민주성 지적
-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금지조항’이 위헌임을 판결한 만큼 「남북관계발전법」 졸속 개정 추진 (△지성호 의원(‘2106996) △윤상현 의원(‘2125056), △권영세 의원(‘2125138))

■ 남북교류협력의 단호한 질서 확립 촉구

- 윤미향 의원(사전신고 없이 반국가단체 조총련 주최 행사 참석)사건을 계기로 남북교류협력의 엄정한 기준을 마련
- 추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반국가적 행위 근절

■ 북한인권 증진 및 북한이탈주민 보호 강화

-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의 부당성을 국내·외 적극 호소하며, 야당에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실질적 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출범 협조 촉구
- 탈북민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 마련(취·창업 및 의료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민주평통자문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의무 강화

- 기관장을 비롯한 구성원 모두 정치적 편중 오해가 없도록 제도 보완 및 의무준수 권고

재외동포청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조직정비 점검

I 주요 내용 및 성과

■ 재외동포청 설립 진행경과

- 2023.2.27.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23.4.21. 재외동포청 설립기획단 발족
 - 2023.6.5. 재외동포청 출범
 - 재외동포재단 해산,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
- ※ 750만 재외동포의 숙원이며 국민의힘 대선공약 및 현 정부 국정과제인 '재외동포청' 설립과 함께 동포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고 법적근거가 되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 기본목표

-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발전을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과 인류의 공동번영에 기여
 -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와 국민의 지지 확보

■ 기구현황

- 청장, 차장, 대변인, 3국(기획조정관실, 재외동포정책국, 교류협력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12개과 등

■ 예산규모

- '재외동포청' 출범 후 올해 첫 예산안 (정부안 : 1,055억원)
 -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파악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이 반영되도록 점검

I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지속적인 조직정비 현황 점검

- 재외동포의 편익 증진을 위한 업무 체계 확립
 - 지역별, 세대별 동포사회 권익신장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 및 집행
 - 전 세계 재외동포 네트워크

■ 적정규모의 예산 반영

- 국회 심의과정에서 필요시 증액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I 주요 내용 및 성과

■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과 기반 조성

- 국민의힘 대선공약이자 현 정부 국정과제인 공적개발원조(ODA) 증대 목표를 조기에 달성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과 기반을 조성
- 2024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관련 예산 확충
 - 모든 부처를 포괄하는 정부 예산안은 23년도 4조 5천억원 규모에서 24년도 6조 5천억원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외교부는 23년도 2조 68억원에서 24년도 2조 8,964억원 규모로 증가

※ 외교부 예산 가운데 ODA 비중은 59.8% → 67.5% 규모로 증대

■ 주요사업

- 국가별 협력
 -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원조,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중동CIS(독립국가연합)지역 국가원조 등
- 글로벌 프로그램
 -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사업, 글로벌 연수, 국제기구협력사업,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 등
- 전략적 협력강화, 민간협력사업, 인도적 지원, 국제질병퇴치기금 등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유지

-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증대한다는 국민의힘 대선공약 및 현 정부 국정과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현 정부 정상외교 성과에 대한 정당한 평가

I 주요 내용 및 성과

■ 한일 외교 성과

- 한일 정상간 방문 계기로 셔틀외교 재개 합의 및 경제협력 기반 확대
- 일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규제 철폐, 한국 WTO제소 철회, 화이트리스트 복귀, GSOMIA 정상화
- 양국 경제협약체 복원, 통화 스왑 재개, 양국 국민의 인적교류 회복

■ 한미 외교 성과

- 대통령의 국빈 방미 계기로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청정에너지 등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 구축과 기업 투자환경 조성에 합의하여 국민경제와 직결되는 경제안보 협력을 심화
 - 반도체, 수소,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미국 주요 8개 기업으로부터 총 59억불 규모의 투자 유치
 - 사이버, 우주, 원전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공동 대응 및 협력 강화

■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

-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
 - 경제규범, 첨단기술, 기후변화, 비확산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
-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통해 공동의 비전을 담은 구체적인 협의회체 창설
 - 확장억제 및 연합훈련, 경제협력, 경제안보 등 후속조치 이행

■ 중동 경제외교 성과

- 10월 우리 정상으로선 처음으로 사우디, 카타르 국빈 방문
 - 사우디와 작년 11월 체결한 290억불 규모 MOU·계약에 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총 156억불 이상의 수출·수주에 대한 신규 MOU·계약 체결
 - 카타르와 39억불 규모의 LNG 운반선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스마트팜, 첨단 건설 기술, 방산 분야 등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정상외교를 통해 도출된 성과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후속조치 점검과 지원
 - 국민과 기업이 안정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력충돌 관련 우리 국민과 인근 지역 UN평화유지군 파병부대 안전대책 강구

I 주요 내용 및 성과

■ 우리 국민 안전 대피 현황

- 10.10(화) : 이스라엘 단기 체류자 192명 대한항공을 통해 귀국, 50여명은 육로를 통해 요르단 이동
- 10.14(토) : 우리 국민과 가족 163명이 우리 정부가 제공한 군 수송기로 귀국
- 10.19(목) : 여행경보단계를 3단계(출국권고)로 격상하고 현지 체류 인원 중 비필수인원의 출국(육로 또는 외국항공사 이용) 권고
- 10.21(토) : 우리 국민과 가족 19명이 일본 수송기 이용해 동경 도착

■ 우리 국민 안전 확보 조치

- 현지 비상연락망 가동, 주기적인 안전확인, 안전관련 공지사항 전파
 - 급격한 상황 악화 대비 ▲집결계획 ▲대피계획 등 수립

■ 레바논 주둔 UN평화유지군 한국 파병부대 안전 점검

-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 세력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력충돌에 참여할 것이 우려되는 가운데 레바논에 주둔하고 있는 UN평화유지군 한국 파병부대(동명부대)와 헤즈볼라 근거지 거리가 2.7km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안전대책 강화를 촉구
- 정부는 외교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주레바논대사관, 동명부대간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며 상황 변화 및 우리 부대의 안전을 수시로 점검
 - 방호태세 완비한 가운데 기타 활동은 중단하고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사령부가 부여한 작전활동에 한하여 임무 수행
 - 발생 가능한 위협 유형 분석 및 대응책 강구
 - 유사시 인접 지역 부대와 상호 지원체계 구축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현지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안전 및 대응 상황 수시 점검

- 현지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및 대비

야당의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대한 허구성 지적

I 주요 내용 및 성과

■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대한 허구성 지적

- 민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국제협약에서 금지하는 ‘해양 투기’라고 단정짓고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중재 신청을 하고 시비여부를 다퉈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치쟁점화를 시도
 - 하지만,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는 1999년 연례회의에서 해양 투기에 관하여 IAEA(국제 원자력기구)에게 지침과 권고를 요청하고 수용해 오고 있는데, 이미 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사실상 사전 도출된 결론을 위해 다퉈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설득력이 결여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

■ 정부의 원칙과 대응

- 정부는 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고 ② 오염수가 과학적·객관적 관점에서 안전해야 하며 ③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는 3대 원칙을 설정
- IAEA 및 일본측과 협의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이중·삼중으로 확인하는 상호소통 체제를 구축
 - 한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장기적, 체계적 모니터링 유지하고 점검
 - 한국과 일본은 △관련 규제당국간 소통채널 △외교당국간 소통채널 등 이중으로 핫라인을 구축해 긴급 또는 이상 상황 발생 시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고 대처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원칙과 과학에 입각해 대응한다는 기조를 지속

- 정당한 국민적 우려에 대해서는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일본에 충분한 설명과 검증을 요구
- 가짜뉴스와 거짓정보는 바로잡아 국민의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
- 정치공세가 목적인 허위와 과장된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응

[남북관계 정상화]

우리 안보태세를 제약하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촉구

I 주요 내용 및 성과

■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 상황을 볼 때, 유사시 북한이 ‘하마스식’의 기습 공격 전술을 대남 공격에 활용할 가능성

- 휴전선 일대에서 우리의 감시정찰 자산 활용을 제약하는 9.19 군사합의는 장사정포 등 북한 도발에 대비하는 데 차질을 초래

■ 사실상 사문화된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통한 안보태세 재건을 강조

- 북한이 군사합의를 지속해서 위반하고, 핵무력을 법제화하는 등 노골적으로 대남 위협을 가하는 상황
- 야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말하면서도, 근본적인 안보 위협인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책임 묻기를 외면
- 북한의 일방적인 위반으로 사실상 무력화된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통해 우리 안보태세를 튼튼히 재건해야 함을 강조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검토를 촉구하고 실질적 개선을 위해 정부와 당이 적극 추진

[남북관계 정상화]

전정부가 졸속으로 개정한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금지조항의 위헌성 지적

I 주요 내용 및 성과

■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는 위헌임을 지적

- 김영정의 전단 살포 저지 요구 이후, 유엔 등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법」을 졸속으로 개정
-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북한 주민에게는 북한 체제 실상에 대한 알 권리를 박탈하는 ‘대북전단금지 조항’의 위법성·비민주성을 지적
 - ※ 윤석열 정부는 '22.11월 헌법재판소에 위헌 의견을 제출
- 결국, 헌법재판소는 우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23.9.26.)

■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조속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을 요구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남북관계발전법」의 조속한 개정 절차 추진

- ※ △지성호 의원('20.12.29.) 대표발의안 외통위 계류
- △윤상현 의원('23.10.6.) 대표발의안 외통위 소위 회부
- △권영세 의원('23.10.20.) 대표발의안 외통위 소위 회부

[남북관계 정상화]

사전 신고 없는 반국가단체 접촉 실태를 지적하고 교류협력질서를 확립할 것을 촉구

I 주요 내용 및 성과

■ 국회의원 신분으로, 윤미향 의원이 통일부에 접촉신고도 하지 않은 채 조총련과 접촉한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신속하고 면밀히 조사할 것을 강조

■ 야당 정치 공세에 대응, 국감의 쟁점화를 차단하고 남북교류협력 질서를 확립할 것을 촉구

- 사전 접촉신고 없는 조총련 주최 행사 참석을 두고 야당은 “색깔론” 등 정치적 공방으로 쟁점화 유도
- 철저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윤미향 의원이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했음을 증명
-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남북교류협력 질서를 확립할 것을 강조
※ △통일부 훈령,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정(9.8.)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전력자에 대한 접촉 신고 수리 제한 등을 담은 정부개정안 마련 등 법·제도 개선 추진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윤미향 의원의 조총련 주최 행사 참석 관련 면밀한 조사 및 위법사항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촉구

- 수사 진행 상황을 보아가며 법적·행정적 조치를 확인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반국가적 행위 근절

[북한주민의 보편적 인권 증진] 재중 탈북민 강제복송 대응 조치를 촉구

I 주요 내용 및 성과

■ 재중 탈북민 복송조치 관련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촉구

- 다수의 재중 탈북민이 복송된 것 사실로 확인
- 판문점 통해 탈북민을 복송했던 전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탈북민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 복송은 안 된다는 입장임을 분명하게 부각
 - ※ 탈북어민 강제복송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정부발의) 추진: △범죄자 수사의뢰 근거 △신변보호 기간의 탄력적 운영 근거 등 외통위(법안소위(9.19.)), 전체회의(9.21.)) 합의 반영하여 법사위 제출
- 통일부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측에 엄중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강제복송 조치는 부당하다는 정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
 - ※ △통일부 대변인 온브리핑(10.13.) △통일부장관, 美 북한인권특사 면담(10.17.)
△통일부장관-연합뉴스 인터뷰(10.18.) △美 인권재단(HRF) 면담(10.23.)
△콜린 크록스 주한 영국대사 접견(10.25.) 등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재중 탈북민 강제복송에 적극 대응하고, 추가 강제복송 대비 방안 강구

- 국회 차원에서 재중 탈북민 강제복송 중단을 위한 실질적 방안 논의

■ 「북한이탈주민법」의 조속한 개정 절차 추진

- △태영호 의원(22.12.27.)
- △정부안(23.7.12.)

[북한주민의 보편적 인권 증진]

북한인권재단의 출범 지연 지적 및 조속한 출범 촉구

I 주요 내용 및 성과

- 「북한인권법」 시행 7년이 지나도록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방해하는 야당의 행태를 질책하고, 북한 주민의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증진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함을 강조

※ 정부차원, △'16~'23년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 요청 공문 총12회 발송 △통일부장관 추천 재단 이사 2명 인선 발표('22.9월) △'21~'23년 북한인권재단 출범 관련 예산 4.75억원 편성(연내 출범시 예비비 편성) 등 추진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민주당에 초당적 협조를 지속 촉구

※ 여당 추천 인사 5인, 정부 추천 인사 2인 기 제출

* 북한인권법 제12조(재단 임원의 구성) ① 재단에는 …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는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 국회가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 …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출출하고 두터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대안 제시

I 주요 내용 및 성과

■ 일반 국민에 비해 국내 취·창업에 어려움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역량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 대책 강구 주문

- 최근 탈북민 입국인원 감소 상황을 고려, 하나원 직업교육관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도 제시
 - ※ 통일부 업무보고, △일자리 쏠 준비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일자리 성공 패키지' 신규사업 실시(258명 구직 지원) △창업 관련 경영개선자금 지원 확대(최대 600만원→900만원)
 - △전문직업훈련 과정(12개) △마음명상(14회)·힐링프로그램(18회) △찾아가는 건강검진(13회)
 - △청소년 학력보충 특별반(9회) 등 운영

■ 전 정부에서 공론화되지 못한 탈북민 피폭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면밀히 조사하도록 요구

-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으로 지하수를 통한 방사능 유출·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탈북민 피폭 검사 결과가 핵실험과의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한 데 반해, 윤석열 정부는 피폭 우려가 있는 탈북민 대상 연내 전수 검사를 계획
-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한 탈북민이 건강상 이상을 겪는 문제가 없도록, 탈북민 피폭 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필요시 치료지원 등 후속조치도 요청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북한이탈주민 취·창업 지원 등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 확인

■ 북한이탈주민 피폭 검사 확대 상황 점검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정치적 중립의무 정립] 기관 운영 시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

Ⅰ 주요 내용 및 성과

■ 사무처장 발언, 자문위원 구성 관련 정치적 중립 유의

- 사무처장 공개 발언 및 SNS 게시물 등 정치적 중립 논란 지적 수용
- 자문위원 위촉, 정책건의보고서 등 관련 정치적 편중 오해가 없도록 기관 운영제도 점검

Ⅰ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정치적 중립 유지 방안 실시

- 자문위원 위촉 및 기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 유지를 위한 노력 지속
 - ▲다양한 경로를 통한 각계각층의 인사 위촉, ▲지방의회의원 및 정당 당협위원장의 부의장·협의회장 임명 제한, ▲자문위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요청 안내 등



제2부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I 주요 내용

■ 문재인 정부가 졸속 체결한 9·19 남북 군사합의 문제점 지적

- 9·19 군사합의로 우리 군의 대북감시·정찰역량에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어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냄
-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감시정찰 공백으로 기습공격에 성공하고 하마스 전력보다 더 위력적인 북한의 장사정포 300여문이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도 북의 기습공격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심각한 상황
- 2020년 GP 총격, 2022년 12월 무인기 침투 등 북한은 이미 17차례 걸친 도발로 군사합의 위반을 넘어 9·19 군사합의를 사문화시킴

■ 홍범도 장군 흉상이전, 수해복구 순직 해병 조사 문제 등을 이용한 야당의 국정감사 정치·이념 공세의 장으로 변질시도에 대해 홍상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졸속 정책의 산물임을 밝혀내며 정책 국감으로 차분히 대응함

- 홍범도 장군 흉상의 육군사관학교 교내에서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야당은 가짜뉴스 생산, 친일 프레임 덮어씌우기로 이념·역사전쟁으로 확대시도 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육사 졸업식 행사를 위해 졸속으로 흉상을 제작·전시한 점을 밝혀내고, 홍범도 장군의 행적과 역사적 사실 등을 설명하고 공산주의자들이 자유대한민국을 침범했던 것에 대해 육군사관학교에 맞지 않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설명함
- 수해복구 순직 해병 조사관련 수사외압설, 국정조사실시 등 야당의 정치쟁점화 시도에 대해 해병대 사령관과 前수사단장간 소통과정의 문제, 민간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임을 지적하고 정치 쟁점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

[문재인 정부 실정]

문재인 정부의 9·19 군사합의 문제점 비판

I 주요 내용 및 성과

■ 문재인 정부 시절 졸속 체결한 9·19 남북 군사합의 문제점 지적

- 9·19 군사합의로 우리 군의 대북감시·정찰역량에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어 막대한 안보 불안 야기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냄
- 2020년 GP 총격, 2022년 12월 무인기 침투 등 북한은 이미 17차례 걸친 군사합의 위반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 신뢰가 깨어진 상황
-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감시정찰 공백으로 기습공격에 성공했으며 북한의 장사정포 300여문이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 해병대 내륙지역 훈련으로 연간 2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 지출 등 9.19 졸속 군사합의로 불필요한 훈련비용 증가로 인한 혈세 낭비 사례 제시
- 군사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해 완충구역 내 110여회의 포사격 위반, 3천4백여회의 포신 덮개 설치·포문 폐쇄 조치 위반 등 서북도서 일대 3천6백여건의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 사실 등을 추가로 이끌어냄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9·19 군사합의 재검토 및 북한의 기습공격에 대한 군의 대응책 점검

- 휴전선 배치된 북 장사정포 1,000여문은 하마스 로켓 공격의 몇 배에 달하는 위력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 안보불안은 이미 매우 불안한 수준임에도 9·19 합의로 군의 정찰기능이 공백인 위기 상황에 대한 지속적 환기
- 9·19 합의 효력 정지 결정하기 위한 시점, 조건 등의 면밀한 검토 필요
- 9·19 군사합의는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 정지시 국회 동의가 필요 없으며 국무회의 의결로 가능



제2부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I 주요 내용

■ 선관위의 해킹보안 대책 및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문제 대책 촉구

- 인사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해킹 관련 국정원 등에 의한 합동 보안컨설팅 관철
-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출석시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와 함께 ‘총선이 마무리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질 것’이라는 답변을 이끌.
- 보안컨설팅과 관련, 민주당이 제기한 국정원에 의한 해킹 가능성 의혹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 선관위 측으로부터 사실과 다르다는 답변을 얻어 냄.

■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더 이상의 정쟁에서 벗어나 재발방지에 힘써줄 것을 주문

- 야당은 행안부장관 탄핵과 같은 정치 공방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질타
- 사법처리가 일단락 된 만큼 재발방지대책에 힘써줄 것을 당부
- 5개월 반동안 행안부장관을 탄핵함으로써 중대한 업무공백이 발생, 오송참사와 같은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지적

■ 보조금 부정수급 개선 촉구와 지방재정 악화 대책 마련 촉구

- 보조금 유용, 좌편향성 등이 심각한 바, 재발방지와 보조금 환수를 촉구
- 불법시위 이력이 있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토록 지침개정 촉구
- 지난 정부의 과도한 현금성 지원, 공무원 조직 및 인원 확대, 무리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 부적절한 자원 사용에 대해 대책 마련 요구

■ 이상동기범죄 대책과 청소년 마약 및 불법 집회·시위 등 엄정한 법 집행 촉구

- 현장 경찰관들이 법 집행 시 적극 대처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및 각 경찰서의 치안 여건과 환경을 고려, 현장 인력 재배치 검토 강조
- 청소년 마약 5년 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와 온라인·SNS에서 구매하기 쉬워 사전 예방 교육 및 쉽게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 마련 촉구
- 경찰의 민노총 집회 미온적 대응 질타 및 불법 집회·시위 엄중 대응 촉구

[선관위 해킹 및 특혜채용]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부실로 인한 해킹 가능성 확인 및 특혜채용 문제 개선 필요성 인정

I 주요 내용 및 성과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출석, 보안시스템 부실 및 채용 비리 확인하고 대책 촉구

- 노태약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의 고위직 포함 특혜채용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사과하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조직 혁신과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국민의 신뢰 회복하겠다고 밝힘. 그리고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해 전문 인사를 임용하고 다수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말함.
 - 노태약 위원장은 비상임인 선관위원장의 한계와 함께 제도개선의 필요성 인정하고, “총선이 끝나고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힘.
- 선관위의 미흡한 보안관리 체계 관련,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선관위 투·개표 관리 시스템에 복한 등이 언제든지 침투할 수 있는 상태라며 선관위가 해킹에 취약한 점을 인정함.
-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킹과 선거결과 조작 가능성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선거관리에 한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
 - 반면 민주당에서는 해킹이 선거결과 조작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제기와 함께 이번 보안 점검 프로그램을 통해 국정원이 향후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음모론 제기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선관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의 친인척 임용 시, 신고 의무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전봉민 대표발의) 소위 계류

■ 선관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 선관위가 약속한 개선사항 이행 여부 모니터링
- 당 공정선거 제도개선 특위(위원장 김상훈) 발족하여 제도적 보완책 강구

[이재명 대표 부인 비리]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 확인

Ⅰ 주요 내용 및 성과

■ 김동연 지사로부터 법인카드 사적유용 감사결과 확인 및 보강감사 요구

- 경기도청 국감과정에서 김동연 지사로부터 “‘법인카드 유용’에 대한 경기도청 감사실 조사 결과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 의심되며,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답변을 받아냄.
-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례는 국고 손실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경기도가 자체적인 보강감사를 실시하도록 행안부에서 요구토록 하고, 행안부에 지자체 감사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도 요구

Ⅰ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김혜경 씨 수사 진행상황 및 지자체 감사제도 개선 사항 모니터링

- 경찰의 수사 진행상황 모니터링
- 지자체 자체 감사제도 개선상황(행안부) 지속 점검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유사 재난 재발방지에 힘써
줄 것을 주문

I 주요 내용 및 성과

■ 이태원 참사관련 정치공세 자제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 지속적인 행안부장관 및 경찰청장 사퇴요구에 대하여, 정치권은 행안부장관 탄핵과 같은 정치 공방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사법처리가 일단락된 만큼 재발방지대책과 국민안전확보에 중점을 둘 것을 주문
- 5개월 반 동안 국가의 재난안전과 내치를 담당하는 행안부장관을 정치적인 이유로 탄핵함으로써 중대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더 이상의 정치공세 자제를 촉구.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후속 종합대책 진행상황 점검 및 관련법 조속 처리

- 범부처 합동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지속 점검
- 국회에 계류 중인 재난안전법 등 이태원 참사 관련법 조속 처리

[보조금 부정수급]

지자체 보조금 부정수급사례에 대한 개선 촉구

Ⅰ 주요 내용 및 성과

■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 및 불법시위단체 보조금 지급 중단 요구

- 지자체 보조금 관련 보조금 빼돌리기, 보조금 유용, 좌편향성 등이 심각하므로 재발방지책 마련과 함께 보조금 환수를 촉구
- 불법시위 이력이 있는 단체에 대해 문정부 이전에는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 단체였으나 2017년 국가인권위 문제제기 이후 지침을 개정하여 이들 단체에 보조금 지급 중이므로 개선을 요구

Ⅰ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 및 지침 개정 상황 모니터링

- 부정수급 보조금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환수현황 점검
- 불법시위 이력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지 지침 개정사항 모니터링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지방보조금법 연내 개정 추진

[지방재정 악화]

교부세 등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대책 마련 촉구

I 주요 내용 및 성과

■ 지방재정 악화 및 지난 정부의 부적절한 자원 사용에 대한 대책 촉구

- 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소,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부동산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에 따른 특단의 대책 촉구
- 지방재정 부족원인으로 지난 문정부의 민주당소속 지자체장의 과도한 현금성 지원, 공무원 조직 및 인원 확대, 무리한 신재생 에너지사업과 상생형 일자리사업 등 부적절한 자원 사용도 중요한 원인인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지방재정 악화 관련 정부 대책 추진상황 점검

- 정부의 지방재정 악화 대책 진행상황 점검
- 지난 정부의 과도한 현금살포 등 부적절한 자원 사용 개선사항 지속 점검

[이상동기 범죄 대응 경찰 조직개편]

이상동기 범죄 정부 대책 및 현장 치안 강화 조직개편

I 주요 내용 및 성과

■ 치안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현장 경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및 각 경찰서 조직 진단을 통해 인력 재배치 검토 필요성 강조

- 현장 경찰관들이 법 집행을 주저하는 이유 중 민·형사 소송에 대한 책임 부담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에 어려움 발생. 이에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촉구
- 조직개편 관련하여 지구대·파출소에 인력 보강 요청 및 업무 과부하로 기피 부서에 있는 형사들을 순찰 업무에 투입은 시대의 역행과 현장 요구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 지적
- 자율방범대를 포함한 협력 치안 단체가 치안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촉구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및 강력범죄 대처에 따른 조직개편

- 현장 경찰 대응능력 강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추진
-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본부의 행정·관리 인력 2900여 명을 줄여 기동순찰대 등 현장 치안인력으로 재배치
- 올 연말까지 전국 954개 중 576개 ‘치안센터 폐지’, 근무자 377명 현장 재배치

[청소년 마약 근절 대책 마련 촉구]

청소년 마약 정부 차원 단속 강화 및 청소년 대상 사전 예방 교육 필요성 강조

I 주요 내용 및 성과

■ 청소년 마약이 5년 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 및 온라인·SNS 매체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는 문제점 지적

- ‘공부잘하는 약’, ‘살빠지는 약(다이어트 약)’ 등이 온라인·SNS를 통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점을 지적
- 특히 ‘의료용 마약’은 접근하기 쉬워 경찰청이 사이버상에서 차단을 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추궁
- 청소년 마약에 있어 신종 마약 및 마약 대체제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단속 강화 및 청소년 대상 사전 예방 교육과 온라인 매체에서 쉽게 구입하지 못하도록 대책 마련 촉구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청소년 포함 대국민 마약 예방교육 강화

- 경찰의 단속·수사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포함한 대국민 예방 및 교육 확대 실행에 대한 관심과 점검 필요

[불법 집회·시위 개선 방안 마련]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엄중 대응 촉구

I 주요 내용 및 성과

■ 집회·시위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해마다 검거 인원도 지속적으로 증가. 이에 대한 경찰의 대책 마련 촉구

- 집회·시위가 무법천지로 변했을때 경찰이 강제 해산 조치 등 시위진압에 대해 경찰청장의 확실한 특단의 조치인 엄정한 법 집행 필요성 강조
-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경찰 간부의 대법원 유죄판결에 대해서 경찰의 공권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정당한 법을 집행한 경찰관도 보호 받아야 마땅함을 주장
- 민주노총 1박 2일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은 작은 법을 어겨도 책임을 묻는데 경찰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질타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 추진 및 엄정한 법 집행 촉구

- 심야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밤 12시에서 새벽 6시까지 규정, 장소·시간대별 소음 기준 5~10dB로 소음 기준 강화
- 심야 집회 시위로 인한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집회 소음 규제 실효성 제고 및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치는 것에 대한 엄정 대응

제2부

상임위원 별 평가 및
후속조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I 주요 내용

■ 문재인 정부의 각종 지표 조작, 불공정 카르텔 의혹, 맹목적 대북 지원에 대한 면밀한 실태 파악, 구체적 지적을 통해 총체적 감사 진행

① 문재인 정부의 각종 지표 조작 실태 지적, 감사 또는 고발 조치 요구

- 문재인 정부의 신문 열독률·정부광고 지표, 영화 관객 수 조작 실태 지적

② 문재인 정부의 카르텔·불공정 의혹 관련 강력 문제 제기

- 문재인 정부 콘텐츠진흥원의 일감 몰아주기 카르텔 의혹 제기
- 문재인 정부의 특혜성 사업 '광화시대'의 예산 낭비 실태 지적
- 문체부 소속 예술교육 기관의 불공정 실태 지적, 특별 관리·감독 촉구

③ 문재인 정부의 맹목적 '문지마 대북 지원' 실태 강력 비판

- 문재인 정부 문화예술 기관의 맹목적 북한 옹호·대북 지원 실태 지적

④ 그 외 중점 지적 사항

- 가짜뉴스 실태 지적, 근절 방안 마련 촉구
- 김포 장릉 사태로 인한 세계문화유산 박탈 위기 지적, 문재인 정부 책임론 부각
- 문재인 정부 단기 일자리 창출 사업의 불공정성, 방만 운영 지적
- 언론진흥재단의 특정 개인·언론 매체 특혜 지원 실태 지적
- 그랜드코리아레저의 무분별한 상품 투자로 인한 막대한 손실 실태 지적
- 문재인 정부 예술기관 단체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 운영 실태 및 예산 낭비 지적

[문재인 정부 조작]

문재인 정부의 신문 열독률·영화 관객수 조작 실태 지적

I 주요 내용 및 성과

■ 문재인 정부의 신문 열독률·정부광고 지표 조작 의혹 제기

- 문재인 정부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에서 추진한 '정부광고 제도 개편안(21.12)'의 예시안 적용·제시로 인해 신문사 순위 변경에 대해 문제 제기
- 언론재단 미디어연구센터에서 열독률 조사 결과의 로데이터 가공 프로그램과 가중치 부여의 공식과 산출 방식 등에 대한 조사 필요성 제기
- 정부광고 지표 열독률 구간화를 통해 실제 열독률의 상당한 차이(약 6배)에도 동일 구간의 신문사는 열독률의 점수와 순위가 동일하게 적용됨을 지적
- 열독률 외 '사회적 책임' 반영 지표로 인한 신문사 순위 변경 지적

■ 문재인 정부의 '그대가 조국' 등 영화 관객수 조작 관련 문제 제기

- 경찰 수사 결과 영화 '그대가 조국'의 박스 오피스 순위 조작 사실 지적
- '그대가 조국'의 심야시간 전석 매진 70%가 영화발전기금 부과 면제 상영관에 몰려 있음을 지적, '관객수 부풀리기' 뿐 아니라 고의로 영발기금 회피 의혹 제기
- 상영관과 제작사, 배급사 공모에 대한 고발 조치 필요성 제기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문재인 정부의 신문 열독률·정부광고 지표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 진행중, 수사 결과에 따른 후속 대응 필요

■ 문재인 정부의 영화 관객수 조작에 대한 추후 수사 상황 지속 점검 및 대응, 영화 발전기금의 고의적 부과 면제 의혹에 대한 감사 또는 고발 조치 필요

[문재인 정부 카르텔 의혹]

문재인 정부의 카르텔·불공정 의혹 관련 강력 문제 제기

I 주요 내용 및 성과

■ 문재인 정부 콘텐츠진흥원의 일감 몰아주기 카르텔 의혹 제기

- 콘텐츠진흥원 퇴직 사업자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실태 지적
- 콘진원 퇴직 사업자 ‘피아리랩스’ 위탁용역 현황 제시,
문재인 정부 노바운더리에 하청을 준 조직적 차원의 비위 실태 지적
- 일감 몰아주기 카르텔 중대 범죄임에도 내부 직원 결탁 의혹 제기, 콘진원 자체 감사 미흡 지적,
감사원 감사 청구 요구
-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위탁용역 사업 관련 일체 자료 요구

■ 문재인 정부의 특혜성 면피 사업 ‘광화시대’의 예산 낭비 실태 지적

-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전 광화문 대통령 시대 공표 했으나 약속 지키지 않고 ‘면피성 450억원
광화시대’ 사업 추진
- 연구용역도 없이 추진된 특혜성 ‘광화시대’ 사업은 수차례 사업성 저조 평가 받고, 현재 사업의
상당수 폐지·미운영
- 심각한 부실 집행 사업인 ‘광화시대’에 대한 감사 요구

■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한 특별 관리·감독 조치 촉구

- 한국예술종합학교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아 왔음을 지적
- 공문서 위조, 강사 부정 채용 논란, 시험 문제 사전 유출 등 문제 지속 발생 지적, 학교의 관리·감독
소홀 지적
- 예술 특화 학교는 면접과 실기로 당락이 결정됨에 따라 부정 개입 요소에 대한 각별한 관리·감독
방안 필요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콘텐츠진흥원의 일감몰아주기 카르텔 의혹, 예산 낭비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문재인 정부 맹목적 대북 지원]

문재인 정부의 맹목적 '물지마 대북 지원' 실태 지적

I 주요 내용 및 성과

■ 문재인 정부 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의 반국가단체에 국비 보조 실태 지적

- 문재인 정부 문화예술위원회의 조총련 산하 단체에 4년간 총 1억 2150만원의 국민 혈세 지원 실태 지적
- 문재인 정부 영화진흥위원회, 북한과 조총련 산하 옹호 영화 예산 지원 실태 비판
- 통일부의 승인 없이 반국가단체에 보조금 직접 지원 실태 비판
- '이적 단체나 반국가 단체 지원 내역' 여부에 대한 질의에 '해당 사항 없다'고 답한 문체부와 해당 기관에 대해 실태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 질타

■ 문재인 정부 한국관광공사와 그랜드코리아레저의 '물지마 대북지원' 실태 비판

- 안민석 의원에게 최순실을 최초 제보한 '박창일 위원장'의 '평화삼천'이라는 민간 비영리단체의 대북 지원 요청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는 그랜드코리아레저에 공동 사업 추진 요청
- '평화삼천'이 5년간 북으로 보낸 물자 중 92%에 해당하는 25억원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을 통해 조달
- 문재인 정부의 관련 대북 지원사업의 진행 경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 환수 조치 필요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문재인 정부의 맹목적 대북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제2부

상임위원 별 평가 및
후속조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I 주요 내용

■ 이번 농해수위 국정감사는 ‘민생국감’, ‘책임국감’, ‘희망국감’이라는 3대 기조에 맞춰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민생정책을 제시하여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조리와 비리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두었음.

■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민생국감’

- 집중호우·산사태 등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 발생시 농가의 조속한 복구 지원 및 선제적 농어민 보호 대책 수립 촉구,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대규모 산불에 대한 노후헬기 관리·임도 확보·지원인력 확대 등 산림재난 관련 종합대책 마련,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소나무재선충 등 각종 병해충 철저 대비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부분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 마련 촉구
-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경사연 보고서 비공개 결정 과정에 정부개입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고 그간 정부가 가짜뉴스에 대해 과학적 팩트에 근거, 효과적으로 대응한 부분 적극 강조

■ 문재인 정부 부조리·비리 지적한 ‘책임국감’

- 작년 국감에 이어 한국마사회 경영진의 황제승마, 해임 회피 꿈수 고액 경영평가 컨설팅, 온라인 앱마권 외부거래 허술한 관리 및 직원들의 불법 마권 구입 등 총체적 방만운영에 대한 회장의 책임있는 결단 강하게 촉구
- 문재인 정부 시절 제기된 산림헬기 비인가 부품사용 논란, 정부 연구소 직원의 군사기밀 유출 등 당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강하게 질타하고 철저한 재조사 촉구

■ 미래성장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희망국감’

- 농정지표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 필요성 강조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래성장산업 재편이 필수적, 이를 위한 R&D 예산 조정 불가피 강조
- 야당의 각종 선심성 정책은 대한민국 미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으로 시대변화 흐름에 맞춰 낙후된 농어촌 환경 개선 및 농어업 발전을 위한 생산성 향상 등 근본적인 대안 마련 촉구

[국민 삶을 위한 '민생국감']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난재해 관련 종합적 대책 마련 촉구

I 주요 내용 및 성과

■ 폭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지역 신속 복구 및 종합적 대응책 마련 촉구

- 매년 산사태로 인한 주민 피해가 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산사태 취약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 특히,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조차 살고있는 지역이 산사태 취약지역인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홍보도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각 지자체가 모든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

■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대규모 산불에 대한 철저한 대비 촉구

- 노후화된 산림헬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후기종 철저히 관리하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부품 수급 차질로 인해 산불발생시 가용 헬기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차 헬기를 확대하고 강풍에도 이륙이 가능한 고정익 관련 국방부와 협의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 촉구

■ 농작물 피해 관련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 촉구

-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 농가의 조속한 복구 지원 및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확대 등 가입률 제고 방안 마련 촉구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산사태 취약지역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 일원화 추진 및 산림재난별 관리체계 통합 및 산림재난 방지 강화 등을 반영한 산림재난방지법 조속 통과

■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피해 보상범위 현실화하기 위한 점진적 예산 확대 편성

[국민 삶을 위한 '민생국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국민 불안해소 대책
마련 촉구

I 주요 내용 및 성과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과학적 팩트에 근거한 정부대응 및 국민 불안해소 대책
마련 당부,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필요성 강조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과학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방사능 물질이 국내 해역으로 유입되지 않았고 방류 이후에도 우리나라 해역에 미친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류 전부터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지극하는 가짜뉴스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오히려 어렵게 만든 야당 행태 비판. 국민 불안 해소 위해 반드시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대응 및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방사능 검사 확대 및 철저한 수산물 안전 대책 마련 촉구

■ 민주당의 경사연 보고서 비공개 정부개입 의혹 가짜뉴스 효과적으로 방어

- 경제사회인문연구회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기초연구 보고서' 비공개 결정 과정 관련 여야간 공방.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보고서 내용 중 정치적 의도를 갖고 비공개 결정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국책연구기관에서 작성한 일반적 종합보고서일 뿐 해수부가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 자체가 없고 보고서 일부 내용만을 발췌하여 문제삼는 것이야말로 과도한 의혹 제기라는 점을 질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해소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가짜뉴스에 대한 실시간 대응 및 국민 안전 최우선 기조에 따른 정부 조치(방사능
검사 확대, 지속적 소비촉진 행사 추진 등) 대국민 적극 홍보 필요성 강조

[부조리·비리 지적 '책임국감']

한국마사회 총체적 방만운영 및 마사회장 무능 질타

I 주요 내용 및 성과

■ 한국마사회 총체적 방만운영 및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무능 질타

- 현 회장이 적폐청산위원장, 상임감사 시절 마사회의 경영평가가 D등급 2회, E등급 1회로 매우 저조하였음에도 이에 책임있는 경영진 연임을 강행하였고 황제승마로 인한 국민혈세 낭비, 불법 시설 경마행위 단속 업무 담당 직원이 불법으로 마권 구입한 것 등 마사회의 총체적 방만운영 지적

■ 고액의 경영평가 컨설팅으로 경영평가 상승시켜 기관장 해임 회피 꿈수 비판

- 민주당은 작년 경영평가를 B등급으로 상승시킨 마사회장을 적극 두둔하였으나, ▲22년 경주마가 뒤바뀌고 황제승마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2단계나 상승한 것은 수천만원대의 컨설팅 예산을 지출한 결과라는 점 ▲22년 경영평가 세부지표 중 회장 개인 관련된 지표는 모두 낙제점을 받은 것 등을 지적하며 회장으로서 책임있는 결단과 개선 노력이 매우 부족함을 질타

■ 온라인 앱 마권 외부거래 등 허술한 관리 지적

- 회장이 상임감사 시절 도입한 사업장 내부에서만 이용 가능한 온라인 앱 마권 구매 서비스가 외부에서도 제한없이 구매 가능한 제도적 허점 지적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마사회 윤리경영계획서 등 22년 경영평가 세부지표 평가 전반에 대한 재점검

■ 마사회의 총체적 방만 운영에 대한 경영진 사퇴 및 개선 프로그램 마련 촉구

[미래를 위한 '희망국감']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당부

I 주요 내용 및 성과

■ 국가경쟁력 높이고 미래성장산업 재편을 위한 R&D 예산 삭감 필요성 강조

- 현재 R&D 예산 삭감은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지출로 인해 건전재정 기조로 조정하는 과정이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오히려 예산이 늘어났음을 강조
- 기관간 중복되는 업무조정이나 사업 재편을 통해 경쟁력있는 사업과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전통적 농어업에서 벗어나 생산성 향상되어 소멸위기에 놓인 농어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R&D 예산 조정 반드시 필요

■ 야권의 가짜뉴스 및 선심성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 민주당의 '후쿠시마 농산물은 사줘도 우리 농민쌀은 못 사주나' 식의 가짜뉴스에 대한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 지적
- 야당이 재추진하려는 제2양곡법 등 단순 선심성 정책이 아닌 선제적 수급대책을 통한 쌀가격 안정, 낙후된 농어촌 환경 개선 및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가 생산성 향상, 식량안보를 높이기 위한 노력 등 근본적인 대안 마련 촉구

■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각종 정책 추진사항 점검 및 정부의 신속한 추진 당부

- 농업분야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그린바이오 산업, 푸드테크 산업,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등 전략적인 미래산업 육성 정책 추진 당부
- 해수분야 해양모빌리티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 마련과 글로벌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 촉구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각종 사업에 대한 중복성 점검 및 거시적 차원에서 제도 개선 노력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법안 및 예산 반영 추진

제2부

상임위원 평가 및
후속조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I 주요 내용

■ 文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정책 왜곡실태, 이권카르텔, 예산 낭비, 정책실패 책임 떠넘기기 공세 등에 적의 대응하며, 제도 정비 포함 대안 제시

- 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전력수급 및 NDC 달성의 비현실성, 소규모 태양광 무한접속과 계통 혼란 등 총체적 한계, 탄소중립에 원전 필수 현황 등 부각
- 전기요금 폭등 등 탈원전 폐해를 가리기 위한 야당의 반복된 공세를 文 시절 요금 인상 무시, LNG 수입 확대, 통계조작 등 객관적 자료로 돌파
- 수상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카르텔 실태와 막대한 예산 누수 전면 고발과 개혁 주문, R&D 관련 文측 연구비 부정사용 등 이권카르텔 지적 및 구조조정 필요성 제시, RE100 한계를 극복할 CFE 국제연대 강화로 NDC 현실화 주문

■ 한전 등 에너지공기기업의 재정악화, 방만경영 및 도덕적 해이 등 난맥상 원인과 실상을 제시하고, 전력계통 문제를 점검하며, 혁신적 변화와 대책 강력 촉구

- 탈원전으로 천문학적 예산낭비·RPS 비용 폭등·재정 악화, 한전공대 방만 운영과 특혜의혹 등 질타하며 신속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 집중 주문
- 가스공사의 LNG 고가도입, 전 사장의 호화출장, 에너지공기업 연구 및 홍보 등 목적 외 한우회식·관리부실·영리행위·이념단체 재정지원 등 반복되는 도덕적 해이와 부실경영 등에 대해 엄중 주의와 재발방지 대책 요구
- 계통 부족 현실에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등 전력망 구축 점검, 투기수단이 된 계통 알박기 실태와 대책 등 전력망 적기 건설과 정상화 강조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애로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부실이 누적된 정책 및 산하기관에 대한 대대적 정비를 요구

-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를 위한 법개정, 고금리 고충 완화를 위한 초저금리 대출 신설, 새출발 기금의 개편 등 소상공인 부담 완화방안 제시
-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필요성 및 인력공급 원활화방안 촉구
- 비효율적 R&D운영 및 성과없는 지원사업에 대한 일제 점검 및 개선
- 산하 공공기관의 최하위 고객만족도 개선 및 방만부실 경영 지적
- 최저임금 부작용 은폐를 위한 통계조작 지적하며, 감사 및 수사 주문

■ 산업 및 중기벤처 정책 관련 지역 활성화 대책, 이념 아닌 현실과 미래 지향적 에너지믹스 토대의 탄소중립 실현, 소상공인 골목상권 안정 및 육성대책 등 부처 현안에 체계적인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 주도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에너지정책의 정상화 지속 전개 R&D 보조금 부정, 이권카르텔, 세금누수 등에 제도 개선 강력 촉구]

I 주요 내용 및 성과

■ 문재인 정부 시절 폭증한 R&D 예산의 방만집행 정비와 카르텔 혁파 촉구

- 단순 설비 교체 등 혁신성 떨어지는 사업, 나눠먹기 식 보조금 배분 방식, 관행적 사업 등 개선 및 혁신 분야에 취지에 맞게 효율적 집행 필요성 확인
- 분기별 정산원칙도 지키지 않는 부실한 관리실태 강조와 개선대책 제시
- 산업부 및 공공기관의 이념편향단체에 2조원대 지원, 신재생에너지 홍보사업 수혜단체 등 이권 카르텔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시정 제안
- 文 전 대통령 머느리, 산업부 R&D 과제선정 후 과제와 무관한 논문 발표로 해당 연구비 및 그 외 다수 연구비 부정사용 의혹 제기

■ 재생에너지 사업 부패 의혹과 세금 누수 초래한 재생에너지 카르텔 시정 요구

- 갯벌에 설치한 해상풍력, 한수원 태양광사업 O&M 사업자 변경 의혹, 고흥 수상태양광사업에 최저신용등급회사 선정, 새만금태양광의 초과이익 포기로 새만금판 대장동 의혹 등 광범위한 비리카르텔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 당위성 제기
- 신용과 기술 없는 재생에너지 녹색보증사업, 정부 사칭 태양광 사기, 재생에너지 연구과제에 예산 지원 후 부실관리로 혈세 낭비 등에 정비 촉구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재생에너지 R&D 카르텔 관련 산업부의 예산 재구조화 방침 추진 점검 및 해당 사안의 법적·행정적 조치 진행

- 태양광 풍력에너지 사업 관련 제기된 카르텔 의혹 등에 상임위 차원의 감사원 감사 요청과 검찰 수사 요청

■ 재생에너지 정책의 난맥상과 예산 오·남용 실태에 대한 종합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바람직한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과 추진

- 산업부 등에 이념편향단체에 대한 예산 배정 관련 엄격한 기준 마련과 세금 반환 포함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확고한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 주문

[과거에 발목잡힌 에너지공기업 혁신]

한전 적자 폭증 원인 규명, 공기업의 부실경영과 도덕적 해이 타파 요구

I 주요 내용 및 성과

■ 한전의 적자 폭증 원인, 전기요금 및 한전공대의 진단과 제도혁신

- 탈원전(월성1, 신한울3.4)으로 7조원의 손실 발생, RPS 급등 등으로 전력구매비용 폭등, LNG 수입 확대 등 천문학적 탈원전 비용 지불 실태 강조
- 재생에너지 무제한 접속, 태양광사업자 체리피킹(SMP 급등시 RPS 고정가격 계약 해지) 등 무리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의한 국민 부담 지적
- 탈원전 후폭풍인 전기·가스요금 관련 인상요구 연속 묵살한 文정권의 민낯 부각시켜 야당의 요금과 탈원전 무관 공세를 객관적으로 차단하고 실체 규명
- 한전 위기 속에 한국에너지공대의 방만운영(과다 복지와 상여금, 법인카드 부정 사용, 총장 6억원 등 황제 연봉, 연구비 등 예산남용, 인사비리 등) 실상과 한전 임직원의 태양광사업 등 겸직·영리 행위 참여사실 알리며 개선대책 요구

■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실경영 및 도덕적 해이 질타와 혁신 촉구

- 가스공사의 LNG 수요예측 실패로 초고가 수입에 따른 한전 및 국민 부담 증폭, 가스공사 전 사장의 1박 260만원 호화출장, 26명 직원 유배 조치 질타
- 강원랜드 기관평가 추락 등 부실 경영, 가스안전공사 사장의 연고지 중심 사회공헌사업 예산 집행, 2년 연속 D등급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연구과제 부실관리로 인한 예산 낭비사례 등 지적하며 재발 방지방안 요구
- 한전 및 발전자회사 임원의 출자회사 재취업의 공정성 문제 제기, 개선 촉구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탈원전으로 후퇴한 원전생태계 복원을 위한 입법 및 예산 반영 조치 강화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 연내 통과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SMR을 비롯한 원전 개발 및 수출 지원 예산 확보에 초당적·범정부적 노력 전개

■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통해 제기된 논란 관련 방지 규정 마련 등 재발방지 대책 철저히 수립

■ 전기요금 인상 논란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전기위원회' 지위와 역할 개선을 통한 제도개선 적극 검토

[에너지 및 산업 정책에 대한 비전 제시]

에너지정책 대안 제시와 함께 미래 산업 성장동력 발굴

I 주요 내용 및 성과

■ 에너지 안보와 넷제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 대안 제시

- 원전 중심의 에너지 믹스 및 탄소중립 달성 전략 제언
- 새만금 등 재생에너지의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개발 제시
- 재생에너지 간헐성, 지역간 전력수급 등을 고려한 전력망 적기 건설 촉구
- 분산에너지법 지역별 전기요금차등제 내년 시행에 차질없도록 준비 촉구
- 자원 비축기지 포화에 대비하여 임대, 전담부서 신설 등 선제적 대책 촉구
- 에너지재단과 에너지공단, 에너지기술평가원과 산업기술평가원 통합 등 여건변화를 고려한 에너지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검토 주문

■ 에너지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제안

- CFE 이니셔티브 확산을 위해 CFE 편제 악의적 짜깁기 보도에 대한 엄정 대응, 무탄소 연합 활동 및 기능 강화 등 적극 추진
- SMR,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 수소환원제철 등 차세대 핵심기술 지원 강화
-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단지 상황 및 추진 여건 등 점검
-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해외자원개발사업 직접 수행하도록 공단법 개정 및 해외자원개발 독립지원 기구 신설 검토 촉구

■ 재생에너지 중심의 발전시설 확대하며 전력망 확충을 외면하고도 전기공급 시스템을 왜곡시킨 알박기 신청 및 피해구제 대책, 전력망 정상화 조치 강조

■ 중국업체(전기버스, 태양광, 서빙로봇 등)에 집중 지원되는 보조금 제도의 개선,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 해결, 유턴 기업 지원 확대 등 요청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환경성·경제성·안정성 등 종합 고려한 객관적·합리적 에너지믹스 수립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감 제기 정책 대안 적극 반영

■ 에너지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구조조정 방안 수립 등 점검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자원안보특별법 및 전력망확충법 제정 등 주요 현안 관련 입법 활동 강화

[민생국감]

소상공인·중소기업 현장애로 집중 점검 및 대책 마련 촉구

I 주요 내용 및 성과

■ 고금리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애로 지원방안을 선제적 제시

- 소상공인의 증빙없이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 오지급된 대상자에 대한 면제, 유예 등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방안 주문
- 최고치를 기록중인 대출잔액, 연체율 등을 감안시,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대환대출,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 연장의 필요성 제기
-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30조원중 1.4조원만 지원확정된 상황을 감안하여 기준 완화 등의 활성화 대책의 필요성 요구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청년몰 개편 및 온누리상품권 개선방안 주문

- 2016년부터 1천억원을 투입한 전통시장 청년몰의 한달 평균 매출이 50만원에 불과, 개선·발전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연령 확대 등 대안 제시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하고, 시장 위주의 노후전선 정비 사업을 개별점포에도 적용하도록 개편할 것을 요구

■ 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및 중소기업 인력 유입 기반마련 촉구

-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상황을 고려한 대응방안 주문
- 정규직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중소기업을 나쁜 일자리로 인식하는 편견을 개선할 것과 우수기업 채용박람회 통한 일자리 매칭을 제안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법 개정을 통한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 오지급 환수 면제 추진 및 새출발기금 운영 개선, 초저금리 대환대출 등 금융지원방안 마련

■ 전통시장 청년몰,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제도 개선하고, 개별점포에도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노후전선 정비사업 개편

■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며, 우수기업 채용박람회를 추진

[책임국감]

지난 정부에서 부실이 누적된 중소기업정책 및 공공기관의 개선 요구

I 주요 내용 및 성과

■ 비효율적 R&D운영 및 성과없는 지원사업에 대한 일제 점검 및 개선 필요

- 사업화 성공률이 낮고, 카르텔적 운영 요소가 있는 R&D사업의 비효율적 요인 제거 및 효율화 방안 수립 필요성 제기
- 스마트상점 보급사업, 무료 소상공인 판로지원사업이 시중보다 고가의 비용을 요구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운영방식 개선을 요구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숨기려 조작한 통계에 대한 감사요구

-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 소상공인 실태 조사에서 고용관련 조사 항목을 모두 삭제했으며, 최저임금이 적정한지 묻는 문항과 매출·영업이익 증감 여부 등을 통으로 들어냄. 이에 대한 감사 및 고발을 요구

■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부실 경영을 질타

- 징계직원 승진, 젓소를 한우로 둔갑 판매, 업추비 및 업무용 차량 부정 집행 등 공영홈쇼핑 부실 운영과 대표 및 감사의 부적정 처신 감사 요구
- 중진공 퇴직자 관리 부실, 외부 강사 강의료 기준 불명확, 창업진흥원의 해외 보이스피싱 및 직원 감독 부실, 장애인기업지원센터의 인건비 부당 전용 등 누적된 부실 경영 개선 필요성 제기
- 중진공의 에디슨모터스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을 위해 규정을 수시로 개정하는 등 특정기업 지원을 위한 불공정 행위를 지적하고 감사를 요구
- 산하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가 낮음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촉구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R&D 사업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

■ 소상공인 통계 조작에 대한 내부 감사, 감사원 감사 및 고발 필요

■ 산하기관에 대한 대대적 감사 및 고발 등을 통해 운영을 정상화하고, 고객 만족도 제고 방안을 수립·시행



제2부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I 주요 내용

■ 의대증원 및 지역 필수의료 혁신 및 패키지 정책 필요성 강조

-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이행을 위해 핵심 과제인 의사인력 증원과 함께,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인력이 유입되기 위한 정책패키지 필요
-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

■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

- 국민연금 모수개혁만으로는 한계, 기초연금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 필요
- 청년들의 연금개혁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고려한 연금개혁 필요

■ 지난 3년간 문재인케어의 포퓰리즘을 증가시킨 문제점 지적

- 5년간 20조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
- 문재인 케어 후폭풍은 불법과 편법 거래의 결과 초래, 의료 쇼핑이 늘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림 현상 가중

■ 마약류의 오남용 경각심과 체계적이고 엄격한 마약 관리 시스템 구축 촉구

- 20대 마약 중독환자가 5년 사이 2.7배 늘었고, 10대 환자의 증가도 증가하고 있어, 마약관리 시스템 전반의 쇄신 필요
-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의사 셀프처방 등의 문제지적과 대책 마련

■ 국정감사 기간중 건강보험 허혈성 뇌질환 MRI 조기치료로 환자급증 관련 거짓 자료 제출 논란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자료 제출 논란이 있었으나, 여당 간사를 중심으로 무난히 대응하여 민생 중심 국감으로 마무리되었음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강화 촉구

I 주요 내용 및 성과

■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증원은 단순히 의사 수 확대라는 문제를 넘어 전국 어디서나 고른 수준의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 필요

- 의대정원 늘리는 것과 필수의료 확충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음
- 의약분업 이후 18년 동안 3,058명으로 묶여있음. 진료의 대기시간, 서비스의 질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수 증원은 지금이 골든타임
- 인구 천명당 의사수를 비교했을 때 OECD비해 매우 부족한 상태
- 필수의료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사증원과 함께 정책지원 필요
- 의사수 증원과 함께 의사 양성 교육의 질 문제도 중요하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 인력이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만 늘려서는 안됨.
- 공공성을 담보한 필수의료 육성과 취약지역의 의대 신설 필요 촉구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지역 필수의료 혁신전략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이관 및 의대증원 규모 확정,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등 정책적 지원

- 국립대병원 이관(법률, 예산·조직 등) 등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 25학년도 입학정원 확대를 위한 의대 수요조사(현장수요, 교육역량 등)
- 의대정원 규모 확정외에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공공정책 수가 확대 등 정책 패키지 마련 및 시행하여 지역과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달성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

I 주요 내용 및 성과

■ 국민연금 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 모두의 숙제이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 강조

-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및 노후소득보장제도 틀에서 개혁방안 마련
- 국민연금 논의기구에 청년층 의견이 대변되도록 참여권 보장 필요
- 연금고갈 등 기금운용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필요
- 기초수급자 대상 두루누리 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부정수급자 방지 필요
- 시대상황 변화를 감안해 현행 장기간 유족연금 지원방식 개선
- 역량있고 경험있는 해외 현지 인력 등 전문가를 고용, 수익률 제고 필요
- 국민연금 기금운용 인력 퇴사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 크레딧 제도를 개선, 산전 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납입유예자의 부담 개선
- 국민 눈높이에 맞지않는 역진적 투자 개선 필요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정부는 23.10월말까지 제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 제출, 보고

- 국민보험료율 인상, 기초연금과 연계한 소득대체율, 수익률 제고 등 노후소득보장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마련
- 보험료율 인상, 실질소득 제고, 기금 수익률 목표 구체화, 지급보장 명시 등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

문재인 케어 포폴리즘 문제점 및 건강보험 정상화

I 주요 내용 및 성과

■ 지난 3년간 문재인 케어가 포폴리즘을 증가시키는 문제 지적

- 5년간 20조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
- 문재인 케어는 의료 쇼핑과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림 현상 가중
- 2011년부터 7년 연속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수가는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음. 적립금은 2025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3년간 문재인 케어가 포폴리즘을 증가시킴. 급여 항목들을 제대로 평가하여 건강보험 정상화가 되도록 해야 함
- 건강보험의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여 중증환자를 위한 필수의료 집중 필요
- 중국인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등 건보 무임승차 지적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외국인 가입자 피부양자 요건 강화
-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지출 효율화 방안 등 개선 방안 마련
-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 및 필수의료 수가 확대 등 정책 지원 강화

사회적으로 심각한 마약류 오남용 방지 대책 마련

Ⅰ 주요 내용 및 성과

■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범부처 협력 강조

-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부실지적, 체계적인 마약 관리 시스템 구축
- 20대 마약 중독환자가 5년 사이 2.7배 늘었고, 10대 환자도 증가하고 있어, 마약관리시스템 전반의 쇄신이 필요함
- 일반인들이 식욕억제제 등을 통해 마약으로 입문. 텔레그램 구매 차단, 일회용 주사기 판매 제재, 정신과 치료제 처방 제한, 재활 치료 등 강조
- 마약류 오남용 관련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 사법-치료-재활 범부처 연계가 중요하며, 예방교육 강사 양성도 병행 필요
- 마약중독자 정신재활 시설에 대한 투자확대 및 대국민 인식 전환

Ⅰ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 시행

- 마약류 관리 시스템 고도화 및 식약처와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정보공유
- 마약류의 과다처방 및 셀프·사망자·대리처방 등 사각지대 해소
-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방지를 위한 법 개정 등 제도적 방안 마련
-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치료-재활 연계사업 구체화

제2부

상임위원 평가 및
후속조치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I 주요 내용

■ 야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4대강 보 흠집내기·해체 공세 등에 대응해 국민 안전을 위한 댐 건설 필요성·준설 등 치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부각

- 비점오염원 저감을 통한 녹조 감소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해 보 설치로 녹조 발생, 수생태계가 악화하였다는 야당의 주장 반박
- 석포제련소 통합오염관리, 불법 파크골프장 현장점검, 비점오염시설 관리강화, 녹조처리기술 개발 및 비용 투자 등 수질관리 및 녹조대책 강조
-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댐 건설, 하천준설·정비, 소규모 사방댐 건설, 빗물이용 시설의 효율적 이용 등 종합적 치수대책 마련을 촉구

■ 국민불안을 야기하는 야당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비과학적 선동에 대해 논박,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오염수 대비 태세에 대한 설명으로, 국민께 안정감 제고

- 국제법 미준수 상태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시행되는데, 정부는 일본정부의 입장만 청취한다는 야당의 흑세무민형 주장에 대해 일축하고 구체적 근거 제시
- 직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과학적 검증을 전제로 해양방류 허용 입장이 현재도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한편, IAEA,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과학적 기준에 따라 방류되고 있는 사실을 적극 부각
- 해양방류가 안전한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과 함께 관련 미세한 변화에도 적극 조치 방침 재천명. 한편으로, 정치적 이용을 위한 야당의 미신적 공세 비판

■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미래세대와 민생에 방점이 있음을 강력 부각

- 비정상적이고 불투명한 노동조합의 잘못된 회계 관행을 타파하고,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운영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야당의 정치적 이해 관계를 위한 ‘노조 탄압’ 프레임 공세에 적극 대응
- 선량한 노동자를 괴롭히는 거대노조의 폭력적 탄압 행태에 대해 국감 참고인 심문에서, 정치투쟁에 반대하며 민노총을 탈퇴한 노조 지도부에 대한 징계 및 민형사 소송 사례 등을 현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안의 신속 입법 필요성 부각
- 서울지하철공사 등 공공부문에서 탈법적 노조전임자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노조 지원내용에 대한 공시제도의 도입 검토 등 제도개선 마련 촉구

■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노동정책, 고용통계 조작·가짜 산재환자 양산·국고 보조금 낭비 등 실정 지적

-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왜곡하기 위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왜곡된 고용통계가 포함된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평가보고서’를 발표(‘23.9.14)했다는 주장과 함께, 왜곡된 고용통계를 발표한 동 연구소가 문재인정부 5년동안 13건의 연구용역 몰아주기의 수혜자임을 밝혀냄
- 문재인 정부에서 부적절한 산재 장기요양 청구를 견제하는 시스템을 무력화해서, 부당급여 청구 등으로 나이롱 환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산재 카르텔이 생성됨. 그 결과 문재인 정부 5년간 장기요양 환자가 연 7천명에서 2만1천명으로 3배나 폭증하고, 총 11조원의 요양급여가 지급되었다고 함
-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이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전락하여 자생력이 약화되고 고용유지 등 성과가 미미하여 사업수행방식 등 개편이 필요함을 지적

[4대강 물관리 및 치수대책]

4대강 물관리, 환경파괴 논쟁을 넘어 댐, 준설 등 국민 안전대책 제언

I 주요 내용 및 성과

■ 야당의 4대강 보 수질·수생태 파괴, 녹조발생 문제제기에 과학적으로 반박

- 작년 대비 금년 녹조 발생일 수가 절반 수준 감소한 자료 등 제시, 녹조 발생과 4대강 보의 연관성 적극 반박
- 하천 주변 퇴비 등 비점오염원 관리가 녹조발생 저감에 효과적임을 입증

■ 4대강 물관리, 이념 논쟁 아닌 국민 안전을 위한 실용적 대책 제시

- 석포제련소 통합오염관리, 불법 파크골프장 현장점검, 비점오염시설 관리강화, 녹조처리기술 개발 및 비용 투자 등 수질관리 및 녹조대책 강조
- 이상기후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댐 건설, 하천 준설, 사방댐 건설, 빗물이용시설의 효율적 이용 등 종합 치수대책 필요성 부각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4대강 보 처리방안 감사결과 후속조치 추진사항 지속점검 필요

-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등에 따라 4대강 보를 과학적·탄력적으로 운영, 미래 물수요 대응에 적극 활용
- 4대강 보의 녹조, 수질, 수생태 영향에 대해 장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치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대책 수립 필요

- 하천 준설·제방정비 강화, 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도시침수예방, 홍수예보 등 중장기적 관점의 치수 혁신대책 마련 필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

야당발 후쿠시마 오염수 가짜뉴스 차단 및 국민안심 확보

I 주요 내용 및 성과

■ 오염수 해양방류가 국민안전에 위해가 된다는 야당발 가짜뉴스 적극 반박

- 해양방류가 생물다양성협약, 국내법상 희석처리/배출금지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야당의 근거없는 주장을 적극 반박
- 과학적으로 검증된다면 해양 방류할 수 있다는 문재인 정부와 같은 입장에서 IAEA,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과학적 기준에 따라 방류되고 있는 사실 부각하여 국민 불안 해소
- 해양방류가 안전한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고 다른 방류가 이뤄지면 적극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 하면서 정쟁에 몰두하는 야당의 태도 변화 촉구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오염수 해양방류 지속 모니터링 및 방사능 감시 강화

- 방류 삼중수소 농도 등 실시간 모니터링 및 데이터 공개를 적극 추진하고, 이상상황 발생 시 방류중단 등 적극적인 정부조치계획 마련 필요
- 해양 모니터링 결과 유의미한 변화 발생 시 하천 등에 대한 방사능 오염검사 필요
- 하천, 호소 등 방사성 물질 감시를 강화하고 먹는 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기준 도입 검토

[미래세대와 민생을 위한 노동개혁]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 강화와 노조의 불법행위 근절 추진

I 주요 내용 및 성과

■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도입과 위법한 노조 전임자 등 제도개선 추진

-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이 ‘노조 탄압’이라는 야당 등의 주장을 반박하고, 양노총의 공시시스템 참여 결정에 대한 격려 등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에 노력
- 국감 참고인 심문을 통해 정치투쟁에 반대하며 민노총을 탈퇴한 노조 지도부에 대한 징계, 민형사 소송 등 거대노조의 괴롭힘 사례를 부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 필요성을 부각
- 서울지하철공사 등 공공부문에서 위법한 노조전임자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노조 지원내용에 대한 공시제도의 도입 검토 등 제도개선을 마련할 것을 촉구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 및 거대노조 괴롭힘 방지 등을 위한 입법 추진

-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3.9.) 및 회계공시 시스템 구축·운영(9월)을 통해 마련된 회계투명성 제고 제도의 안착을 지속 점검
- 노동조합 가입 및 탈퇴 방해, 비노조원 괴롭힘 등 거대노조의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23.4.3.)의 신속한 입법 추진
- 위법한 노조 전임자 운영, 부당한 금품 지원 근절 등을 위한 노조 지원 공시제도의 도입을 검토

[문재인 정부의 고용통계 조작과 혈세 낭비]

문재인 정부의 고용통계 조작, 산재기금 등 혈세 낭비

I 주요 내용 및 성과

■ 문재인 정부의 고용통계 조작, 혈세 낭비 등 실정 지적

-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평가보고서’를 발표(‘23.9.14.)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고용통계 조작을 물타기하고,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왜곡한 것임을 비판함. 특히 동 연구소가 문재인정부 5년동안 13건의 연구용역 몰아주기의 수혜자임을 밝혀냄
- 문재인 정부에서 부적절한 산재 장기요양 청구를 견제하는 시스템을 무력화하여 5년간 장기요양 환자가 연간 7천명에서 2만1천명으로 3배나 증가하고, 부당급여 청구 등 산재 카르텔이 존재하므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함
-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이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전락하여 자생력이 약화되고 고용유지 등 성과가 미미하여 사업수행방식 등 개편이 필요함을 지적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산재보험 부실화 관련 고용노동부의 감사 및 감사원 감사 추진

- 10.26. 환노위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로 문재인 정부의 장기 산재환자 양산 및 산재 카르텔 문제 등이 제기되자 고용노동부에서 1개월간(필요시 연장) 특정감사에 착수하기로 함
- 동 감사를 통해 산재보험재정 부실화를 야기하는 일명 나이롱 환자 점검 절차 부실, 산재환자 대상 과도한 특별수가, 산재 카르텔 등 제도·운영상 문제점을 철저히 감사할 계획이며, 필요시 감사원 감사청구도 추진
-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당정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 24년도 정부예산안 심의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등 민간단체 국고보조 사업이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사업수행방식 변경 등 추진



제2부

상임위원 평가 및
후속조치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총평

I 주요 내용

■ 민주주의를 허물고 국가 신뢰를 무너뜨린 문재인정부 주택통계 조작사건

- 원전은 “죽을래”, 집값은 “조직 날린다”며 국민을 협박한 문재인정부
- 국민들의 재산을 강탈한 문재인 청와대 주택통계 조작

■ 민주당의 기승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거짓선동

- ‘타진요 사건’(타블로 학력위조 거짓 의혹제기 사건)이 오버랩되는 민주당
- 44만 명에 달하는 서울대 졸업생이 전부 윤 대통령 측근?
- 국내 굴지의 토목공학 전문가들과 환경시민단체 활동가 한명의 상반된 주장

■ 문재인정부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 부작용 고발

- 무리한 ‘주거복지 로드맵’ 강행이 촉발한 LH 공공주택 무량판구조 부실시공 및 붕괴사고 원인 규명
- 문재인정부 ‘공공도심복합개발사업’(공공재개발·재건축) 비위행위 적발

■ 문재인정부 임대차 3법 실패로 촉발된 전세사기 사태 해결 노력

-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실패가 초래한 전세사기 범죄
- 전세보증 채권회수 등 HUG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촉구
- 감성만 앞세운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특별법 개정 명분 쌓기

[문재인정부 국정농단]

국가 신뢰를 무너뜨린 문재인정부 주택통계 조작사건

I 주요 내용 및 성과

■ 원전은 “죽을래”, 집값은 “조직 날린다”며 국민을 협박한 문재인정부

- 자신들의 이념을 위해서라면 통계에까지 서슴없이 손을 대며 어떠한 수단도 정당화된다는 비뚤어진 확신을 가진 문재인 청와대 저격
- 민주주의 근본을 허물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의 진실규명
- 통계법상 사전 보고하면 안 되는 통계자료를 청와대 외압에 의해 보고 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 기간 부동산원 ‘사전통계제공 관리대장’에는 기록이 전혀 없는 등 국가 기록까지 조작한 사실 적발
- 또한 통계 조작을 자행하며 배임 등 위법성을 피하고자 업무 세칙까지 삭제하는 등 치밀한 사전 계획하에 진행한 권력형 게이트 정황 적발

■ 국민들의 재산을 강탈한 문재인 청와대 주택통계 조작

- 문재인 청와대가 조작을 지시한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는 재건축 부담금과 증여세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통계
- 이 통계를 조작하여 집값 상승이 작게 나오게 되면 재건축하는 국민들이 부담금을 많이 내게 되는 구조
- 이러한 주택통계 조작으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51개 단지의 부담금은 총 1조 8,600억 원에 달하였으나 이를 당시 KB 통계를 적용해 재산정하면 9,060억 원으로 절반이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결국 주택통계 조작으로 국민들의 재산을 강탈해 간 것이나 다름없었음을 낱낱이 고발함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철저한 수사로 통계조작 연루자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으로 일벌백계

- 감사원 감사 결과로 밝혀진 당시 주택통계 조작을 부당하게 지시·강요·협박한 의혹으로 지목된 청와대 정책실장(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및 국토부장관(김현미) 등의 철저한 수사 필요

■ 수사 결과에 따라 잘못 산정된 재건축 부담금 재산정 및 증여세 환급 추진

[거짓선동 가짜뉴스]

민주당의 기승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거짓선동

I 주요 내용 및 성과

■ '타진요 사건'(타블로 학력위조 거짓 의혹제기 사건)이 오버랩되는 민주당

- 민주당은 수개월째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외압에 의해 노선변경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관계 입증과 결정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자극적인 가짜뉴스와 지엽적인 실무 사안 꼬투리 잡기가 국감까지 이어짐
- 결국 사실관계와 진실규명보다는 총선을 염두에 둔, 정략적 거짓 선동이 주된 목적임을 스스로 인정한 꼴

■ 44만 명에 달하는 서울대 졸업생이 전부 윤 대통령 측근?

- 기껏 국정감사에서 새롭게 제기된 의혹이 서울대 출신 대표가 운영하는 대선테마주 업체에게 휴게시설 입찰 특혜를 줬다는 지라시 같은 의혹제기
- 실상은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쟁점이 되기 전 정해진 휴게소 입지에 함진규 사장 취임 직후 휴게 시설 첨단화를 위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도입한 혼합민자방식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추진한 것

■ 국내 굴지의 토목공학 전문가들과 환경시민단체 활동가 한명의 상반된 주장

- 국정감사 기간, 전문가 일반증인들 모두 한결같이 '외압은 전혀 없이 전문성에 바탕을 둔 기술적 분석으로 대안 노선을 검토'했다는 여러 차례의 일관된 진술을 민주당은 무시로 일관
- 그리고 전문가라며 야당이 섭외한 이찬우 터널환경학회장은 교통분야 자격증은 고사하고 도로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경력도 전무한 전형적인 시민단체 활동가일 뿐인데 마치 전문가인 양 '원안이 좋다'며 국회를 희화화
- 터널환경학회는 광진구 자양동 주택가 빌라 3층에 소재지를 두고, 회원 대다수는 정파색이 매우 강한 인사들로 채워진 15명 규모의 전형적인 불법시위 참여형 환경단체 의혹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설계비 123억 원의 삭감주장 대응 필요

- 양평군민과 해당 도로 이용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최근 공개된 경제성분석 결과를 토대로 여·야 전문가 검증위 구성을 통한 사업재개 촉구

[문재인정부 국정농단]

문재인정부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 부작용

I 주요 내용 및 성과

■ LH 공공주택 무량판구조 부실시공 사태 원인 규명

- 민간아파트 427개 단지 전수조사 결과 부실시공이 단 한 건도 없었으나, 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 102개 단지 중 부실시공은 22개 단지나 적발
- LH 부실시공은 문재인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리한 '주거복지 로드맵' 강행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됨
- 강도 높은 제도개선 필요성 부각

■ 문재인정부 '공공도심복합개발사업'(공공재개발·재건축) 비위행위 적발

- 문재인정부 '공공도심복합개발사업'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사태와 무량판구조 아파트 부실시공 등으로 신뢰가 추락한 LH가 수용권을 남발하여 추진하며 주민 반대가 높아 현재까지 제대로 진행된 사업지구 없이 답보상태
- 이러한 전근대적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주민 동의율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정치색이 짙은 주민 봉사단을 조직하고 사무실 임대료 ·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대여금을 지급하는 등 무차별 현금 살포를 자행
- 그도 모자라 장위 9구역에서는 민주당 입당원서를 받고 당비 대납까지 지원하는 등 불법적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던 정황이 밝혀짐
- 또한 불법 당원모집과 당비 대납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민주당 소속 구청장 및 시·구의원에게 LH 예산으로 감사패까지 전달한 사례까지 적발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LH 공공주택 신뢰 회복 및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 무량판구조 아파트 안전대책 및 설계·시공·감리 간 상호견제 시스템 구축 등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추진

■ 공공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 전반의 감사원 감사청구 및 검찰수사 필요

- 3년 한시법으로 추진된 문재인 정부 '공공도심복합개발사업'은 폐지하고 윤석열 정부의 '(민관)도심 복합개발 지원법안' 신속 제정 추진

[문재인정부 국정농단]

문재인정부 임대차 3법 실패로 촉발된 전세사기 사태 해결 노력

I 주요 내용 및 성과

■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실패가 초래한 전세사기 범죄

- 전세사기 범죄는 '17년 2월 세제혜택 등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 활성화, '20~'22년 수도권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빌라 신축 활성화, 전세자금 대출 확대, 전세가율 100% 주택까지 보증보험 가입, '21년 6월 시행된 임대차 3법 등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누적되며 발생한 사회 구조적 범죄

■ 전세보증 채권회수 등 HUG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촉구

- 약성 임대인 채권 회수율이 11%에 불과, 일반인보다 낮은 채권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 마련 필요
- 금년도 HUG 보증보험의 대위변제 건수가 폭증하고 미회수 금액이 3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 HUG의 자본금 확충과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 감성만 앞세운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특별법 개정 명분 쌓기

- 보증금 미반환 의도가 없는 역전세 임대인과 서민으로 보기 어려운 고액 임차인의 경우까지 지원 범위 확대, 선구제 후회수 채권매입 및 주거비 현금 지원 등 무차별 선심성 정책 도입 요구 주장

I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 사항

■ 내년도 예산안 심의 시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예산 증액 추진

- 내년도 임대시장 불안 상황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자 대상 대위변제에 필요한 자본확충 필요

■ 피해자 직접 지원 근거 삽입하려는 민주당의 특별법 개정에는 원칙 대응

- 선구제 후회수 채권매입, 직접 현금 지원 등은 다른 국민과의 형평성 고려와 공적 재원 소요의 사회적 합의 선행 필요

제3부

상임위 의원별
주요성과

국회운영위원회

김성원 의원



국가 R&D 예산 구조적 개혁과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과감한 정책 필요

I 주요 내용

■ R&D 예산 지출 구조조정 및 사업 개편 시급

- 미래성장동력의 창출을 위해 R&D의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 필요
- R&D 카르텔을 타파하고, 유능한 연구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 대통령실은 R&D 혁신에 관한 대통령의 명확한 뜻을 국민께 전달하도록 노력해야

■ 국가 주도의 일시적 물가 통제 검토 필요

- 소득 하위 20% 가구의 식비는 가처분소득의 44.4%에 육박
- 전반적으로 체감물가라 할 수 있는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상승
-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는 당장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
- 대통령실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국가 주도의 물가 통제 추진해야

■ 남성 차별적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비판

- 남성 직원만 야간당직 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의 결정문 비판
- 편파적이고, 차별적인 모순으로 가득한 결정문 내용을 지적하고 재검토 촉구

■ 국제기구 사칭 의혹 UN 해비타트 한국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고발 촉구

- UN 해비타트 한국위가 국회사무처를 속여 4년간 44억원 기부금 받은 사실 지적
- 논란의 배경에 박수현 文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있다고 지적
- 국회사무처가 UN 해비타트 한국위를 직접 고발하여 공범 의혹 해소하길 촉구

백종헌 의원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통한 국민 신뢰 확보

I 주요 내용

■ 지난 정권 대비 개선된 운영방식 필요성 강조

- 대통령비서실 대상, 지난 정권 청와대가 긍정적 정책효과를 과장하고 부정적 영향은 감추기 위해 각종 국가 주요통계 작성 및 보도 과정에 개입한 행위 지적 및 개선 요구.

■ 국제 정세에 따른 영향 대비

- 대통령비서실 대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분쟁의 영향이 대한민국 경제에 끼칠 수 있는 원유가격 상승 및 원자재 공급 차질 가능성 제시 및 대응책 마련 요청.

■ 적극적 인권활동 요청

- 국가인권위원회 대상, 교육사업 추진 등 적극적인 북한 인권사업 전개 필요성 강조.
- 국가인권위원회 대상, 희귀질환 환우 치료 어려움에 대해 인권 보호 차원으로의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보건당국과의 인권위 차원 협의 노력 요청.

■ 국회 직원 복지 및 친환경국회 조성을 위한 질의

- 국회사무처 대상, 교통편의성 확보 및 친환경국회 조성을 위해 셔틀 및 통근버스 관련 예산확보의 필요성 주장.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대국민 사기극 엄단해야

I 주요 내용

■ 부동산원, 통계 조사지역 20% 늘리면서 대도시, 수도권 빼놓고 지방만 늘려

- 현장점검 숫자도 집값 변동률 낮은 곳만 늘리고 높은 곳은 되려 줄이기도

■ 대통령실 도감청과 간첩? 야당의 도념은 가짜뉴스!

■ 인국공 배재정 비상임이사, 8490만원 받고 선거운동 中

- 월급 200~220만원 받고, 회의비 30~50만원 수령, 해외 출장까지!
- 임기 중 지역위원장 맡고, 반정부 투쟁에 앞장서며 총선준비

■ 북한인권재단 출범, 野 비협조로 7년째 발 묶여

- 북한인권법 제정 당시 합의 정신 부정하고 야당 몫의 재단 이사 추천 7년째 회피하는 민주당
- 인권위, 민주당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권고했음에도 아직까지 묵묵부답
- 실효성 없는 국가인권위 북한인권팀, 팀원은 고작 2명뿐

■ 숫자만 불린 인권위의 인권교육 예산 집행 내실 다져야

■ 명절 현수막까지 선거활동이라는 민주당의 선동, 이젠 멈춰야

■ 유엔해비타트 한국위, 문재인·민주당이 만든 사기극

- 거짓 서류에도 국회사무처는 허가! 그 배후에는 박수현 前수석
- 국회사무처는 한국위와 공범인지, 기망 당한 것인지 밝혀야!

■ 유명무실한 국회사무처 재취업 심사시스템

- 국회사무처, '국회공직자 윤리위원회' 통해 재취업 심사
- 최근 10년간 3급 이상 사무처 직원, 재취업 불가는 단 한명!

서정숙 의원



2023 국정감사 백서

I 주요 내용

■ (대통령비서실) 의료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 국민들에게 정책 효과 나타나야

-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 교육부 소관에서 복지부 소관으로 바꾸는 등의 의료 혁신의 목적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국민을 위한 것으로 국민들이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함을 강조
- 또한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하여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의사 수가 부족한 사실을 인지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의대정원을 확대해야 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과거에 국민과 의료계를 감정적으로 갈라치기 했던 과오를 범하지 말 것을 당부

■ (국가안보실)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필요

- 제복 입는 사람들이 대우받고 자긍심을 느끼는 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것이 우리 대통령과 정부의 방침임을 재확인하고, 군 전투력 발휘의 핵심인 초급간부들의 복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국가안보실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

■ (국가인권위)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과도한 보장이 가져오는 역차별

- 외과적 수술 없이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허락할 경우 발생하는 여성·아동 등에 대한 피해와 역차별문제를 지적하고, 다수의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에 대한 인권위의 균형감 있는 대처를 촉구

■ (국회도서관) 상습 성폭력 전과 있는 사이비·이단 목사의 종교서적이 국회도서관에 버젓이

- 국회도서관이 신앙과 교리를 이용하여 복수의 신도들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행위를 저질러 실형이 선고된 사이비·이단 목사의 저서에 대해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해당 서적에 대한 열람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



재정 만능주의 벗어나 건전재정 기초 확립해야

I 주요 내용

■ 재정 만능주의 벗어나 건전재정 기초 확립해야!

- 재정 만능주의 文 5년의 결과, 70년 역사의 정부 부채 1/3이 文정부 5년 만에 생겨
- 망하는 나라 3종 세트는 공무원 증원, 복지확대, 통계조작… 빛은 누가 갚나!
- 건전재정 통해 정부 부채 관리하고 미래세대 부담 덜어야!

■ 수출진흥회의 부활로 R&D 혁신해야!

- 산업계에 단비를 내리는 수출진흥회의처럼 전략적인 예산 배분 필요
- 2024 정부 R&D 예산은 25조 9천억 규모… 文 정부 평균보다 높는데 가짜뉴스
- R&D 예산 개혁·평가·배분 고민하고 부처간 칸막이 걷어내어 비효율 바로잡아야!

■ 소상공인 지원 향한 대통령 의지, 적극 홍보 필요!

- 文 정부 시기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지급한 재난지원금 환수 문제, 환수 면제로 ‘통 큰 결단’
- 尹 대통령, 역대 대통령 최초로 소상공인대회 참석 “소상공인, 정부 우선순위” 강조
- 대통령 소상공인 정책홍보 강화하여 국민에게 잘 알려야!

■ 국가 NDC정책까지 참견하는 인권위

- 우리나라 NDC 낮다며 관련 근거법 위헌주장, 헌법재판소에 의견제출
- 감축 목표 비교도 적합하지 않고 비합리적 논리접근
- 기업 고통 심각한데 환경론자 주장 편승

■ 정치적으로 편향된 국회사무처 노조, 정치 중립 강화해야!

- 민주노총 산하 국회사무처 노조… 홈페이지에 정부·여당 공격
- 혐오 조장, 정치적 편향 글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 일으켜
- 사무처는 의정활동 지원조직… 공무원 정치적 중립 강화해야!

장동혁 의원



R&D 예산 구조조정 필요성 및 건전재정 유지 중요성 강조

I 주요 내용

■ (대통령비서실) R&D 예산의 구조조정 필요성 관련

- '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주요 R&D 신규사업 예산(9개 부처 36개 사업) 1,947억 원이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치지도 않고 편성된 적이 있음.
- R&D 예산 중에서도 아무런 효율성 없이 낭비되는게 없는지 삭감 기준에 비춰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
- 아울러 국가 채무가 더 늘어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기에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하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사회적 약자나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고 강조.

■ (국가인권위원회) 아셈 노인 인권 정책센터 운영사업 : 회원국 분담금 확보 등 국제 기구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위상 정립 필요

- 우리나라는 센터 설립 주도국으로서 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국제 부담금(340-02목)으로 6억 8,600만 원씩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 센터에 납부하고 있음.
- 센터 설립 이후 5년 이상 소요된 현재까지 센터 재정지원을 위한 부담금 납부 등 회원국의 참여 실적이 없고 우리나라가 센터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고 운영 중.
- 센터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위상 정립을 위해 부담금 납부 등 회원국의 실질적 참여 확대를 위한 다각도의 개선 노력 필요.

■ (국회사무처) 기자회견 수어통역서비스 운영방식 변경 등 검토 필요

- '20년 8월부터 국회는 의정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자회견장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두 명의 수어통역사가 주 단위 교대근무형태로 회견장 운영시간에 한 명씩 상주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기자회견이 많은 날 업무가 과중되고, 휴게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또한 관리회사(용역업체)와 계약에 따라 통역사는 프리랜서로 고용되는데 매년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관리회사가 변경되어 통역사들의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
- 안정적인 기자회견장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운영(고용)방식 변경 등 검토 필요.



비리집합소인 文정부 사례들, 현 정부 반면교사 삼기를!

I 주요 내용

■ (대통령실) 도 넘는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저지

- 야당 위원의 대통령실 휴민트(간첩) 존재 의혹에 강한 유감 표명
- 불송치 결정서 문장 한 줄에 의한 단정적인 발언 지적

■ (대통령실) 해병대 故채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무용론 강조

-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의 잦은 입장 반복 지적
- 국정조사가 아닌 현재 진행 중인 수사단장 재판으로 진실 규명할 것 강조

■ (대통령실) 9·19 군사합의 폐해 지적

- 포사격 110여회, 포문 개방 3400여회 등 매일 3~4회씩 북한이 일방적으로 위반하는 9·19군사 합의의 문제점 지적
- 9·19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한 대통령실의 강력한 공감 요구

■ (대통령실) 비리집합소인 文정부 사례들, 현 정부 반면교사 주문

- 문재인 정부 기소된 전현직 청와대 비서관 13명 사례 지적
- 아파트 가격, 고용률, 취업률 등 文정부의 통계 조작 행위, 서민 대상 사기행위로 신속한 수사·재판 촉구
- 임종석 前비서실장의 통계조작 책임 발언의 대국민 기만행위 규탄
- 文정부의 비리·통계조작 등 현 정부의 반면교사 계기로 삼을 것 주문

■ (국회사무처)

- 유엔 산하 기구 사칭·기부금 모금 의혹이 제기된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의 불법성 지적 및 국회사무처의 고발 촉구
- 이재명 대표 단식 과정에서 주장한 사실무근의 '야당 대표 프로토콜' 지적

■ (국가인권위원회)

- 통상 기간을 초과한 북한선원 강제복송 사건의 결정문 통지 소요일 지적
- 「(한국형)제시카법」의 도입 필요성 및 법무부에 대한 협조 강조

정경희 의원



文 정부의 국민 기만과 혈세 낭비, 윤석열정부가 재건에 나섰습니다.

I 주요 내용

■ 유엔 산하기구 사칭단체 설립허가하고 관리감독 의무 방기한 국회사무처

- 유엔 본부 승인을 받지도 못했는데 유엔 산하기구라고 사칭한 국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 ‘유엔해비타트’.
- 유엔 사칭단체를 설립한 인물은 文 정부 청와대 수석 박수현
- 국민들 속여 모은 금액만 44억이 넘고 심지어 자신 출판기념회에 조직적으로 동원해 선거운동해.
- 사기단체 설립허가를 내준 같은 민주당 출신 유인태 前 사무총장은 공범 관리감독 의무를 방기한 국회사무처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 文정부 ‘묻지마 백신접종’ 책임 규명

- 문재인 정부 질병관리청에서 개인의 선택권은 부여하지 않고 반 강제적으로 백신접종을 강행.
-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도 반 강제적으로 접종을 해 부작용으로 투병하고있지만 정작 文정부는 중요자료 삭제하며 피해보상 회피.
- 정작 피해보상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이나 진전돼,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률 7%에서 43%로 증가.
- 백신부작용 피해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해소하도록 대통령실 차원에서 적극적인 방안 강구 요청.

■ 사무실 임대료 등에 수십억 혈세 낭비하며 특별감찰관 공석으로 둔 文정부

- 文 정부 1호 공약 공수처법을 강행하며 대통령 비위 감시할 특별감찰관을 무력화시켜.
- 아무런 활동하지 않았지만 예산은 42억이나 배정.
-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하라며 ‘내로남불’ 시전.
- 文 정권 5년간 식물기관 만든 특별감찰관은 공직비서관실 공직감찰팀으로 이관해 기능을 강화하는게 타당해.



국민 여러분에게 진실을 알리는 국정감사를 실천했습니다.

I 주요 내용

■ 대통령비서실

-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등한시 하고 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그간 R&D 예산이 잘못 사용된 사례 제시 및 사업 재편의 당위성 언급. 아울러 미래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예산은 감액 없이 추진됨을 재확인.
- 청와대 개방 문제는 여러 대통령 후보의 공약 사항으로 그간 실현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적인 결단이 있었기에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청와대 방문이 끊이지 않음을 강조
- 현 정부의 인사 참사, 극우 카르텔 등을 지적하는 야권에 대해, 문재인 정부 당시 옵티머스에 연루된 사람의 부인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진정한 참사였음을 강조
- 문 정부 당시 소통 부재 지적, 현 정부의 민생 현장 방문 사례를 언급하며, 더 민생 속으로 다가가 국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고 있는 해수부 공무원의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 정부가 보여준 행태에 대해 언급하며, 무책임성 비판
- 김일성 회고록 등 10여년이 지난 북한의 이적표현물들이 유튜브에 버젓이 공개되는 것을 지적, 방심위가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 국가인권위원회

-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한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적 공격에 대한 대응
- 서해공무원 사건 유족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명예훼손 진정 결정이 '기각'으로 나온 부분과 해당 결정 통보가 유족들에게 늦어진 부분 지적

■ 국회사무처 등

-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국제기구 유엔 또는 유엔해비타트의 공식 인가 없이 4년여간 활동하며 기업 등으로부터 44억 원을 모금한 것과 관련하여 국회 사무총장에게 진상 파악 및 고발 조치 촉구
- 국회방송에 대한 낮은 만족도 문제와 이에 대한 개선 조치 마련 촉구
- 10여 년 전에 머물러 있는 국회 본청 4층 전시물들에 대해 시대와 상황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

조명희 의원



현장과 팩트 기반의 생산적인 정부·국회 운영 대책 강력 촉구

I 주요 내용

■ 前정부 청와대發 알박기, 통계조작, 선거관리 등 전방위 적폐 대책 요구!

- 여전히 공공기관 90곳 중 48곳이 前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 개혁 촉구!
- 감사원 조사 결과, 주택·부동산 가격 통계 총 94회 조작 의혹 강력 질타!
- 기본적인 추계 근거도 설득 못하는 보사연의 의사 인력 수급 연구 지적!
- 민주주의 근간, 안팎으로 흔들리는 선관위! 기관에 엄중한 대책 마련 촉구!

■ 과학기술인 주도의 정책 혁신과 학계 연구 개선 등 종합적인 개혁 제시!

- 우주항공청, 독립 기구 아래 전문가 중심의 공론과 교육 체계 마련 촉구!
- 나눠먹기식 기초 R&D 예산 지원 개혁 필요! 효율성 제고에 초점맞춰야!
- 학계 내 연령 차별 또한 철폐 요구! 20년 이상 장기 중심의 연구 지원 체계 제시!
- 국가 경쟁력의 핵심! 공업 기술인 예우 개선과 실질적인 정책 참여 확대 요구!

■ 인권위, 북한 인권에 소극적인 태도와 조직 행정의 비능률 해결 촉구!

- 인권위, 90%가 노약자인 중국의 탈북자 강제 복송, 인권 외면 대책 촉구!
- 인권위, 장애인 이동권 진정 기각 지적!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방안 제시!
- 정원은 늘었고, 업무량은 같은데 행정 처리 기간은 2배 증가?! 개혁 요구!
- 인권위 조직 운영 비능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혁신 방안 마련 방향 제시!

■ 국회 내 몰카·흥기 소지 등 안전 대책 및 국회의원 지원 제도 혁신 요구!

- 의원 발의 통과 법안의 행정부 시행 지지부진! 사무처 관련 지원 계획 제시!
- 국회 건물 내 ‘불법 촬영 의심 신고’ 급증! 사무처 관련 대책 마련 촉구!
- 국회 본관 진입 후 커터칼 자해 난동?! 국회 방호 시스템 혁신 계획 답변 요구!
- 의원 공무상 해외 출장 시, 사무처의 지원 사항 및 관련 제도 개선 마련 필요!



제3부

상임위 의원별
주요성과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



법원, 불법 행태 지적 및 민생 회복 위한 제도개선 要

I 주요 내용

■ 법원노조 불법 전임 문제 지적 및 밀실 야합 이면 합의 문제 지적

- 법원노조, 15년여간 불법 전임 문제 지적. 환수조치 및 감사원 감사 요구
- 법원행정처, 법원노조와 밀실 야합 이면 합의. 노동부, 시정조치 예정

■ 법관 및 법원공무원 징계받고도 성과금 지급 문제 지적 및 환수조치 要

- 법원공무원 징계 시 성과금 지급 제한에도 불구하고 지급. 환수조치 촉구
- 법관 징계 시 성과금 지급 제한 규정 無. 규정 마련 촉구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및 전담인력 확충 要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권역별 확충 및 전담인력 증원 요구

■ 국정과제 입법 통과 저조 문제, 민생 법안 적극 통과 要

- 尹정부 입법 및 국정과제 통과 저조. 주요 민생 법안 조속 통과를 위한 여·야의 노력 당부

■ 리쇼어링 정책 관련 법령 정비 등 지원 방안 要

- 1년간 유턴기업 미국 1,833개, 일본 612개, 한국 26개에 불과
- 지역별 유턴기업 유치 및 지원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要

■ E-7 외국인에 대한 임금요건 현실화 필요

- 조선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임금요건 문제 지적 및 개선 要

■ 공익·국민감사 제도 개선 및 감사결과 이행관리 제고 要

- 공익·국민감사 처리기한 준수 등 제도개선 마련 및 감사결과 이행관리 철저

정점식 의원



법사위 소관 기관들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 및 각종 의혹들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I 주요 내용

■ 대법원, 전국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 상태 우려 및 조직기강 확립 주문
-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에 대한 엄정한 재판 촉구
- 수년간 법원 내 자행되어 온 법원공무원 노조 전임 및 이면합의(정책추진서)를 질타하고 후속조치 점검
- 부산돌려차기 사건 관련 재판과정에서 진술권 등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
- 기술유출 범죄 양형 기준 재검토 필요성 강조

■ 법무부, 검찰, 전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등에 의하여 거짓뉴스가 조직적으로 제작, 유포된 사실과 정황을 파악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대선공작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 촉구
- 이재명 대표 사건 관련 총 54명 기소, 22명 구속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대표 없이는 사건이 성립하지 않으며, 정치탄압, 정치 수사가 아님을 지적
- 마약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엄정 대응 촉구
- 故 해병대 대원 사망 사건 관련하여 보도된 검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및 사실 관계 확인
-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내실화 강조

■ 감사원

- 전 권익위원장 감사 관련 사실 관계 확인
- 전 권익위원장 관련 보고서 공개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점검

■ 헌법재판소, 법제처, 군사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헌재) 현재 사건 처리 지연 및 미제사건 급증 지적
- (헌재) 정치적 중립성 및 헌법연구관 운영 내실화 촉구
- (군사법원) 故 해병대 대원 사망 사건 관련 의혹 진상규명 및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 (법제처) 킬러규제 해소를 위한 법제처 노력 당부
- (공수처) 사건처리 결과 85% 이상 수사 불개시 및 공람 종결 지적

박형수 의원



이재명 대표의 각종 혐의 및 전 정부 통계조작 등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 당부

I 주요 내용

■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의 문제점 지적

- 백현동 게이트, 대북송금 의혹의 경우 각종 진술과 물증이 충분함
- 위증교사의 경우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영장판사가 설시하면서도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모순
- 판사는 제1야당 당 대표라는 지위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고 하나, 지위를 이용한 증인 회유,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오히려 높음

■ 검찰을 상대로 이재명 대표 및 이전 정부의 각종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 당부

-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게이트,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 당부
-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수사 필요성 제기
-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조작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 요청

■ 마약 범죄 재범 대책 마련 시급

- 마약사범 재범률이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어 재범 방지에 정책 집중되어야 함.
- 검찰은 마약사범 집행유예시 반드시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해야 함.

■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위한 상충법령 정비 시급

- 범죄피해자구조금 수령시 구조금이 재산으로 잡혀 기초생활급여를 받을 수 없거나 수급액이 줄어드는 문제점 발생
- 상충되는 법령 정비하여 불합리한 상황이 타개되도록 할 것을 법제처장에게 요구

유상범 의원



이재명 대표 및 민주당의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신속 수사 촉구

I 주요 내용

■ (법무부) 경찰 불송치종결권으로 인한 수사지연·부실수사 문제 지적

- 2021년 검·경수사권조정 시행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및 재수사요청에 대한 경찰의 이행 지연율이 심각
- 재수사요청 횟수 제한 및 송치요구 사유 확대를 통해 검사가 경찰의 위법·부당을 시정할 기회할 수 있도록 ‘수사준칙’ 재개정 요구

■ (검찰) 이재명 대표 사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등 신속 수사 촉구

-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가짜 최재경 녹취록, 윤석열 검사 커피 등 민주당, 진보 언론, 김만배 등이 가담한 정황을 제시하고 신속 수사 촉구
-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이재명 대표 부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취업특혜 의혹 등에 대한 수사 필요성 역설

■ (법원) 노조 불법전임 방임 및 정책추진서 체결 등 법원노조의 불법행태에 끌려 다닌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에 대한 문제 지적

- 법원행정처, 비교섭사항을 ‘정책추진서’ 형태로 불법 추진 및 법원본부에 휴직없이 사실상 전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조 전임자 방치, 이에 대한 문제 지적 및 질타, 아울러 감사원 감사 및 법적 책임 등 후속 조치 필요 강조

■ (감사원) 현 감사원 내부 상황 문제, 법원노조 전임자 문제 감사 대상 확인,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감사의 당위성 지적

- 법원 노조의 불법 전임 문제에 대한 감사 요구 및 감사 대상이라는 답변을 이끌어낸 것을 비롯해 감사원의 독립적 감사 활동이 한 감사위원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훼손되고 있는 현실 질타
- 통계 조작국의 오명을 쓸뻔했던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감사에 대한 당위성 강조

장동혁 의원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정감사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I 주요 내용

■ (대법원) 개인회생 제도 악용 모럴 해저드 심각, 법원의 역할 부재

-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적 회생을 돕는 개인회생 제도 신청 건수 급증 추세.
- 연말까지 12.9만 명이 신청할 경우, 금융회사 포함 채권자에 미치는 손실 약 10.3조 원 추정.
- 올해 개인회생 신청 직전 금융권 대출 신청 현황을 보면 10명 중 3명, 대출금액의 절반 이상이 모럴 해저드로 추정되며 의심사례 급증.
- 8월 기준 금융기관 개인회생 이의신청률이 작년 대비 37%에 불과(기각률은 9%에 불과), 제도가 악용된다면 국민의 부담으로 연결되기에 법원에 원인 파악 및 대책을 마련 요청.

■ (법무부) 마약사범 증가 및 교정시설 내 복용 관리 필요

- 올해 8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은 '22년 전체보다 많은 12,700명으로 역대 최다. 청소년(294→659), 60대 이상(1,829→3,046), 여성(3,665→4,747)에서 급증.
- 마약범죄에 대한 적발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과 치료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청소년, 고령층, 여성 등 범죄가 급증하는 대상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관리대책 필요.
- 작년 기준 전체 교정시설 수용자의 10.8%(52,940명 중 5,741명)가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했으며, 사용량도 '19년 17만 정에서 작년 25만 정까지 증가.
- 제소자간 약품을 주고 받거나 진찰없이 처방전을 작성해준다 적발된 경우도 있어 철저한 관리 감독체계 점검 필요.

■ (감사원) 처분요구 뭉개면 그만? 610억 원 회수 못했다

-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감사원으로부터 처분 통보를 받으면 현행법상 두 달 이내 처리하고 결과 보고를 해야 하지만, 최근 10년간 이를 지키지 않아 610억 원의 국고가 회수되지 못했는데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
- 감사원의 시정 요구가 있더라도 기관들이 이를 따르지 않고 뭉개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 필요.

■ (대검찰청) 철저한 수사로 ‘조작·공작’의 부끄러운 정치사 청산해야

- 김대업 병풍사건, 김경수 드루킹 사건 등에 이어 작년 대선에서 ‘김만배 허위 인터뷰 사건’ 발생. 그동안 광우병, 천안함, 사드 등으로 여론을 조작하려는 선전과 선동이 반복되었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조작’,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탈북민 강제 복송 사건 조작’, ‘TV 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4대강보 해체 조작’, ‘집값·고용·소득 통계 조작’ 등 많은 조작이 일어났음.
- 국민을 상대로 조작과 공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로 엄정한 책임이 뒤따를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

■ (대법원·서울중앙지법)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소명됐다면서 왜 합의부로 배당? 의도적 재판지연이다

-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위증교사 의혹이 소명된다고 하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은 논리에 맞지 않음.
- 중립성을 오해받을 만한 사건이라면 예정된 선고도 미뤄야 하지만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기일을 당겨서 결정한 것 지적.
-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장동·성남FC 사건 등을 심리 중인 합의부에 배당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의도적 재판지연으로 의심된다고 지적.

전주혜 의원



이재명 방탄에 놀아나는 사법 권력

I 주요 내용

■ (대법원)

-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대법원장 후보 낙마·사법부 공백 사태 규탄, 헌정사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 경고
- 재판 도중 포옹, 당 대표 직을 이유로 한 영장 기각 등 외관의 공정성이 훼손된 황제 재판 지적
- 미제분포지수 악화, 개선되지 않는 재판 지연·적체 지적
- 재판 시간은 교섭대상이 아님에도 법원장의 정책추진서 서명을 요구하는 법원 노조의 권한없는 강요 행위 지적

■ (법무부·검찰)

- 조우형 가짜뉴스로 뒤바뀐 대장동 몸통, 국민들의 표 도둑질 행위에 검찰의 명운을 건 신속·엄정 수사 주문
- 2년째 오리무중인 김만배·권순일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 촉구
- 경찰의 무책임 수사,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 이의신청' 폐지 등 검수완박 폐해 지적
- 현직 검사들의 SNS를 통한 정치 발언에 대한 기준 마련 촉구

■ (감사원)

- 조은석 감사위원의 돌출 행동 관련 검찰·공수처 수사 외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원 자체적인 보완을 주문
- 대국민 집단범죄 文정부 통계 조작, 철저한 감사 및 검찰수사 협조 강조
- 가짜뉴스, 편파방송의 면죄 기관으로 전락한 방심위 관련 엄중한 감사 주문

■ (헌법재판소·군사법원·법제처·공수처)

- (헌재) 공백 없는 유남석 후임 헌재소장 임명의 중요성 및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현재의 제동 역할 강조
- (군사법원) 국회 비준 동의 없이 체결된 9·19군사합의의 효력정지 주문
- (법제처) 노란버스 유권해석을 반면교사 삼아 향후 법령해석 시 사회적 파장까지 고려할 것 당부
- (공수처) 민주당 고발 사건에만 열성, 그럼에도 실적 없는 공수처의 무능함 지적

조수진 의원



2023 국정감사 백서

I 주요 내용

■ 대법원·전국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등

-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관련 팩트체크
- 사법부 공백으로 인한 이재명 재판 지연 지적
- 이재명-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규명 요구

■ 법무부

- 대장동 인터뷰 공작 사건, 공모·배후 철저한 수사 촉구
- 이재명 검사사칭, 위증교사 등 권력형 중대범죄 수사 촉구
- 文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철저한 수사 촉구

■ 감사원

- 국민피해로 이어진 文 정부 통계조작 감사결과 확인
- 文 정부 사드배치 고의 지연 의혹 감사 촉구
- 文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인상유보 감사결과 확인

■ 헌법재판소·법제처·군사법원·공수처

- 더불어민주당의 부당한 '탄핵 남발' 지적
- 공수처 설립 이후 성과 등 운영 전반 지적
- 박정훈 前 해병대수사단장 항명 파문 팩트체크

■ 대검찰청·및 전국 고등·지방검찰청 등

- 이재명 법카유용 목인 사건 수사 촉구
- 대장동 인터뷰 공작 사건, 공모·배후 철저한 수사 촉구



제3부

상임위 의원별
주요성과

정무위원회

윤한홍 의원



금융 분야의 민생현안 적극해결 주문, 국가의 근간을 흔들었던 文정부의 만행 지적

I 주요 내용

■ 금융 민생 최우선으로 행진 국정감사

- 개미투자자 울리는 공매도 금지,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및 제도개선 요구
- 은행권이 15조 판매한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위험, 불안전판매 없었는지 점검하고 시장 혼란에 대비할 필요
- 여전히 이자장사·돈잔치 중인 은행권,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없어
- MZ조폭·마약유통책의 자금세탁 통로로 이용되는 가상자산,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자금추적 필요

■ 文정부의 ‘내 편 보호’, 친북세력·공산주의자를 독립유공자로 둔갑

- 文정부가 개정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으로 43명 신규 서훈 → 북한정권 수립 동조 이력 등 부적절한 인물 포함
-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 조속히 개정하고, 논란 있는 서훈자 재검증 필요

■ 文정부 통계조작으로 오염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료

- 공신력을 바탕으로 곳곳에서 사용되는 출연연 연구자료가 조작통계로 오염, 전수조사 및 대책 마련 필요
- 통계조작이라는 중범죄에 연루된 강신욱 전 통계청장,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여전히 재직 중

■ 무리한 기업결합으로 손실 끼치고, 탈원전으로 손실 입은 산업은행

- 실현 가능성 없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 합병 시도로 기업가치 하락 → 산업은행 손실, 국가적 손실로 이어져
- 文정부 탈원전으로 인해 한전 최대주주인 산은의 BIS비율 하락 → 현물출자·후순위채 발행으로 국민 세금 지출, 기업지원 여력 감소

강민국 의원



민생과 국익의 입장에서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I 주요 내용

■ 민생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올리는 대출금리 문제를 지적,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리 인하 검토 답변을 얻어내다! (금융위)
- 6년여간 손해액만 7,683억원에 달하는 외국인 실손의료보험, 내국인들 부담 가중시키는 외국인 실손보험에 대한 금융위의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촉구! (금융위)
- 국민혈세 3.6조원이 투입된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 합병 사업, 경쟁국의 기업결합 심사 장애 요인 진단과 자금 회수 및 국익을 위한 산업은행의 적극적 노력 당부! (산업은행)

■ 상생과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공정위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 골목상권 침해 여전한 기업 카카오의 독과점 실태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 촉구 및 카카오의 추가 조작을 포함해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엄정 대응 요구! (공정위, 금감원)
- 현대중공업이 쏘아올린 조선업계 인력빠가기 악순환, 공정위에 조선업계에 대한 전반적 조사 요구! (공정위)
- 국내 브랜드 도용 중국산 가품 매개지로 전락한 알리 익스프레스에 공정위의 강력한 대응 촉구! (공정위)

■ 문재인 전 정부의 실정 및 정책 과오를 바로잡았습니다!

- 文정부 때 임명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 특위 위원들의 지정과제 셀프 용역 문제 지적 결과 관련자 수사 의뢰되다! (경인사)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부정 사용에 대한 진상규명 및 전현희 위원장 시절 권익위원회의 이재명 공익신고자 늦장 구제 지적! (권익위)
- 기초생활수급비 때문에 보훈급여금을 포기하는 유공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 文정부에서 시행된 '보훈급여금 선택적 포기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국가보훈부에 요구! (보훈부)

김희곤 의원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 신속하고 원활한 국정과제 이행 촉구 및 실효적인 민생정책 대안 제시

I 주요 내용

■ 윤석열 정부 규제 개선 1호 안건(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추진 촉구

- 지난 국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개선’ 관련 후속조치 점검 및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제도개선 촉구
- ‘휴무일 및 영업제한 시간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금지’ 규제로 인한 오프라인 대형마트와 온라인 유통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 구조 어려움 강조
- 정부 주도로 상생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수차례 상생협의체 회의를 열어 상생협의를 마련한 것은 큰 성과지만, 민주당의 개정 반대로 규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

■ (민생) 가맹점주 상대 고리대부업 수준 갑질 문제 지적

- 공정위 표준정보공개서 내용 중 지연이자가 10~20%를 부과하고 있어, 가맹본부 대부분이 지연이자율을 20%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
- 법정최고금리가 20%인 것을 감안하면, 지연이자를 20%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들에게 매우 큰 부담임
- 가맹점주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체계 전면 개편 요구

■ (규제개혁)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개선

- 혁신금융서비스 1단계의 ‘수요조사 신청’은 법적근거도 없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연시키고만 있어 기업에게 ‘희망고문’이 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
- 금융위원회는 향후 수요조사를 없애고 컨설팅을 거쳐 곧바로 정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여 제도개선 조치 성과
- 매일경제신문 지면기사(10.23) 등 다수 언론 보도

■ (민생) 백내장 실손보험금 분쟁 관련 제도 개선

- 과잉수술로 인한 지급심사 기준 강화 이후 정당한 수술에 대해서도 최근 특정 법원 판례만으로 보험금을 부지급하여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
- 금감원은 금융위, 보험업계와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해 연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여 제도개선 조치 성과
- 머니투데이(10.17), KNN(10.17) 등 다수 언론 보도

송석준 의원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I 주요 내용

■ 대외경제여건 악화 속 경제활력 제고 방안 제시

- (규제개혁 촉구) 자연보전권역 등 지나친 입지규제로 기업투자과 활동이 제약되어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만큼 입지제한 완화로 신속하고 확실한 경제활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 지적
- (공정위 환급 과징금 과다 발생 지적) 불필요한 과징금 부과로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행정력·혈세 낭비 방지 필요
- (정부출연기관 국정과제 지원 촉구) 정권 변동기 전 정부 국정과제를 연구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체계적인 국정과제 지원 촉구

■ 서민금융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 (가계부채 체계적 관리) 중장기적 관점에서 차주단위 DSR 규제 정착 등을 통한 양적 구조개선 및 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대 등을 통한 질적 구조개선 병행 추진
- (개인사업자 대출 연착륙 방안 필요) 경기부진 지속 시 자영업자·금융회사 부담 가중 우려됨에 따라 연착륙 방안 마련 필요
- (중저신용 취약 노년층 대책 시급) 타 연령층 대비 소득 기반이 취약하여 향후 금리 인상 시 원리금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노년층을 위한 정책 필요
- (은행의 자율적 포용금융 확대 유인 마련) 은행들이 금융 취약층 대상 중저신용대출을 자율적으로 확대하도록 예대율 제도 개선방안 제시

■ 사회적·민생밀착형 문제에 대한 개선요청

- (은둔청년 문제 지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은둔청년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사회복귀정책 및 중장기적 지원체계 마련 촉구
- (온라인플랫폼 분쟁조정 증가)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방지 및 전자상거래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 필요
- (결혼준비대행 서비스·인터넷 강의·캠핑장·택배 등 관련 피해 대책 촉구) 지속적 피해예방홍보·체계적 관리 등 소비자피해 방지 대책 마련 필요



2023 국정감사

I 주요 내용

■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문제, 공정위가 엄정하게 판단해야

- 독점적 사업자의 지위에서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협력업체들에게 다른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공정위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리브영은 중소 협력업체들에게 탄원서를 강요하고 있는 점을 지적함

■ 온투업 연체율 급상승, 소액 개인투자자 피해 대책 마련해야

- 온투업권 전체 경영지표를 살펴보면 연체율이 9.5%에 육박함.
- 시중은행의 경우는 연체율이 0.5%가 넘으면 위험하다고 판단해 그 이하로 관리하고 있는데, 연체율 9.5%는 꽤나 심각한 상황임
- 더욱이, 온투업계는 일반 시중은행과 달리 총당금제도로 없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 높음. 이에 대한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함

■ 지하철 개찰구 통과 시 우대권 비프음 차별, 권익위 살펴봐야...

- 사용자의 입장이 아니라, 철저하게 공급자의 시선에서 통제하고 감시하고 위해 경로우대, 장애인, 국가유공자 우대용카드는 개찰구 비프음과 할인바 색상을 통해 차별화되어 표시되고 있음
- 어르신과 국가유공자, 그리고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것을 지적함

■ 차액가맹금으로 배채우는 가맹본부, 법 개정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시급

- 가맹점주들이 부담하는 차액가맹금(가맹점주 구매가격 - 도매가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관련 법안 개정안 발의

윤주경 의원



사회적 약자 보호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정책 신뢰 회복

I 주요 내용

- 생활고로 범죄에 내몰리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를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예우 및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 / 보훈부와 독립기념관 국외출장 간 자료수집 방법 개선 및 수집자료 미인계자에 대한 문책
- 검경수사권 및 대공수사권 전환에 따른 치안 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 및 경찰 '직급 인플레' 개선방안 마련 / 문재인 정부 국제행사시 재정관리와 외국인 유치 등의 미흡사항을 지적하고, 사전심사와 사후검증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
- 공정위 심의과정에서 위법성까지 인정시 과징금 감경 및 즉각적인 행위중지를 요구,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고시 개정 예정 / 하도급거래의 실질적 주체가 국내기업일 경우 적극적인 해석 및 집행을 통해 하도급업체들을 보호해 줄 것을 주문
- 본인부담상한제로 실손보험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음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에 착수할 것을 촉구 / 공매도 관련 개인과 기관·외국인간 형평성 제고 및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증권시장, 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소통 강조
-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 관련, 투자자 보호 및 국부유출 방지를 위한 기초자산 회수방안 마련 촉구 / 발달지연 보험금 부지급 사태 관련, 보험사의 자의적 판단이 보험금 지급을 좌우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관리 방안 마련 요구
- 국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비은행금융기관에도 중도금대출 보증 제공 /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팩토링제도 이용요건 완화 및 할인율 인하 / 나라사랑대출을 받은 국가유공자는 특례보급 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촉구
- 공익제보자 구조금 지급결정의 복잡한 절차, 장기간 미지급, 횡수 및 기간 제한 없이 연장 가능한 법적 사각지대 지적 및 개선 요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택배업계가 마련한 '운송장 개인정보 자율보호 방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바, 개보위가 직접 개인정보보호 운송장 개발 및 보급 주문 / 안심번호를 사용해도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바, 양방향 안심번호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주문 /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에 대해서 일정 수 이상의 개인정보 전담인력을 확보하도록 주문.
- 불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국책연구기관 대상 경영 평가 방법 개선 요구

윤창현 의원



“경제부터, 민생 먼저” 생활 밀착형 질의 ‘금융전문가’ 타이틀 빛났다

I 주요 내용

■ 고비용, 불공정 애플페이 바깥사다

- 회사 모바일 출입증을 실행해도, 타사 페이를 실행해도 강제 실행되는 애플페이…아이폰 사용자 불편 가중
- 환율 고려해도 유독 한국만 비싼 아이폰 출고가격 문제 제기
- 일반 신용카드 대비 애플페이 건당 적자율(합계 수수료율) △0.46%…애플페이 사용 증가할수록 현대카드 수익 구조는 악화. 일반 고객에 부담 전가 우려
- 소상공인은 애플페이 사용을 위해 새로운 전용 단말기 구입해야 하는 문제 지적하며 개선방안 마련 촉구

■ 동학개미 울리는 쉐들러의 불공정 행위 의혹, 금감원의 철저한 조사 촉구

-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이자 인수 시도 중인 쉐들러는 공시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소액 주주들을 혼란에 빠뜨렸고, 같은 날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하여 현대엘리베이터 주가 폭락 사태 야기. 이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액 최대 927억원
- 쉐들러와 A사모펀드 간 통정매매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소액주주의 막대한 피해를 유발한 쉐들러의 불공정 행위를 밝힐 수 있도록 금감원의 철저한 조사 촉구

■ 청년 기준 나이 상향 건의

- 청년 시기에 행해지는 취업, 결혼, 출산 등을 하는 평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 정책 수요 대상의 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청년기본법상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청년 나이를 제한하고 있어 많은 청년들이 혜택 범위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
- 청년 기준 나이를 현행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매년 1세씩 늘려 더 많은 청년들에게 정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 기준 나이 단계적 상향 건의

입법 추진 中

최승재 의원



중소상공인 기술/아이디어 탈취 빅테크 네이버 최수연 대표 소환 정치공작에 활용된 문재인 전현희 권익위 공익제보자 방탄 문제 문재인 정권의 빚 장려 소상공인 부채 부실 문제

I 주요 내용

■ 빅테크 기업 네이버 최수연 대표 증인으로 세워, 중소기업 기술/아이디어 탈취 문제 지적, 뉴스제휴 불공정 약관 문제 지적.

- 대형플랫폼의 공공재 인식과 사회적 책임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 요구
- 공정위에 대한 포털사업자 자율규제 여부에 대한 검토주문

■ 문재인 정권 정치공작에 활용된 전현희 권익위원회, 공익제보자라는 방탄복을 입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커녕 포상금 5천만원 지급까지!

- 문재인 정권 핵심인물인 조국, 임종석 등과 친분이 깊은 윤규근 총경의 버닝썬 폭력사건과 마약사건에 개입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권력형비리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자, 불법 포렌식사업자가 갖고 있던 연예인 음란물을 사건화해 몰타기 하는 등, 정권과 맞닿아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권익위원회의 비실명 대리신고제 악용.
- 윤지오, 조성은, 한모씨 마약사건까지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정 정치진영이 정치공작을 위해 사건을 조작하고 제작, 기획사는 사조직으로 전략, 공익신고를 가장해 범법행위자를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고, 5천만원 가량의 포상금까지 지급한 전현희 권익위원회에 대한 문제 제기.

■ 문재인 정권, 소상공인에 빚 부추겨 금융권에 정부보증 무위험 대출로 이자 장사 특혜 문제와 BNK경남은행 부동산 PF 3천억원대 횡령 등 원인으로 금융당국 출신 퇴직자 대거 포진 금융권 내부통제권 마비 문제 지적.

- 한국은행 산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위험률에 따르면, 취약차주의 연체위험이 큰 폭으로 상승, 실제 지역신보의 소상공인 대위변제금이 23년 8월말 1조원을 넘고, 22년 5,076억원 대비 2배를 넘어섬.
- 소상공인 부실률이 폭증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와 경기부진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신 빚으로 버티라고 등 떠밀다시피 대출만 늘림.
- 현재 전체 자영업자 약 556만 명 중 307만 명이 빚을 지고 있고, 약 33만8천 명(11%)이 3개 이상의 다중채무자로, 시한폭탄, 천덕꾸러기로 만들.
- 게다가 정부는 금융사고 발생 시, 지속적으로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지만, 금감원 출신 퇴직자의 김앤장 등 재취업으로 인해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관리되기 어려운 구조에 대한 문제점 지적.



제3부

상임위 의원별
주요성과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의원



단협의 불법 행위와 現 장권 사책 협조에 미흡한 공공기관 지적

I 주요 내용

■ 전국 불법 농성천막 77곳, 민노총 상반기에만 12곳 설치

- 전국 무허가 농성천막 77개소, 그중 22곳이 민노총 주도·주관
- 천막 설치 경과일이 3,318일에 달해 불법 설치 햇수만도 무려 10년.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나, 법을 훼손하고 시민의 일상에 지장을 주는 불법 시위 방식은 지양되어야 함. 시위가 곧 특권이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

■ 불법단협 공공기관, 자율개선 36곳 중 7곳에 불과(19.4%)

- 2023년 5월 기준, 불법 및 불합리 단협으로 적발된 공공기관 중 자율시정 추진 기관은 36곳 중 7곳에 불과.
- 28곳은 자정조치가 없어 고용부가 노동위원회 의결을 요청. 이 중 19곳(67.8%) 상급단체가 민노총.
-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 혹 불합리 규약 소지의 규정 다수 존재.
- 공공기관이 특권노조에 의해 불공정하고 위법 조항으로 규약을 채운 실정. 하루빨리 불합리 단협을 시정해야 할 것.

■ 호화 집무실 1년 지나도 안 줄인 공공기관 54곳(27.4%)

- 1년 전 尹의 ‘공공기관 혁신 주문(과하게 넓은 사무공간 축소), 관련 기관 4분의 1할 이상(197곳 중 54곳)이 미이행.
- 면적 축소에 지지부진한 공공기관의 경우, 여전히 文정부 인사 혹은 임명자가 기관장으로 재임 중.
- 단순 고의로 정부 정책에 비협조적이지 않도록 혁신의 고삐를 죄어야 할 것

류성걸 의원



민주당, 경제폭망 기우제 멈춰라

I 주요 내용

■ 민주당, 경제폭망 기우제 멈춰라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평가 시리즈 ‘We Crashed(위 크래쉬드: 우리 경제·민생은 폭망했다)’를 3주간 총 8회에 걸쳐 공개
 -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 ‘내로남불’식·‘견강부회(牽強附會)’식·‘중맹모상(衆盲摸象)’식 현 정부 트집 잡기
- 사례1) ‘23년 7월 생산·소비·투자 감소만을 근거로 경기 폭망 주장
 - 문재인 정부 5차례나 경제폭망
 - * 트리플 감소 시기(문재인정부) : ‘17.10월 ’18.9월 ’19.2월 ’19.6월 ’20.2월
- 사례2) 文 정권에 유리한 기간을 설정한 후 현 청년일자리 상황을 비판(‘청년 일자리 폭망’ 등)하거나 文 정권도 마찬가지였던 남녀임금격차와 같은 것을 마치 현 정부에 와서 새롭게 발생한 것처럼 주장(‘여성안전 절망’, ‘생활물가 폭망’ 등)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도입취지 퇴색

- 제도 시행후 예비타당성 평가가 이루어진 항목 16건, 면제된 항목은 43건(2.7배)
- 평가 면제 규모는 총 14조9,930억원으로 실시된 항목의 13배(1조1,458억원)
- 매년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사유로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되는 항목은 점검해야

■ 공공기관 도덕적해이 극심, 엄정관리 필요해

- 최근 3년간 징계받은 공공기관 직원 204명, 16.7억원 성과급 잔치
 - 징계 직원 1인당 208만원~6천915만원 성과급 지급…환수는 고작 8건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87곳 중 12개 기관(공기업 5곳, 준정부기관 7곳), 징계자에 대한 성과급 제한규정 불비
- 국민의 혈세를 제 ‘주머니돈’처럼 사용하는 행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을 엄정 관리해야 함

김영선 의원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중심 국정감사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부터 ‘취약계층 실효적 지원대책’까지!

I 주요 내용

■ 文정부 대표적 실정, 방만운영으로 인한 국가채무 급등 지적

-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게 함에 따라 2021년 61조, 2022년 52조원의 과다 세입이 발생하였음에도, 국가채무를 갚는 데 쓰지 않아 나랏빚으로 쌓이는 국고채 순발행 규모는 2019년 44조5000억원 규모에서 2021년 120조6000억원까지 증가한 실태를 지적

■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장려세제 소득기준 조정방안 제시

- 최저임금 상승,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명목소득액 증가에 따라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수급을 위한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지급 후 환수한 금액이 5년간 317억원에 달하는 실태를 지적하고 장려세제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제시

■ 6년간 35조원 남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방교육청 방만운영 지적

- 저출산 심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청에 의무 교부되도록 하여 연평균 4.9조원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미래 인구·후속세대지원제도’로 개편하여 인구위기 극복에 활용할 수 있는 신규 자원 확보 방안 제시

■ 방위산업 등 미래먹거리 전략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방안 제시

- 모험자본의 투자, 수출금융을 통해 방산분야 혁신기업 육성, 방산기업의 기술개발, 수출확대 등의 자생적 혁신을 유도하고, 특히 대형무기체계 중심 구조를 초월해, 방산부품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산기업 집중도가 높은 지역에 방위산업수출금융 특화 지원센터 ‘한국수출입은행 방산금융지원센터’ 설립 방안 제시

박대출 의원



‘적반하장’ 왜곡·선동에는 팩트로 증명! 경제 현안과 국민 생활 세심히 챙긴 민생국감!

I 주요 내용

■ 소득통계, 고용통계, 집값통계 조작까지… 文 조작 정권 ‘천태만상’ 폭로!

- 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부서 실무자들, 2배속 승진(조선일보, 박대출 의원 자료인용)
- 文정부서 통계청 직원 이례적 靑 출장…고용·가계 통계 담당자 21차례 방문(TV조선, 박대출의원 자료인용)
- 한은 지역본부 보고서 557곳에 ‘통계조작 부동산 자료’ 쓰여(문화일보, 박대출 의원 자료인용)
- 기타 文 통계청, 통계조작 의혹 최초 제기 당시, 반박 보도자료 ‘설명자료’도 조작(조선일보, 박대출 의원 발언인용) 등

■ 과도하고 경직된 현장규제와 지역현안, 생활불편 짚어낸 민생 국감 실현!

- [한국은행 ‘십원빵’ 판매 제재] 국감장에 경주 ‘십원빵’, 박대출 “한국은행 사용금지 제재, 탁상행정” (문화일보 등, 박대출의원 자료인용)
- [국세청 중고거래 과세 기준 비공개] “중고거래 과세, 대외비 ‘과세편의주의’ 아냐?”…김창기 “플랫폼에서 자료 취합 중”(세정일보, 박대출의원 자료인용)
- [국세청 플랫폼 사업자등록증 도용 사기 방지] 국세청, 플랫폼의 ‘사업자 명의도용’ 방지 시스템 마련 검토(세정일보, 박대출의원 자료인용)
- [기재부 남부내륙철도 적정성재검토 신속 마무리] 박대출 의원 “남부내륙철도 완공 앞당기도록 부총리 협력해야”(신아일보 등, 박대출의원 발언인용)
- 기타 조폐공사 판매 시스템 ‘자동클릭’ 보안 허점 지적, 국세청 ‘사교육 등 민생탈세’ 범법 사례 타 부처 조사 위해 신속공개 필요성 지적 등

■ 적반하장 민주당의 ‘경제정책 왜곡·선동’… 앞장서 반박하고 카운터 펀치!

- 文 가계부채 504조↑, 국가채무 400조↑, 한전·가스공사 천문학적 적자↑, 세금 평평 쓰고 부담은 차기정부 떠넘긴 ‘YOLO 정권’… 민주당의 적자·채무 비난은 적반하장
- 소득세·법인세·K칩스법이 부자감세? 민주당 논리라면 DJ·盧 정부 모두 ‘부자감세’
- 文·李의 ‘현 정부 경제정책 왜곡 발언·거짓말’ 조목조목 반박 등

배준영 의원



아원의 어불성설 '정부 흠집내기'에 대한 정확한 팩트체크와 민생안정·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환 촉구

I 주요 내용

■ 흑색선전과 팩트체크를 철저히 구분하고 헌 정부의 정책 노력 강조

- 사회안전망 외면, R&D 예산 삭감 등 아원의 일방 주장에 내년도 예산안은 ▲ 생계급여 역대 최고 인상 ▲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확대 ▲ 과학계 만연한 R&D 비효율성 구조개혁 등 팩트 체크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약자와의 동행을 강화했음을 강조
-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감소 주장에 맞서 ▲ 前정권 대비 법인세 1%만 인하 ▲ 고소득층 공제 한도 축소 등 명확한 사실 확인과 더불어, 급격한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와 前정권의 비정상 종부세의 정상화 과정임을 확인
- '적폐몰이' 주요 표적이었던 해외자원개발, 사실 수익성도 양호하다는 점을 밝히고(128% 회수 전망) 지난 10년간 자원개발 생태계 붕괴 지적

■ 민생안정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위한 정책 변화 촉구

- 합계출산율이 0.7명, 아이를 하나라도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자녀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급 제도 철폐, 초·중·고생에 사교육비 세액공제 지원 도입 등 정책 대전환 검토 요구
- 저리로 제공되던 '코로나-19 특별 대출'이 종료되자 개인회생·법인파산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위한 대책 촉구

■ 부처·기관의 잘못된 행정 실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 필요성 강조

- 한국은행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가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중국산 로봇구매에 국내 세금이 지원되는 정책 전환 촉구
- 글로벌 해외 법인들의 국내 조세회피 논란과 담배세 예외 적용을 받으며 불법 온상이 된 액상담배 실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 국세청의 과세정보와 분석 노하우를 활용, 민간단체·공익법인의 국고보조금 관리에 나서는 한편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의 투명성 강화 마련 촉구
- 25조 원 규모 폴란드 방산 수출 2차 계약이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한도로 무기한 지연, 시급성 감안해 예외조항을 적용,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

송언석 의원



지난 정부에서의 국가문란 통계조작 행위 철저히 수사하고, 방만해진 재정 운용 정상화를 위한 대책 강구해야

I 주요 내용

■ (통계청) 文정부 통계청, OECD 권고 ‘늑장적용’ 의심! ‘소득주도성장’ 거짓 성과 홍보 때문에 눈치 봤나?

- OECD가 처분가능소득 계산시 경조사비나 용돈 지출 등 사적이전지출을 제외하도록 하는 WAVE7 기준을 적용 권고한 것은 2011년이고, 해외 다른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2016~2017년경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나라는 2021년이 돼서야 해당 기준을 적용했음.
- 통계청은 늑장 적용에 대해 2017년 당시 있었던 가계동향조사 개편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문제는 이후 다시 개편이 있었던 2019년에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2019년 국정위 회의록에 나와있듯 당시 적용 시기가 한차례 정해졌었으나, 이 시기가 2021년 이후로 변경되었고, 그 변경 사유는 사적이전지출 반영이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것임.
- 이 때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란,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라며 자화자찬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던 상황에서 WAVE7 적용시 나타나는 분배 악화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악영향 때문으로밖에 볼 수 없음. 이에 의도적 늑장 적용은 아니었는지 철저한 감사와 수사가 필요

■ (기재부) 文정부 때 코로나19 대응조치로 국가채무 증가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

- 민주당은 文정부에서 국가채무가 급증한 이유를 코로나 대응때문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각년도 예산안 및 결산안 분석 결과, 실제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 증가한 국가채무는 최대 90.7조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늘어난 국가채무 415.6조원 중 이를 제외한 324.9조원 가량은, 코로나 대응 때문이 아닌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 때문인 것임.
-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의 국가채무 폭증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재정운용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국세청) 고액 조세행정소송에서의 높은 패소율, 확정채무 변상 위한 상급적 인건비 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 국세청이 매년 고액 조세행정소송에서 높은 패소율을 기록하며, 이를 감당하기 위해 최근 10년간 523억원 규모의 금액을 인건비 비목에서 상습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 이는 애초부터 매년 인건비를 과다계상하여 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국세청은 매년 예상되는 결원률에 대한 예측 가능한 잉여 인건비를 이용했다고 밝혔지만, 결원률이 매년 높게 나타나는 것 또한 큰 문제임.
- 이에 인건비를 포함한 적정한 예산편성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



경제구조대혁신 : 정책 유효성 제고, 사회적 약자 동행, 국가 경쟁력 강화

I 주요 내용

■ 국가 정책의 근본·유효성 제고는 신뢰성 있는 통계로부터

- ①통계청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서 목표값 도출을 위한 가중치 임의 변경, 10가지 시나리오로 통계값 도출(통계조작)한 것에 대한 시정요구. ②통계의 연속성·신뢰성을 위해 조작되지 않을 경우의 제대로된 통계값을 도출하여 보정
- 한국은행은 9월 법정 보고서인 '통화정책실행보고서' 부동산 통계의 해외 민간 사이트의 신뢰성 없는 부동산 통계(조작가능, 표본 55명)를 사용. 이에 대한 시정요구

■ 재정적자 확대와 국가채무 증가는 통화정책 유효성까지 저해

- 한국 시장금리는 한은의 기준금리보다 미국 금리 추종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통화정책 유효성이 적절한 지에 대한 점검 필요
- 미국 중립금리 논쟁은 무분별한 재정적자·국가채무가 통화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 대해 통화·재정당국의 협조 절실

■ 수출경쟁력·해외 첨단기술 취득 강화와 주류시장 무역적자 1조 3천억 개선 필요

- 방산·원전 수출 및 대규모 해외 공사 수주를 위한 수출지원금육을 위한 수은 자본금 확충 필요 (30조원 까지)
- 공장 이전과 같은 그린필드형 투자에 비해 국내 일자리 보전에 유리한 해외 첨단 기술 보유 기업과 공동 기술개발·기술 취득을 위한 지분투자 활성화 촉구
- 국내 주류 시장 무역 역조 1조3천억원 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산 주류가 해외 주류에 비해 역차별 받는 세제 개혁(기준판매비율 도입 필요), 저효율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등 보조금 요구
- 비철금속·희소 금속 등 전략비축물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비축 요구

■ (국세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 이자율 인하 및 근로장려금 개선 필요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총체납 인원은 해마다 큰 폭 증가 중, 학자금 대출 연체 이자율은 최대 9%로 4대보험의 최대연체이율인 5%를 크게 상회. 이에 국세청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학자금 대출 연체 이자율을 대폭 인하 필요
- 근로장려금 산정에 있어 재산 기준(2.4억원)에 부채도 포함. 임대차 3법 이후 전세값 폭등 발생, 이를 전세자금대출로 충당해 전세값이 2.4억원 초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에서 제외

■ 마약 단속 장비 현대화·불법 도검류 등에 대한 통관 기능 강화 필요

조해진 의원



'저소득 고령 농업인 소득 보장' 및 '할당관세 증량 지속 추진' 시정 요구

I 주요 내용

■ 저소득 고령 농업인 소득 보장 위한 제도 개선 마련 요구

- 저소득 고령 농업인들은 턱없이 높은 농지 가격 평가를 받음
- 이로 인해 기초생활보장비나 기초노령연금 수급에서 불이익 받음
- 도시에 있는 토지는 투자대상이면서 용도 전환이 쉬운편
- 농촌은 사실상 영농 외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음
- 특히, 용도 전환도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임
-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저소득층 생활수급자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만큼 확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

■ 정부의 할당관세(TRQ) 증량 심사의 부실 문제

- 농림축산식품부가 TRQ 증량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할 때 '시장접근 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자료들을 모두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일부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가 많음
- 수입물량이 늘어나 가격이 떨어지면 농민들은 빚더미에 오르고, 심한 경우 폐농 위기에까지 몰릴 정도로 TRQ는 농민의 생존이 걸린 절체절명의 문제
- 기재부는 농림식품부가 증량 신청을 할 때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하게 하고 농민들의 상황을 제대로 꼼꼼하게 살펴서 농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

■ 할당관세(TRQ) 제도의 존폐 고민 필요

■ 늘어나는 농촌 빈집에 대한 국가 차원 관리 필요

■ 해외 한시노동자 유입 확대 필요성 요구

■ 채소가격안정제 사업비 부담금 예산 확보



과거사례 타산지석 삼아 국가재정 낭비되는 곳 없도록 해야

I 주요 내용

■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필요

- 예타에 대한 비판① : 지방에 불리(인구가 적을수록 경제성 분석 불리)
- 비판② : 교통인프라 사업에 불리(초기 투입 비용 높아 B/C분석 불리)
- 비판③ : 예타 통과해도 실패사례 발생(영암F1, 용인·의정부 경전철, 인천국제공항KTX노선 등)
- 비판④ : 예타에 소요되는 시간 증가(평균조사기간 18.4개월로 지침(9개월)보다 2배이상 초과)
- 비판⑤ :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 가능 등(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한꺼번에 23개사업, 24조원 예타면제. 총선용 남발이라는 비판 거세게 받음)
- 대안 : 심사기준의 무리한 완화나 면제 남발 금지, 예타 전문인력 확충으로 정확도 높이면서 시간도 단축, 지역발전에 필수적인 사업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면제로 사업진행 속도 개선 등
- 과거사례 분석과 대안 검토 등으로 예타시스템 고도화 주문

■ 과거 대형국책사업 재정낭비 심각,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코로나 이전까지 김포, 김해, 제주, 대구 4개 공항 제외한 10개 공항은 한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음(3천억원 들인 무안공항 활주로 이용률 0.1%, 울진공항은 개항도 못하고 비행교육훈련원으로 변경 등)
- 08년 이후 개통된 10개 고속도로 중 예측통행량 만족한 곳은 3개뿐(2조3천억원 들인 남해선의 예측 대비 이용률은 36%에 불과)
- 사업비 819억원, 추가국비도 계속 들어가는 경인항은 가동률 6%에 불과
- 영암 F1경기장은 총사업비 4,600억원 들였지만 3년만에 중단
- 대형국책사업 진행과정을 빠짐없이 기록해서 백서를 제작하고, 기재부 중심으로 지속적 모니터링 가능한 시스템 구축 주문

제3부

상임위 의원별
주요성과

교육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의 성공적 추진 및 교권수호 노력

I 주요 내용

■ 교권침해 관련 전임정부 문제점과 현 정부의 교권보호 노력을 부각

- 교권 추락의 정치 사회적 배경이 지난 10년간 진보 교육감 과잉에 따른 균형의 상실에 따른 문제임을 지적(조희연 50% 인정한다고 답변)
- 의정부 호원초 교사의 연속적인 사망과 관련, 당시 경기교육감인 이재정 교육감을 출석시켜 교권 침해 방치 문제 제기(이재정 도의적 책임인정)
- 정규교사의 담임 기피와 기간제 교사의 담임 부담 비율 과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담임 교사의 업무부담, 민원 과중 문제 지적
- 도서벽지 등 농어촌 지역에 주로 배치된 교직원 관사의 노후화 및 시설 부족 등 교사복지 개선 촉구

■ 교육의 이념적 편향성 지적과 국가정체성 회복을 위한 교육 강조

- 전남 능주초 정율성 우상화 작업에 대한 문제 제기와 동상, 벽화철거 요구(능주초는 화순군청에 철거 요청했다고 답변)
-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판결 받은 해직된 교사의 부당 특별채용 관련 당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및 특별채용된 교사를 상대로 문제점 지적
- 친북편향 통일학습교재 편찬한 전 강원도 교육감 민병희를 출석시켜 문제점 지적
- 세종시교육청에서 제작한 통일교육자료의 친북편향성 문제 지적

■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과목(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문제 등 지적
- 국민건강·생명과 직결된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붕괴를 막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에 대한 국립대병원과의 공감대 형성

■ 중등직업교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시

-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해 교육제도적 관점을 넘어 사회경제적 관점, 노동시장의 본질과 구조적 측면, 기술교육과 산업과의 연계성 등 종합적 관점에서 재점검과 정교한 분석 촉구

권은희 의원



학생·학부모·교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국정감사

I 주요 내용

■ 조립식교사 제도 및 안전성 문제

- 조립식교사가 혁신제품으로 지정되고, 카탈로그 계약방식이 인정되면서 △유창이앤씨 △플랜엠 △엔알비 3개사가 구매시장과 임대시장을 독점, 감사원 감사 필요
- 안전에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조립식교사가 도입되면서 부실시공 적발, 안전성 관련 전수조사 및 제도개선 필요

■ 학교용지 해제

- △대전 용산지구 △경기 의정부 고산지구 학교용지 해제 후 과밀학급 발생, 안전성평가 없이 조립식 교사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및 건강권 침해
- 경기, 충북, 전남 등 일부 지자체 학교용지 해제 관련 위임전결을 살펴보면 국장 단독 전결 사항으로 되어있으므로 결재권자 상향 혹은 위원회 통한 심의 등 보완 필요

■ 직업계고 NCS(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선

- 직업계고는 고교학점제 실무과목 II와 고시외 과목 편성 시 국가직무능력 표준의 기준에 맞게 과목을 편성해야 하나 △NCS학습모듈 활용도 부진 △교원의 업무 과중 △직업계고 학생의 학습 능력에 맞지 않는 교재가 문제임을 지적
- 이에 학습모듈 개선과 직업계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재 개발, NCS 학습모듈 중 반도체 및 첨단산업에 대한 개발 및 보완이 요구됨

■ 4세대 나이스 오류

- 현재 선생님들에게 행정업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4세대 나이스의 오류발생 원인이 허술한 기술평가, 유지보수사업자 미선정 등에 있음을 밝힘
-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에 따라 10월 29일, 4세대 나이스 개선을 위해 나이스TF와 현장 교사들이 회의를 개최했으며, 교육당국과 사용자인 교사가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만난 것은 나이스 개통 이후 처음으로 언론에 보도됨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 방향 제시

I 주요 내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재정립

- **(과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경제성장과 세수 확대에 의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0년 49.9조원에서 2030년 88.6조원, 2040년 119.1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은 2020년 911만 원에서 2030년 2,178만원, 2040년 3,618만원으로 증가 → 과도한 교부금 증가로 시도교육청 방만 재정 운영 문제 발생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낭비 사례)** 경남 한 학교에서 통폐합 학교에 지원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 9억 4천만 원을 써서 1인당 6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중3 학생 전원과 교사를 포함한 인솔단 등 153명이 서류업, 미국으로 국외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오는 등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낭비한 사례 다수 → 재정건전성, 책무성 담보하는 방향으로 개편 필요

■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

-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의 필요성)**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2020년 788.8만명에서 2030년 594.3만명으로 24.7% 감소 → 학령인구 감소는 산업기술 인력의 부족과 이로 인한 생산성 감소, 지역 소멸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제10조2에 따라 우리 국민에게는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반고등학교에서도 입학금, 수업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소멸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활용할 필요

■ 부산대 수의대 신설

- **(교육부의 미온적 태도 비판)** 수의대 정원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교육부에 있음에도, 농림축산 식품부의 수의사 수급에 대한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 비판
- **(부산대 수의대 신설 필요)** 부산대가 의생명 융합 교육·연구, 지역방역 등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한 거점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25년 수의대 신설을 위한 교육부의 적극적 노력 필요

정경희 의원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정의가 사라진 교육환경을 정상화했습니다.

I 주요 내용

■ 김치를 파오차이로, 한복을 조선족 옷이라며 중국의 문화공정에 동조하는 한국학 중앙연구원 강력 질타

- 매년 300억 원이 넘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김치를 조선족 음식, 한복을 조선족 옷, 6·25전쟁을 중국이 미국에 대항해 조선을 도운 전쟁이라며 역사 왜곡에 앞장서
-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그것도 “한국바로알리기”, “한국문화 세계화” 사업을 하고 있다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중국의 문화공정을 서슴지 않아
- 역사 왜곡과 관련해 교육부 산하기관 전수조사 요청 및 재발방지책 마련 요구

■ 학생들을 볼모 삼아 사교육 카르텔을 만든 세력 실체 폭로

- 사교육 시장을 움직이는 대형학원가 일타강사들이 수능 출제 교사에게 모의문제를 사들여 수험생 상대로 장사를 해
- 수능 출제 정보를 입수한 일부 카르텔 세력이 모여 그들끼리 돈 버는 구조 만들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
- 교육부장관은 사교육 카르텔을 용서할 수 없다며, 확실히 뿌리 뽑아 공정한 입시 만들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

■ 초중고 학교도서관에 낯뜨거운 음란도서 비치한 서울시교육청 지적

- 학교도서관에 사춘기에 꼭 필요한 성 지식이라며 동물과 성관계, 항문애무, 쓰리썸, 동성애성교를 설명하는 도서가 비치되어 있어
- 2020년 文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나다움 어린이책’이라는 유해도서를 배포했다가 비판받은 뒤 회수한 사례가 있음에도 아무런 개선조치 없었어
- 문제의 도서들이 도서관에 비치되지 못하도록 학부모가 참여하는 별도 조직의 필요성 촉구



안전한 학교 및 학업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 제시

I 주요 내용

■ 학교폭력,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강력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발생 건수
(‘21년) 44,444건 → (‘22년) 62,053건 약 40% 증가
- (‘23년 4월 12일)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주요내용: 학교폭력 전학 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 정시에 반영 등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을 최대 10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등 학교폭력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야

■ ‘안전한 학교 통학로 만들기’를 위해 교육청 특별교부금을 활용해야!

- 최근 5년간(2018~2022) 초등학생이 ‘학교 안’에서 사망한 경우는 총 6명인 반면, ‘학교 밖
(보행)’에서 사망한 경우는 총 49명
- 특별교부금의 적용대상은 학교 안에 있는 학교시설로만 국한시키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이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특별교부금을 아이들의 교통안전 관련기관들과 매칭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

■ 국민혈세 갹아먹는 구멍투성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예산 낭비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사업비로 일부 교직원 뮤지컬 관람, 자격증 취득, 개인 물건 구매 등 국민혈세 편법적 사용 (13개
교육청, 부패예방추진단 운영실태 점검 총 215건, 3억7,154만원 적발)
- 사업비 불법사용자와 중복투자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예산 낭비 없도록 교육부,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제3부

상임위 의원별
주요성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제원 의원



①(방통위)가짜뉴스·편파방송 ②(과기부)R&D예산 비효율 관련 실태 고발 및 대책 마련 촉구 등

I 주요 내용

■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및 공영방송 공정성 회복 대책 마련 촉구

- 유튜브 썸네일을 비롯해 인터넷 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는 가짜뉴스 실태 및 방통위·방심위 신속·엄정한 심의와 규제 필요성 지적
- KBS·MBC라디오 편파방송 실태, 허위사실이나 인신공격에 가까운 유튜브 문제 및 자율적 개선 필요성 지적
 - 허위사실을 사실로 착각하도록 만든 썸네일 사례
 - 일방적 비난만 담아 공정성/객관성을 현저히 결여한 썸네일 사례
- KBS·방문진 관련 왜곡·편향된 내부 운영 구조 및 개선 필요성 지적

■ (과기부) R&D비효율 문제 지적 및 국가 전략기술·신진 연구자 지원 강조

- 기존 R&D 예산 관련 일감 몰아주기, 회계부정, 나눠먹기, 부실업체 선정 등 뿌리깊은 비효율적 관행 및 카르텔 실태를 구체적 사례를 들어 지적하고, 국가 전략기술 개발 및 신진 연구자 육성을 위한 지원 촉구
- (사례 1) 과학기술, 원자력, 국토, 산업 유관 협회·단체 등에서 수년 동안 동일 연구과제를 반복해서 수행 → ‘일감 몰아주기’
- (사례 2) 2015~19년 사이 정책자금 중복 지원 기업 수 106개, 특정 업체에 유사한 R&D 과제를 반복 수주 → ‘R&D 과제 나눠먹기’

■ (과기부) 항우연, 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직속화’ 검토 요구

■ (KISA)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관련 민주당의 근거없는 음모론에 반박

- (민주당 음모론) 국정원의 보안컨설팅 후 선관위 서버에 ‘해킹툴’로 강한 의심되는 점검도구 15개가 발견되었다는 근거없는 주장 제기
- ①선관위 서버에 해당 파일이 존재하는 이유는 보안점검 이후 게시판에 업로드한 파일명을 자동으로 변경하는 선관위 시스템 때문임을 지적하고 ②국정원은 이를 선관위에 정식공문으로 통보했고, KISA도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지적

■ (원안위) 日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철저한 모니터링 및 대응 강조

- 국내 해양·수산물 안전 확보 및 국민 신뢰 확보 위한 위원회 역할 강조

박성중 의원



대선 공작 가짜뉴스, R&D 비효율 등 文정부 적폐 청산 국정감사

I 주요 내용

■ 이재명 대표가 대선 전날 가짜뉴스를 475만 명에 뿌려 대통령 당선인을 바꿔치기하려 했던 천인공노할 대선 공작 시도 적발

-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억울한 진실'이라는 가짜뉴스를 475만 명에 문자 발송하고, 관련 비용 최소 4,800만 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받아 가며 국민을 기만함
-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권리장전'에 따라 가짜뉴스 세력 엄단 조치 촉구

■ 文정부 'R&D 비효율'로 인해 과학기술계 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 질타

- R&D 부실·과다 수행, 부당 수급, 나눠 먹기 등으로 국민 혈세 흥청망청 낭비
- 엄격한 잣대로 R&D 비효율에 대해 구조개혁하고, 과기부 자체감사 실시하여 부정 행위자를 한 명도 빠짐없이 색출할 것을 요청

■ 민주당이 2017년 작성한 '언론장악 로드맵 문건'에 따라 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면서 발생한 '공영방송 블랙리스트' 폐해 지적

- 문정부는 언론장악 로드맵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원 등을 동원하여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진을 퇴출함
- 블랙리스트 피해자의 소송에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을 통해 블랙리스트 관련자에 대한 책임 추궁 촉구

■ 文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초토화된 원전 생태계 지적 및 관리부실로 핵물질이 도심 한복판에서 증발했음에도 이를 방치하며 국민 안전 위협한 안일한 행태 질타

- 문정부 알박기 인사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남아 원전의 '계속 운전'을 방해하는 실태를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엄정한 감사 지시
- 핵물질인 우라늄(U-232)과 토륨(Th-229)이 사라졌음에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은폐하려 했던 한국원자력안전재단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강력히 질타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 및 합당한 처벌 요구

■ ‘우주항공청’의 개청에 사사건건 발목 잡는 민주당 몽니 강력히 비판

- 민주당은 우주항공청에서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해 ‘속 빈 강정’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이를 강력히 비판하고 조속한 합의 촉구

■ 스팸 지옥에 시달리는 국민을 위한 혁신, ‘악성문자 필터링 서비스’ 제안

- 스팸 신고 건수, 2020년 4,245만 건에서 2023년 상반기 1억 5백만 건으로 급증
- AI를 활용해 범죄 목적의 스팸을 자동으로 별도의 문자함으로 저장되게 하여 스팸 피해를 예방하는 획기적인 시스템 제안으로 2024년도 도입 예정

김병욱 의원



국민안전·민주주의 위협하는 가짜뉴스·거짓선동 근절!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의 비위·비리, 감사원 감사 필요

I 주요 내용

■ 국민안전과 민주주의 위협하는 가짜뉴스·편파방송·거짓선동 근절!

-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는 뉴미디어-레거시미디어-정치권이 결탁한 정황이 뚜렷한 조직적 선거 조작 행위. 진상규명과 엄한 처벌 필요
- 윤 대통령 방미 기간 좌파 편향적 인사를 다수 출연시켜 가짜뉴스 확산기·대선 조작 청부업자 역할 자처한 KBS 시사프로 진행자 출연료 공개 요구
- 김건희 여사 등 유명인사에 대한 온라인 스토킹 등 사이버폭력 콘텐츠 제재 방안 마련 시급
- 야당이 SNS 등에서 마치 정부가 연예인 마약 기사로 현안을 덮으려 한다는 식의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은 반사회적·반민주적 테러 행위로 규정
- 5년간 평균 24조3천억 원 규모였던 문재인 정부의 R&D 예산보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R&D 예산 평균이 28조5천억 원으로 더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년도 R&D 예산안 관련 야당의 과담성 주장이 정치공세임을 입증

■ 우주항공청 설립 쟁점 해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으로부터 '우주항공청이 R&D를 기획 및 설계하고 항우연은 R&D를 전담하는 구조'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답을 끌어냄
- 과기부로부터 '우주항공청 설립 시 첫 번째 과제로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항공청의 직속 기관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냄

■ '바이오산업' 주도할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한 연구중심의대 설립 당위성 강조

- 의대 정원 확대, 포스텍·카이스트 등에 공학 기반 연구중심의대 설립 필요

■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의 비위 지적, 감사원 감사 요구

- 유시민 전 장관 누나인 유시춘 EBS 이사장의 문재인 대선 캠프 활동 지적, 업무추진비·관용차 사적이용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
- 탈원전 운동가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文청와대 인사) 임명과정 의혹
- 文정부 낙하산 한국원자력의학원 상임감사 부정청탁 지적, 전반적인 감사 필요

김영식 의원



6G과학기술 강국 달성위한 R&D구조조정, 가짜뉴스 근절, 국민이 안전한 원자력 환경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I 주요 내용

■ 文정부 실정 바로잡기(퍼주기식 R&D예산 및 주먹구구식 정책 추진)

- 문재인 정부의 주먹구구식 R&D확대 지적(2019년 20조원→2022년 30조원)
 - 소부장, 감염병, 디지털 뉴딜 등 성과 無, 예산만 늘리고 질적 성장 無
- 코로나 치료제 개발 셀트리온 522억원 R&D몰아주기와 주가 폭등 지적
- 유영민 전 장관의 무리한 5G 추진과 5G 관련 비상장 주식 부적절한 소유 지적

■ 文정부가 만들어놓은 기울어진 언론 바로세우기

- 예산 삭감 핑계로 일방적으로 임의폐쇄한 문재인 정부 팩트체크넷 비판
 - 편파적 언론 조성 위한 이권 카르텔 지적, 예산 환수조치 등 방통위 조사 중
- 뉴스타파의 포털 퇴출 및 편향적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정상화 촉구
- 포털(네이버, 다음) 가짜뉴스, 여론조작 철저한 조사 촉구
- 네이버 댓글 서비스 정상화 및 제2의 드루킹 사이트 폐쇄 촉구
- KBS, MBC 김만배 대선 공작 허위인터뷰 방송, 국민사와 거부 강력질타
- KBS, 무보직 역대연봉, 방만경영, 편파방송, 자회사 몰아주기 비판

■ 윤석열 정부 원자력 정책 뒷받침할수 있는 국민이 안심하는 원자력 환경 조성

- 삼중수소 위험성 과장·공포유발 기사, 후쿠시마 영상 및 자막 조작 등 가짜뉴스 강력 대응 촉구
- 탈핵단체 출신, 문정부 알박기 인사 김제남 이사장(원자력안전재단), 기관 연구개발 기능 현저히 저하, 신입직원 퇴사 러쉬 등에 책임지고 사퇴 촉구
- 중국원전·북핵 폐기물 대비 서해 종합관리대책 마련 촉구(수립 중)

■ 국내 시장 위협하는 빅테크 갑질 방지

- 법망 피해가는 메타 페이퍼컴퍼니 설립 및 이용자보호조치 부실 비판
- 구글·애플 제3자 앱마켓 설치허용 및 차별금지 필요(사이드로딩 허용)
- 국내 콘텐츠社 길들이는 구글 매출랭킹 즉각 폐지 필요
- 선정적, 폭력적 OTT 콘텐츠 심의규정 및 국내사업자 역차별 방지 마련 촉구

윤두현 의원



포털의 사회적 책임 외면 및 공영방송 정치적 편향성 지적 등 민생·현안·정책 중심 국정감사

I 주요 내용

■ 안하무인 포털과 포털의 방패막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초래한 가짜뉴스 문제 등 언론 생태계 황폐화 책임 지적하고 POST 제평위 준비 촉구

- 네이버와 카카오는 제평위를 통해 자신을 책임을 외주화하고, 여러 비판과 정치적 압력은 제평위가 떠안도록 하는 한편, 소극적인 모니터링으로 광고 수익 창출 등 부도덕한 행위 지속

■ 가짜상품 유통·안전인증 관리 엉망·개인정보 유출 등 총체적 난국,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대해 국세청·공정위·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철저한 조사 촉구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등록 시 판매자의 개인정보가 실시간으로 불법 광고회사에 유출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고, 네이버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 착수 요구

■ 가게통신비 경감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삼성전자에 국내 저가단말 부재 문제 해결 촉구

■ 유튜브 청소년 유해 콘텐츠의 무분별한 노출에 대한 방심위의 소극적 대응 지적

- 유튜브 청소년 유해정보 관련 방심위 심의·모니터링 강화 및 제도 개선 촉구
- (후속조치) 구글 유튜브, 비로그인 검색 시 '청소년 유해물' 차단기능 검토

■ 정부 R&D 연구과제 해외성과 관리 부실 문제 지적

- 정부 R&D 예산으로 개발한 '해외특허' 절반 이상 성과시스템 입력 누락
- (후속조치) 정부, '해외 등록특허 성과 연계 수집' 등 개선방안 검토(국감 지적 후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예정)

■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성 지적 및 공공성·중립성 촉구

- 대선 직전, 'MBC뉴스데스크', 'PD수첩', 'KBS뉴스9' 등 공영방송의 가짜뉴스와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보도 행태 지적 및 공공성 회복 방안 마련 촉구



공정·상식에 입각한 국민을 위한 정책 개선 및 야당 정치 공세 차단

I 주요 내용

■ 공정·상식에 입각한 국민을 위한 정책 개선 제시로 민생 국감 실현

-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수수료 제도적 개선 방안 수립
- 전파진흥원 지원 K-컨텐츠 제작사 임금체불 해결 위한 부처간 협업 구축
- 후쿠시마 농산물 수입 차단에도 불구하고, 이커머스에선 구매 가능해 판매 모니터링 제도 수립
- 방통위 알뜰폰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의무 미이행 개선
- 빅데이터분석기사 시험 오류 및 수험자 보상 제도 개선
- 구글 위치정보 꼼수 수집 관련 약관 변경 추진
- 단말기 가격 상승에 따른 삼성전자 리뉴드(리퍼) 단말기 출시 공표 유도
- 탈북민 방사선 피폭 관련 안정적인 추적 관찰 지원 제도 수립

■ 전 정부 과오 지적 및 부당한 정치 공세 차단

- 가짜뉴스 근절 독려한 전 정권 노력 부각, 방통위·방심위에 대한 야당의 위법 행정 공세 차단
- KBS의 수신료 감소 예상치 오류 및 맹탕대책 반복 지적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정당성 강조
- 방문진 이사회의 MBC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및 MBC 사장 주식 관련 금품거래 의혹 은폐 폭로, 방문진 이사장 해임 정당성 제고
- 방송사의 뉴스 사후 수정 관리 부재에 따른 부실 보도 및 가짜뉴스 확산 가능성 지적, 정부 차원 관리제도 수립
- 과기부의 R&D 예산 효율화 관련, 선택과 집중 차원 정당성 제시
- 취지에도 안 맞는 현금 나눠주기식 사업, 도심 인근에 지원된 농어촌 지원 사업 지적

홍석준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망가진 연구환경과 원전 생태계 비판과 공영방송의 불공정성 개선 지적

I 주요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재인 정부의 주52시간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강행으로 파괴된 연구환경생태계 회복 촉구

- 연구개발예산의 급격한 증가 이후 연구수행포기 건수 증가 지적
- 대기업 연구개발비 세제지원율 확대 및 융합연구 제도개선 위한 조치 촉구
- 연구성과 개선을 위한 IP-R&D 활용 및 국내 연구장비 역량 개선 촉구

■ (원자력안전위원회)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파괴된 원전 생태계의 조속한 복원 주문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2022년 22조 9000억원의 비용 발생 ▲전문 인력의 심각한 공백 발생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증가 및 전기요금 인상 질타
- 2018년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 실패 등 문재인 정부의 초라한 원전 해외 사업 실적 지적

■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의 불공정성과 자유민주주의 파괴를 위한 언론 공작 지적

- KBS1 라디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좌파 진행자 일색 지적
- 편파적이고 불균형한 MBC 방송 질타
-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뉴스버스 이강길 전 대표 인터뷰 내용 허위 보도, 리포엑트 최재경 허위 녹취록 조작 보도 등 허위조작 보도 문제 지적



제3부

상임위 의원별
주요성과

외교통일위원회

김태호 의원



한미동맹 확장역제 실효성 강화 및 기업의 중남미 진출 적극 지원

I 주요 내용

■ 한미동맹 확장역제 실효성 강화 필요성 강조

-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한국 핵무장 관련 언급 사실 지적
- 한국 핵무장 관련 미국 조야의 동향 변화 점검
-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계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필요성 지적
- 뉴욕채널 등을 통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 노력 강조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 미국의 입장과 역할 점검

■ 우리 기업의 코스타리카 국책사업 진출 지원 및 교민 안전 만전

- 중국의 공격적인 중남미 진출 및 제1교역국 부상에 따른 대책 주문
- 코스타리카 인프라 국책사업(정부복합단지, 5G 구축, 수도권전기여객열차)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공관의 적극적인 지원 당부
- 코스타리카의 최근 이민자 문제 및 치안 불안에 따른 교민안전 만전 당부
- 장단기 체류증 발급 지연 문제 해소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성
- 코스타리카와의 교역 확대(디지털정부 협력, 농업분야 협력) 필요성 강조

■ 부산 엑스포 유치 적극 지원 및 파나마 시장 선점 및 협력 확대 필요성

- 부산 엑스포 관련 파나마의 공식 입장 점검 및 유치 지원 노력 당부
- 파나마운하 통항량 제한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점검 및 개선 노력
- 메트로 3호선, LNG중합발전소 등 파나마 공공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 진출 지원 강조
- 한-중미 FTA 효과 및 파나마 건설업 호황 적극 활용 필요성 강조

■ 현안에 대한 여야간 입장 차가 큰 상황에서, 외통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김석기 의원



문 정부와 민주당의 대북굴종 외교·안일한 대북관을 질타하고, 반일감정을 부추겨야 선거에 유리하다는 전략을 가진 민주당의 반일몰이 지적

I 주요 내용

■ 글로벌 중추국가로 실현시킬 윤석열 정부 외교 성과 홍보

- 윤석열 대통령의 용단으로 시작된 한일관계 개선의 결과로 '캠프 데이비드정상회의'에서 '한미일 협력'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짐
-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입지가 확고해지니 오히려 중국에서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경협을 강화하기 위한 호혜적 대화의 창을 열려 하고 있음을 강조

■ 대북전단금지법으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흔든 문재인 정부 질타

- 김영정이 '법을 만들라'고 겁박한 지 4시간 만에 예정에도 없던 브리핑을 자청해 '대북 전단 금지법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한 당시 통일부
- 대북 굴종적 자세로 북한에 잘 보이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짓밟았던 문재인 정부 질타하고, 통일부에 확고한 대북관 제시를 제언함

■ 반국가단체인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민주당 출신 윤미향 의원 질타

-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대한민국을 괴뢰도당이라고 한 발언에 묵시적으로 동조한 윤미향의 의원직 제명과, 철저한 조사를 통한 법적책임 부여 주장

■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유포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뒤에서는 우리 수산물을 맛있게 먹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의 모순 질타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우리 바다에 과학적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
- 독극물, 핵폐수 운운하여 오염수 방류 후 생선을 먹으면 죽을 것 같이 거짓 선동하고, 우리 어민·수산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도 책임지지 않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 질타
-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해외 경찰 주재관 확대의 필요성 강조
- 해외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의 사건사고 건수를 파악하고, 현재 파견 중인 경찰 주재관의 수가 부족함을 확인
- 경찰 주재관의 충원을 본국에 적극 건의하여, 해당 인력을 보충받을 것을 권고함



외교분야에 대한 정책 제언 및 문재인 전 정권의 굴종적 9.19 남북군사합의 지적

I 주요 내용

■ 한한령 압박 여전 : 중국에서 자취 감춘 한국영화·드라마·게임 등 문화컨텐츠 보호·지원 시급

- 2017년 사드배치 이후 계속되어 온 限韓令(한류 콘텐츠 금지령)의 실질적 해제 노력 필요. 지금까지의 외교적 노력성과 미비
- THAAD배치 이후 중국정부의 한국문화 ‘봉쇄’ 피해 여전히 심각. 한국영화, 드라마, 게임 등 문화 콘텐츠에 대한 비공식적 제재가 여전히 유효한 실정으로 지원·보호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함
- 맹목적 애국주의 전랑(戰狼)외교의 수단으로써 ‘한한령’, 향후의 비슷한 압박조치 가능성에 대한 대비 철저 필요

■ 강제징용 관련 외교부 해법, 단기적 미봉책에 불과

- 지금처럼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존재하는 한(4명), 외교부가 원하는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움.
- 강제징용 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상반된 양국 최고법원의 판결이 존재하기 때문
- 제3자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경우 양국간 합의를 통해 국제법을 통한 사법적 해결이 대안

■ 9·19 남북군사합의 대비태세 약화/북한 17건 위반, 재검토 필요

- 2018년 9.19 선언에서 남북이 서로를 향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 선언하였지만, 북측은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음. 합의 이후 북한 17건 위반
- 9.19 평양 공동선언 이후 9·19 남북군사합의 내용은 우리의 대비태세를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굴종적 군사합의 (군비통제 기본원칙 위배, 휴전선 인근 감시정찰 포기)
- 문재인 정부가 희망했던 북핵문제의 진전이 없고, 북측의 군사도발이 지속되는 상황 9·19 남북 군사합의 재검토 필요

윤상현 의원



국민 안전 최우선,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가치외교의 실천을 견인

I 주요 내용

■ 중국의 탈북자 강제복송, 가치외교에 입각한 정부의 구체적인 복송저지 활동 주문

- 탈북어민을 강제 복송한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가치외교를 내세워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복송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 추가 복송을 막기 위해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고, 국제인권기구와 연대해 구금된 탈북자의 구체적 신병을 중국 정부에 제시하여 복송을 저지하는 적극 외교에 나설 것을 주문함.
- 베트남·라오스·태국 등 제3국을 통한 탈북 루트가 재개되도록 제3국 정부와의 협조 관계 구축을 촉구함.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확산 분위기, 레바논 헤즈볼라 개입 상황 대비 촉구

- 자국민 대피 및 레바논 유엔평화유지군(동명부대)의 긴급상황 단계별 대피계획까지 선제적인 대비책 마련 촉구

■ 9.19 군사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력정지 및 파기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점검과 대비책 마련 주문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가짜뉴스 예방 및 수산물 안전성 홍보 강화 방안 마련 촉구

■ 강제징용 해법 진전 필요

- 피해자 중심 해결 원칙을 견지하고 일본 기업이 기금조성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나설 것을 강조

■ 제7광구 개발 협정 종료 대비책 마련 필요

-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2028년 종료 예정인데 국제사법재판소 판례 등 국제적 조류가 한국에 유리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고, 한미일 공동개발 가능성을 포함한 외교적 협력방안 마련 촉구

■ 해외 유출된 우리 문화재의 체계적 환수, 국민적 관심 제고 강조

- 해외에 유출된 우리 문화재가 27개국 22만9,655점인데 반해, 환수된 문화재는 11,034점, 4.8%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문화재 환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치밀한 사전 작업과 전략적 접근을 통해 실질적 환수 및 활용방안을 강화할 것을 촉구

이명수 의원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위한 「외교·통일 내·외실다지기」

I 주요 내용

■ 새로운 외교행정 체계 재확립 위해 외교부 보완 시급

- 2024년 정부예산안 중 외교·통일분야 7.7조원…전체 중 1.1% 수준
- 2023년 정기직제 199명 요청 중 1명 증원, 재외공관 중 임대 47.9%
- 재외공관 신축·개보수 및 고충해결 필요하지만 예산 문제로 진전없어
- (제언) 민간투자국유화 확대·외교타운 건립·퇴직 외무공무직 활용·파견직·비고시·하위직 복지증진 등 사기양양 필요 등 양적확대·질적 내실화 추진

■ 한·일 신뢰관계 구축, 함께 과거사 문제 해결 우선

- 한·일간 「강제징용」·「위안부」·「군함도·사도광산」·「독도」·「관동대지진 피해」·「우키시마호침몰」 등 함께 풀어 나가야할 과거사 문제 적극나서야
- (제언) 한·일회담 안전제시·대위책임론 위주 한국정부 우선지급 검토 등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우선순위로 점차적·조속히 추진

■ 재중 탈북민 복송 문제 점검

- 중국내 탈북민 2,600명(추정) 이중 600명 복송 파악⇒구체적 대응없어
- 中, 탈북민 “난민인정안돼·불법체류자 간주” - 단속·체포 후 복송입장 견지
- 일부 中남성과 결혼한 탈북여성, 성범죄·인신매매 희생양, 자녀들은 버림받아
- (제언) 휴민트·민간단체 활용 현황파악·분석, 당국의 실행가능한 적극적인 노력 요구

■ 한글의 세계화, 「한글학교」 점검 및 일원화 추진

- 2023년 현재 1,462개 학교·14,192명 강사·92,443명 학생⇒코로나 이후 급감
- 세종학당(문체부)·한국어교육봉사(KOICA)·해외대학 한국어교수파견(KF)·한국어 교육강좌(재외문화원), 한글·한국어 수요급증에 따라 관련사업 중복문제
- (제언) 수요급증 대비 사업 확대해야! 단, 사업주체·교육기관 일원화 추진 필요

■ 6.25 참전국과의 우호관계·지원 강화, 「보훈외교」

- 한국과 참전국과의 인적 유대강화·국가간 선린 우호관계 강화·미래 인적 네트워크 강화 등 「보훈외교」 증진 필요성 제기
- [남아공대사관 국감] 6.25참전기념탑 관련, 제1·2차세계대전참전기념탑 속에 “KOREA WAR” 단어만 넣어 활용·관리도 허술⇒현지실사 후 개선조치요구
- (제언) 6.25참전국가간 「보훈·안보협약체 구축」 추진 제안

정진석 의원



정진석 의원, 정부의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I 주요 내용

■ 글로벌 중추 외교 시대, 외교부의 조직과 역할 재구성 필요

- 재외공관 및 전문가 인력 보강,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역할 조정 등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맞는 외교부의 역할과 노력을 강조.

■ 중국의 탈북민 강제복송 대책 마련 필요

- 중국의 탈북민 강제복송은 국제사회가 규탄하는 인권유린임을 지적하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및 APEC정상회의 등 외교무대 주의환기를 통하여 강제송환중단의 촉구가 필요함을 지적.
- 지난 10.24 동해상 탈북 사례는 북한 인권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와는 다르다는 사실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

■ 북한의 권력구도 변화, 김주애 후계자 가능성

- 북한의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의 진수식에 최섉희 외무상이 진수자로 나서고, 북한 정권수립 75주년 열병식에서 박정천 군정지도부장(5성 장군)이 무릎을 꿇고 김주애에게 귓속말을 하는 등 이례적 모습이 포착됨.
- 북한의 권력 지형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김주애가 북한 정권을 이끌어갈 후계자로 지목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지적.

■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세일즈 외교 성과

-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중동 세일즈 외교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
-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와의 협력 강화는 오일쇼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
- 중동국가와 함께 첨단산업과 방위 산업 등 경제·안보·외교 전방위로 지평이 넓어지고 있어 구체적 협력기반을 마련해달라고 당부.

태영호 의원



굳건한 안보가 바탕이 된 평화통일 달성과 글로벌 중추 국가 발돋움을 위한 외교정책 방향

I 주요 내용

■ 中이 北에 강요한 서해 동경 124도선, 정부에서 강력히 이의제기해야

- 중국이 10년 전부터 백령도 서측 해상을 통과하는 동경 124도선을 일방적으로 자기들 작전 경계선으로 선포하고 그 경계 내에서 100여 차례 실탄훈련을 하면서 대한민국 함선이 넘어가면 동경 124도선을 넘어오지 말라 대한민국에 경고하고 있음.
- 이 해상경계는 1962년 김일성과 저우언라이가 합의한 것이고 중국은 현재 대한민국에도 해당 경계를 실효 지배로서 강제하려 하는 속셈임.
- 정부는 국제 해양법에 의거해 강경하고 지속적인 항의를 중국에 하여 대한민국 영해를 지켜야 할 것임.

■ 외교 인력 확대 없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은 불가능해

- 16년간 韓GDP는 2배 증가하였으나 외교관 정원은 30%밖에 안 됨.
- 국력도 커지고 외교 업무량도 증가하는데 타 국과 대비해도 말하기도 힘든 수준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특히 23년 외교부 신규 임용 54명 대비 동년 7월까지 의원 면직 54명이고 퇴직자와 휴직자까지 더하면 외교부 인원은 점점 축소되고 있는 것과 다름없어 효과적인 인원 확충 전략 마련이 필요함

■ 해외 북한이탈주민 보호 업무에 정부 관심 제고 필요

- 외교부는 관련 부서를 민족공동체해외협력팀이라는 모호한 명칭이 아니라 해외 체류 탈북민 보호 및 국내이송 협력팀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조치 필요함.
- 통일부도 외교부와 함께 담당 업무를 할 방안 모색해야 함.

■ 안보 허점 부르는 9·19 남북군사합의서, 조속한 조치 필요

- 문재인 정부가 맺은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정신은 적대행위 중지, 4·27 판문점선언·평양공동선언의 핵심은 북한 비핵화임.
- 그러나 북한은 핵무력 법제화, 헌법에 핵무기 발전을 명시하는 등 비핵화 약속은 명백한 거짓임이 증명됨.
- 상대방의 선의에 기초하면 안 된다는 게 이스라엘 사태의 교훈임.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효력정지 등 정부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함.

하태경 의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 민주주의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 촉구

I 주요 내용

■ 윤미향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 확인

- 민주당은 윤미향 의원의 참석 행사가 조총련 주최 행사가 아니었다고 주장
- 이에 대해 행사 포스터와 '도쿄 대지진 100주년 실행위원회' 명단을 공개해 조총련 행사임을 확인

■ 잔혹한 테러를 자행한 하마스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해 제재해야

- 국내법상 하마스를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건 어렵지만 '테러자금방지법'상 금융제재는 가능
- 외교부에 '테러자금방지법'에 의한 하마스 제재 촉구

■ 북-러 무기거래 강력 규탄

-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천개가 넘는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한 것을 우리 정부로부터 확인함
- 글로벌 중추국가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는 북러 무기거래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이를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함. 또한,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러시아가 북한에 미사일 기술 등을 제공할 경우 정부로서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냄.

■ 방산수출 지원을 위해 방산협력관 추가 파견 시급

- 대통령의 방산수출 노력 성과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방산수출 특성상 정부간 네트워크 강화 및 무기체계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방산협력관의 필요성을 강조함.
- 한국의 경우 방산협력관의 필요성은 높고 있으나, 현재 재외공관 주재관으로 파견된 방산협력관은 인도네시아 1명에 불과해 이를 지적하고, 행정안전부 및 방위사업청과 협의하여 방산수출의 첨병인 방산협력관 추가 파견을 촉구함.



제3부

상임위 의원별
주요성과

국방위원회



文정부의 왜곡된 국방정책 바로잡고, 民軍상생 및 軍心 다잡기!

I 주요 내용

■ 文정부의 왜곡된 국방정책 바로잡기!

- 9.19. 군사합의 논의과정에서 행해진 군사작전적 영향에 대한 재논의 필요!
 - 「국군조직법」에 규정된 합동참모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
 - 한미연합사와 공동검토 및 의결을 하지 않았음
 - 국방부·청와대 주도의 군사합의에 대한 홍보 기획
- 文정부 사드 관련 의혹, 적극적 감사 협조 필요!
 - 사드배치 고의지연 관련, 감사원 감사에 국방부의 적극적 협조 필요
- 밀리패스 전면 백지화 필요!
 - 당초 제로페이 기반으로 추진 계획되었던 밀리페이 사업 전면 백지화 필요
- 누구를 위한 軍 과거사 연구·조사 TF였나?!
 - 文정부, 법적 근거도 없이 軍의 근간을 흔드는 기획안 작성

■ 民軍상생 및 軍心 다잡기!

- 차질 없는 민통선 부분 조정 및 민통선 출입절차 효율화 시스템 조속 추진 필요!
- 농민들의 안정적인 군납 및 식재료 신선도 유지 시스템 확대 필요!
 - 「군급식기본법」에 대한 국방부령이 “지역산 농·축·수산물 원자재 및 단순가공품의 안정적 군납”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정되길 기대
 - 선진화한 콜드체인 시스템이 軍급식에 본격 도입되어, 농어민들이 납품하는 식자재가 최상의 맛과 품질을 갖춘 상태로 장병들의 식판에 제공되길 기대
- 전투기 조종사 수당(항공수당 갑1호) 및 수상함(간부) 함정근무수당 현실화 필요!
- 軍 부대 수질개선 대책 마련 필요!
 - 부대 내 녹물 발생이 확인될 경우 부식방지시스템 적용 적극 검토 필요
- 육군 부사관 선발제도 개선 필요!
 - 육군 지원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필기 평가 시간을 조정 필요
 - 신체검사 시 발생하는 시간 및 비용 절감 차원에서 신체 검사 결과도 당해연도에는 연계하여 적용 필요

■ 엄중한 안보상황에 대응한 방위력개선 방향성 제시!

- 155mm 사거리연장탄 적기 전력화를 위한 예산반영 필요!
- 전구급 자산에 함정 방호용 미사일만 장착할 예정인 정조대왕함!
 - 北 SLBM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는 現 시점에 중간단계 요격체계 확충을 위한 SM-3급 탄도탄 요격유도탄 도입 촉구
- 경계실패 야기하는 현용 (과학화)경계시스템 전환 필요!
 - 실패로 드러난 광그물망 방식의 감지시스템 시범사업을 5,000억원대 본사업으로 만들기 위해, 노무현 정부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발벗고 나서 T/F 구성
 - 복합센서 방식(장력 감지+라이다+열·적외선) 적용 및 행동분석 AI 통제시스템 도입 필요



대한민국 국방의 현재와 미래

I 주요 내용

■ 감소하는 군의관,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등 전반적 대책 마련해야!

- 전국 의료인 응답자 73%, 군의관 등 장기 복무 대신 현역 병사로 입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현재의 군의관의 38개월의 긴 복무기간은 18개월 복무의 현역 병사의 복무기간과 무려 20개월의 차이가 있음. 그러나 국방부는 아직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별도로 검토하거나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임.
- 일본 방위외과대학을 모델로 학부 체제의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해, 일정한 인원을 장기 자원으로 계속 선발한다면 군 의료체계 안정화 및 숙련화에 기여할 수 있고, 의무사관학교 출신 자원만큼 일반 의대 출신 의료인들이 군의관이 아닌 공중보건의로 지원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공중보건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

■ 병역자원 수급 부족, 외국인 모병 논의 시작 등 새로운 시각의 대책 마련해야!

- 국군 상비 전력 감소 문제는 이미 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님. 출산율이 지속해서 감소하면서 인구 모집단 자체가 줄어들어 여성 징병과 모병 모두 뾰족한 대안이 될 수 없는 상황
- 미국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부족한 병사 충원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인 'MAVNI' (2008년~2016년)를 운영함. 선발인원은 2015~2016 회계연도 기준 한 해 5,000명을 선발하며 주요한 미군 인력 충원 프로그램 마련
- 선진국의 인구 감소에 따른 글로벌 외국인 노동력 확보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음.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외국인 노동력 확보 + 병력자원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외국인 자원 모병 프로그램을 통해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해야 함.

윤재옥 의원



북한의 핵위협과 무력 도발에 대비한 빈틈없는 안보태세 수립 촉구

I 주요 내용

■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대전의 교훈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대북 방비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이스라엘 아이언돔 방어 실패 관련 9.19 군사합의로 운용이 제한되고 있는 감시정찰 자산의 운용 정상화 및 KAMD 다층복합체계 구축 촉구
- 이스라엘-하마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을 통해 드론 무기의 전시 위력이 검증된 만큼 공격 드론 전력화 및 대 드론 방어체계 적기 마련 촉구

■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고려해 우리 군의 작전계획 재정립을 요청하고 군 장비를 적기 전력화할 수 있도록 방위력 개선 사업 대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대북전단 재개 시 예상되는 북의 도발에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北에 대한 억지수단으로서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 요소 활용 검토 주문
- 9.19 군사합의로 2018년부터 주둔 도서에서 훈련을 하지 못해 경계 공백 및 실전 훈련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서북도서 경계태세 점검 및 관련 훈련 대책 마련 촉구
- 정부 예산안 편성 전 양산 사업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무기체계 개발 사업에 대한 적기 예산 확보 노력 촉구 및 양산 사업타당성 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 요청

■ 전력 유지 및 우리 군 장병의 안전을 위해 군내 사고 방지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 군내 항공 사고 예방을 위해 조종사 개인 비행훈련시간 기준 엄수 및 숙련급 전투기 조종사의 민간 이직 방지 대책 마련 촉구
- 군내 자살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대관리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자살예방을 위한 전담 협의체 구성 촉구



문재인 정권 5년 국방 분야 비정상화를 정상화해야 한다.

I 주요 내용

■ 유엔사 강화확대 필요

- 문재인 정부 국방부는 북한군과 교류를 공리하던 대북정책에 매몰되어 국익은 뒷전으로 매몰았다.
- 유엔사는 한반도 전면전 시 전력제공국에서 병력과 장비를 받아 한미연합사의 작전을 지원하는 것으로 유사시 우리나라의 생명 줄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 강화해야 한다.

■ 9.19 남북군사합의서 폐기해야 한다.

- 서북도서가 완충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사격훈련 금지로 내륙훈련으로 연간 24억원 정도 예산낭비
- 한강하구 남북공동수로조사 후 2019.1 북측에 해도를 제작해서 넘김으로서 북한의 침투로 제공.
- 신원식 장관, 효력정지 검토 착수 및 9.19 군사합의 위반 감사원 감사 여부검토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업무 개선 필요

- 기품원과 국기연이 각 지역에 각각 12개의 지사를 가지고 있고, 유사 성격의 업무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통합하고 기능으로 조정해야 한다.
- 기품원 국기연, 용역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

■ 하마스의 땅굴기술 북한에서 전수되었을 가능성 높아

- 하마스의 땅굴 형태와 크기, 기술수준 등 북한에서 지원했거나 관요한 것들이 많이 보인다.
- 우리 군은 북한의 땅굴 탐지 작전을 지금도 하고 있다.

■ 방사청 함정분야 무기체계 독점화 우려

- 한화오션의 함정과 무기체계 수직계열화에 따른 독점이 우려되고, 방사청의 보안감점 규정, 일련의 개정은 특정업체에는 사업준립 자체가 위협.
- 방사청 방위사업관리규정 도급과 관급 분류기준 명확화하기 위해 개정추진

이헌승 의원



文정부, 9.19 군사합의로 방어능력 제한하고 국방 R&D 기반 흔들어

I 주요 내용

■ 9.19 군사합의로 우리군 방어능력 제한

- 군사합의 체결로 대한민국의 지상·공중·해상에서 안보공백 발생
- 5년간 이행 완료율 37.5% 불과, 남측 0회, 북측 17회 위반
- 조속한 효력정지를 통해 우리군의 방어 작전능력 회복해야

■ 2020년 ADD 3차례 기관감사, 정권에 의한 연구 환경 훼손

- 2020년 ADD 창설 50년 역사상 '최대 기술유출' 의혹 제기
- 3년간 형사처벌 확정자 없고, 단순 AI 학습 기초자료 유출로 확인
- 보안조치 강화로 자유로운 연구환경 억압까지

■ 2017년 R&D 실패에 대해 연구자에 과도한 책임 물어

- 2016년 군단급 무인기 시제 1호기 초도비행 중 추락사고 발생
- 2017년 7월, 연구자들에게 67억원 배상 요구 및 중징계 조치
- 연구자들이 배상책임 및 징계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文정부, 국방 R&D 과제 중복성 확인 안하고 예산만 늘려

- 국방 R&D 착수과제 2018년 94건에서 2022년 367건으로 4배 늘어
- 중복성 걸러주는 DTims 기능 미흡하고 사용율 저조
- 국방 R&D 중복성 거를 수 있도록 제도 보완 필요

■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광망시스템의 문제점 지적

- 겨울철 추위에 약한 광섬유의 파손으로 잦은 오경보 및 고장 발생
- 오경보 축소 위해 강풍 시에는 저감도로, 미풍 시에는 고감도로 설정하는 매뉴얼을 적용·운용 하여 경계시스템의 신뢰도 및 작전능력이 저하됨
- CCTV의 화각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등 문제 많아 전면적 재점검 필요.

■ 육·해·공군 인력부족 심각! 대안 마련해야

- 입영자원 감소와 직업군인의 인기 하락으로 장기적 군인력 부족 우려
- 해군, 해경으로 인력 유출 막기위해 처우 개선 필요, 부정적 이미지 자체 개선해야
- AI과학 강군 건설 위한 기술개발 서두르고 민간군사기업 도입 검토해야

임병헌 의원



지난 정부의 잘못된 국방정책 비판 및 現정부 국방정책 변화 주문

I 주요 내용

■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각군

-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북한의 포병사격을 비롯해 무인기 침범 등 北의 위반 사항이 수 없음을 지적, 굴종적인 9.19 군사합의를 즉시 폐지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
- 해군의 SM-3 미사일이 소요기 결정된 지 6년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소요 검토 중인 문제를 지적, 북한의 위협과 도발 행위가 점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SM-3 및 SM-6 도입DML 시급성 강조
- 공군의 전자전훈련장비(EWTS)의 노후화로 인한 고장 발생 비율이 높음을 지적, 전자전 장비의 노후화된 부품을 폐기하고 신속히 제대로 된 장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촉구

■ 방위사업청

- 방사청과 ADD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매년 3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현황을 지적, 방사청과 산하기관들에 대한 기밀유출 방지 체계 점검 및 해킹 방어능력 보완 촉구
- 국방과학기술이 자주국방뿐만 아니라 방산 수출과 민간산업의 혁신에도 더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국방과학기술 소유권을 민간으로 이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

■ 병무청

-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전과자 등 다양한 이유로 최근 전시근로역 처분 비율이 지속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 병역이행에 예외를 없애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생각으로 전시근로역 편입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촉구
- 병적별도관리 대상자들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역면제 처분 비율이 높은 문제 등을 지적, 공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인들의 병역이행을 더욱 치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병적별도관리제의 실효성 증강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촉구

제3부

상임위 의원별
주요성과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의원



정쟁이 아닌 민생에 집중,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내실 있는 변화 必

I 주요 내용

■ 행정안전부

- 민노총 등 불법집회 시위단체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 추진
- 악성·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시효 소멸 중단 등 행정력 강화 주문
- 모바일 신분증 첫 발급 시 무료화 추진/ 재난재해 사전 대비 강화 요청

■ 경찰청

-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청의 안보수사 능력 강화 방안 마련 촉구
-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 대처 부실 논란 지적
- 경찰 수사 역량 강화 방안 마련 주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소방청

- 민주당이 제기한 ‘국정원의 선관위 해킹 시도’가 거짓 뉴스임을 입증
- 선관위의 병폐를 도려내기 위해 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촉구
- 헬기 사고 예방 및 신속 인명 구조 등을 위한 소방헬기 모의비행장치 도입 촉구

■ 지방자치단체

- 서울시) 시민단체 보조금 부적정집행에 대한 강력한 조치 및 개선방안 촉구
- 서울시) SH공사 전관 특혜 방지를 위한 예방책 마련 주문
- 경기도) 국고보조사업 불용액 증가.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주문
- 인천시) 대통령 공약 사업인 소래 염전의 전국 최초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차질 없는 사업 진행 촉구
- 대구시) 대구시청 신청사, 두류정수장 부지 매각 없이 원안대로 건립 확인

■ 지방경찰청(서울·경기·인천·대구·강원)

- 자율방범대와의 협력·지원방안 마련
- 수사력 강화를 위해 지방청장의 의지 표명 주문

권성동 의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이념 편향성 지적과 자치경찰제도 실효성 등 현안·민생·정책 중점 국정감사

I 주요 내용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념 편향성 지적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인권기념관 전시콘텐츠의 편향된 기술을 지적하며 민주인권기념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당파적인 시각을 벗어나서 균형적인 시각에서 국민을 교육할 수 있는 전시장으로 만들 것을 요구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 민주주의 연례 보고서> 이념 편향성 지적

■ 선관위 과도한 고위 공직자 비율 시정 필요성

- 선관위의 1급 공무원이 21명으로 너무 많아 타 부처와 형평성이 맞지 않음을 지적

■ 자치경찰제도 실효성 지적 및 대책 수립

- 자치경찰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자치경찰 운용에 필요한 대책 수립 요청
- 경무관 이상 고위직에 순경 출신 30% 잘 이행되고 있나 지적

■ 소방청 중간직급 신설 필요성

- 소방공무원 인원 수 대비 직급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중간 직위 신설 필요성 강조

■ 정당현수막 정비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필요성 제기

-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을 통해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정비에 나선 인천시에 공감하며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 촉구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후 과제 강조 및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준비 철저히

-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아 중첩규제를 합리화하고 특례를 늘려야 함을 지적하며, 입법적 보완 필요성 강조
-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 예산집행 직접 챙겨 대회 차질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을 지적

김기현 의원



국민안전 지키고 민주주의확립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 강조

I 주요 내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난맥상 지적 및 한글탈태 촉구

- 국정원 점검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시스템이 해킹 공격에 무방비 노출. 해킹 가능성 및 공정선거관리 능력에 대한 의구심 제기.
- 국민적 공분 초래한 대규모 부정채용에도 불구하고, 비협조적 태도와 국민기만으로 일관하는 선관위의 안이한 대응 지적

■ 잼버리 파행 관련 전북도의 부실 대응 지적

- 실제 현장 책임자이자, 예산집행을 주도한 민주당 소속 전·현직 전라북도지사의 부실 준비 비판.
- 전국민적 협조로 인한 사태수습에도 불구하고, 파행의 책임을 정부에 돌리는 무책임한 태도 지적

■ 국민불편 초래하는 불법, 떤법 시위에 대한 경찰의 엄정대응 주문

- 민노총 및 불법 시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미흡. 이로 인해 국민 불편은 물론 국론 분열, 국력 낭비가 발생
-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되,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며 사회 혼란 부추기는 불법 집회에 대해 엄정 대응 필요

김웅 의원



정쟁보다는 민생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 “무너진 상식 복원”

I 주요 내용

■ 행안부) 재난 발생마다 원인규명·재발방지 아닌, 정치공세에 골몰하는 정치권의 행태 지적

- 文 정권에서, 수해 발생할 때 당시 여당이 보여왔던 태도 (“수해는 제방탓”) 지적하며 올해 발생한 수해 재난은 과거 정책실패가 누적되어온 결과로서, 근본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

■ 경찰청) 文 정권 당시 북한 연계 마약 안보 수사 공적을 인정 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권 눈치 보기식 부당한 징계 지적

- 북한산 필로폰 밀수·유통 조직에 수사가 진행, 수사 공적 인정 경찰관에 대한 돌연 징계. 당시 정권의 대북기조에 맞춘 부당한 징계 지적. 진상규명 촉구.

■ 선관위) 北 해킹위협에 따른 사이버 보안 문제, 자녀특혜채용 문제, 외부감사관 도입 지연문제 등 각종 비위에 거짓말로 일관한 선관위의 행태 지적

- 총장만 바뀌치기하며 꼬리자르는 행태 비판, 실질적 권한이 있는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책임 추궁

■ 소방청) 구급차 악용에 대한 적극대처와 웨어러블캠 보유·관리체계 도입 요구

- 소방대원들의 필수장비인 웨어러블캠·파이어캠 등에 대한 보유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점과 구급차 악용에 대한 소방청의 소극 대처를 지적

■ 서울시) 서울시의 적극행정 통한 시민불편 최소화 요구

- 공동주택단지관리 체계적 관리·감독 강화 및 심야택시 ‘무단휴업’ 관리·처리 요구

■ 경기도) K-소부장 메카 경기도, 日외투기업 유치 관련 전·현직 경기도지사의 ‘표리 부동’한 태도 업계에 혼란 줘

- 이재명·김동연 지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본 소부장 기업 유치하겠다는 현 정부에 강하게 반발하였으나 한편으로는 日투자 반기는 모습으로 정치적 이해에 따라 앞뒤 다른 모습을 보여 반도체 특화 이끌 지역 수장으로서 부적절했음을 지적

■ 행안부) 매월 실시하는 ‘승강기 자체점검’, 세부기준 부재로 인한 부실점검 유발 지적

- 자체점검 결과 최고등급으로 작성된 항목이 정기검사에서는 부적합 판정 다수 확인. 형식적으로 행해지는 자체점검 지적. 자체점검의 세부기준을 정기검사 수준으로 강화 필요성 강조.



국가 정상화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촉구

I 주요 내용

■ 비정상 작동 I_정치

- 탄핵소추권의 정치적 남용 지적(행안부)
- 무소불위 선관위의 사이버보안 취약성에 안일한 대응 추궁(선관위)
- 이재명 최측근 권석필 경기자원봉사센터장, 무자격 특혜채용 및 정치적 중립위반 지적(경기도)
- 전임도정, 알펜시아리조트 헐값 매각 논란(강원도)

■ 비정상 작동 II_가짜뉴스

- 북한이 아닌 국정원을 해킹범인 만드는 민주당 가짜뉴스에 대한 선관위 해명 촉구
- 가짜뉴스 언론단체에 대한 광역단체장 권한 행사 및 엄정 수사 촉구(서울시, 서울경찰청)
-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관련 지사의 근거없는 무책임 선동(경기)
- 가짜뉴스 생산 매체에 대한 김영란법 위반 수사 엄정 집행 촉구(경기북부경찰청)

■ 국가 기능 정상화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 촉구

- 불법 집회·시위에 경찰의 엄중 대응을 촉구(경찰청)
- 치안업무 중심의 경찰 조직개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경찰청)
- 서울시 대형 프로젝트, 내실있는 사업추진 촉구(서울시)
- 중단된 민방위훈련, 정례화(소방청)

■ 기타정책질의

- 울산시 식수 확보를 위한 대구-구미 간의 취수원 문제 해결 촉구(대구시)
- 경인고속도로,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무료화 해법 모색 요청(인천시)
- 대용량 소방 방사포 추가 도입 촉구(소방청)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경찰청)
- 해외도피사범의 공정수사 촉구(경찰청)
- 물난리 대비 반지하주택 정책지원 내실화 추진 촉구(행안부)
- 서현역 흥기난동 사건 이후 살인예고 38명 검거 대책 마련할 것(경기남부경찰청)

이만희 의원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위한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 개선 촉구

I 주요 내용

■ 행정안전부

- 지난 5월 선관위에 대한 북 해킹 사실이 알려지는 등 최근 정부기관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공격이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초 행안부는 국정원과 공동으로 국가기관의 사이버보안시스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 중
- 그러나 자체적으로 보안컨설팅을 실시하는 헌법기관들의 보안시스템에 중대한 취약점이 드러날 수 있음에 따라 행안부가 더 많은 국가기관이 주기적으로 보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촉구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난 5월, 선관위 북한 해킹 사건이 알려진 후 선관위, 국정원, KISA와 함께 합동보안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선관위가 보유한 ‘통합선거인명부’, ‘개표시스템’ 등이 사이버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선관위는 시스템 보안점검, 관제 등을 전적으로 외주업체에 일임한 가운데 선관위 자체 보안담당 공무원이 3명에 불과하고, 업체에 대한 관리부실이 핵심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사이버 보안 관련 직원 충원 및 관련 예산 확보 등을 요구함
- 또한, 현행 사전투표제도가 상위법에 반하는 규칙 때문에 일부 유권자들의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므로 ‘사전투표관 도장 날인’, ‘막대형 바코드’, ‘신분이미지 보관 기관 연장’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함

■ 인사혁신처

- 현행 추서제도는 각종 연금에 있어서 승진 전 계급을 적용하고 있어서 형식적인 예우라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직자들에 대한 예우 강화 차원에서 유족연금 등 지급에 있어서 승진계급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함

■ 경찰청

- 최근 연달아 발생한 이상동기범죄로 치안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 속에서 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관들이 적극적인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지원을 강화하고 경직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한편, 경찰이 추진 중인 대대적인 조직개편안이 수사에 지장없이 치안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검토를 요구함

■ 소방청

- 해상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 출동하는 소방정대의 절반 이상이 사용연한을 초과하여 침수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으며, 최근 도입한 소방정대 역시 고장이 잦은 것으로 나타나 장비 관리를 더욱 철저히 기할 것을 요구
- 해상화재 대응 전문교육시설이 부족하고, 소방정대 인원 중 전문교육 이수율도 낮은 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

전봉민 의원



공정과 상식, 정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 국민 안심 사회 실현

I 주요 내용

■ 文정부 잇따른 정책 실패로 지방정부 재정 악화 초래, 실태 파악 촉구

- 文정부 5년 동안 국가 채무뿐만 아니라 지방채무 50%(14조원) 이상 증가
- '상생형 일자리' 사업 등 정책 실패와 이권 카르텔로 지방재정 악화 초래

■ 각종 채용 비리, 사전투표 보안 체계는 큰 구멍, 선관위의 기득권 카르텔 저격

- 선관위 특혜 채용 관련자들 징계 없이 의원면직 처리한 선관위 행태 폭로
- 일반 근로자 채용 시 공고 없이, 지인 찬스, 셀프 추천, 면접 평가조차 없이 시행
- 사전투표 운용장비 수년간 특정 업체 수의계약, 해킹에도 무방비로 노출

■ 文정부 정책실장 동생과 연관된 SH공사 매입임대주택 비리, 감사 촉구

-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동생 디스커버리펀드 사기 일부 자금 SH 유입
- 개발업자 1명을 통해 수백억 부당이득, SH 매입과정 편법, 외압 등 문제제기

■ 국민 갈등 부추기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만행에 일침

- 거짓 자료로 양평고속도로 사건을 정쟁화시키려는 경기지사 행태 지적
- 후쿠시마 처리수 관련 지사의 비과학적, 괴담정치로 업계와 상인 생계위협 질타

■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윤석열 정부

-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 4년새 27% 증가, 치료강화 등 대책마련 촉구
- CCTV 노후화 및 저화질로 범죄예방·대응 공백 우려, 관련 규정 개선 촉구
- 서민들을 노린 전세사기 최근 폭증, 사기범 재산몰수로 피해 최소화 주문
-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 및 신종마약 확대에 대한 정부기관 간 유기적 대응 요청
- 대공수사권 이관 준비 부실로 안보 공백 우려, 국정원과 합동수사체계 주문

■ 제복 입은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촉구

- 부산 목욕탕 화재폭발로 부상입은 경찰 및 소방공무원에 대한 간병료 지급 현실화 및 실비 보상 특례조항 신설 요청



경찰 안보수사 공백 위기 대책 마련. 선관위원장 상임제 전환 및 선관위 개혁촉구

I 주요 내용

■ 대공수사권 넘겨받는 경찰, 자체 평가에서도 ‘역량 미흡’

- 노태우 정부 때 5000여명이던 안보수사인력, 文정부에는 2000여명 불과
- 文정권, 안보 수사 인력 20% 이상, 예산 22%(약 84억) 감축
- 경찰 안보 수사력 공백 위기 지적과 대책 마련 촉구

■ #건달#깡패 ‘조폭 유튜브’ 영상 2800개 범람, 경찰 파악은 11명으로 부실

- 모방범죄 우려에도 경찰의 모니터링 부실 지적, 관련 대책 마련 요구

■ 선관위원장, 대법관 겸직 → 겸직폐지, 상임제로 전환 촉구

- 독립기관의 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다른 헌법기관 구성원(대법관)이 겸직하는 것은 선관위가 항상 강조하는 독립성에 역행
- 노태우 선관위원장의 대법원장車 꼬리물기 버스차로 위반 및 대법관 행사에 선관위 관용차량 부당사용 적발, 겸직 비상임 구조문제 지적

■ 사전투표 본인확인기 오류율 10% 업체 선정 지적

- 2024년형 선관위 본인확인기 제작 입찰에 신분증 인식 오류율 10%의 A업체 기기가 선정된 것으로 확인
- 입찰 공정성에 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입찰과정의 적절성 검토 요구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좌편향적 활동으로 ‘그들만의 리그’ 지적

- 매년 4천만원 시상, ‘민주주의 대상’의 좌편향된 심사부터 선정 단체 지적
- 임수경 방북사건 미화 등 간행물·학술대회의 편향성 지적·인적 쇄신 요구

■ 文정부 동안 폭증한 지방공공기관과 부채, 공공기관 혁신 시급성 강조

- 文정부 총 219개의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으로 부채 폭증
- 국가 및 지자체 재정건전성을 위한 행안부의 공공기관 혁신 당부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부부 ‘법인카드 사적유용’ 보강감사 촉구

- 도자체감사 부실 지적 및 경기도지사로부터 비공개였던 감사내역 공개 도출
- 행안부에 지자체 부실감사 지적, 행안부 차원의 지자체 감사 보완 촉구

■ 文정부, 1960억 혈세투입 군산형 일자리 사업 실패 참사…

- 에디슨모터스 100억 빚 떠안아 도민 피해입힌 전북도 지적 및 도차원 감사조치 답변 도출

■ 오송 지하차도 사고 책임기관 행복창·감리단 문제 지적 및 일선 공무원 책임 전가 않도록 촉구

■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 필요성 및 지방시대 실현 정부 국정목표 강조

■ 전북도 민간단체 보조금, 성과평가 낙제점, 대표자명의 오류 단체에 지원 문제점 지적 및 과감한 정비와 엄격한 보조금 관리 촉구

■ 정부·공직 효율화 국정과제 강조, 연간 2200시간 초과근무하는 지자체 공무원, 개선촉구

■ 면허관리 안되는 마약사범, 도로교통공단 수시적성검사 범위 확대 촉구

■ 감사 사각지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행안부 감사규정 미비 지적

조은희 의원



세금납비 없도록 보조금·지역화폐 관리강화 주문, 이권 카르텔 실태 고발 및 민주당 정치공세 차단 주력

I 주요 내용

■ (선관위) 민주당의 근거없는 '국정원 해킹음모론' 반박 및 정치공세 차단

- 국정원 음모론은 통계조작·드루킹 여론조작 같은 민주당 조작DNA라 선긋고, 선관위 정보관리국장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민주당 허위주장 논파.
- ①3자기관컨설팅 및 민주당참관인 참여 ②선관위가 국정원 접근권한 제한시켰고, 선관위 자체 삭제키로 합의한 사실 ③잔여파일들이 해킹 툴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 등 확인. 선관위, “국정원 해킹 의도 없는 것으로 본다” 입장 표명

■ (행안부) 지역화폐 부실관리 실태 질타 및 민주당 논리 반박

- 민주당, 지자체 감사마다 지역화폐 증액 필요성 제기. 이에 ‘상품권깡’, ‘허위가맹점’ 등 부정유통 적발사례 지적하는 한편, 무분별한 예산 증액 시 ▲지자체 발행부담금 ▲폐단증가 우려 ▲지역화폐 효과성 지적하며 반박

■ (행안부) 보조금 부정수급·관리미흡 실태 지적 및 환수대책 촉구

- ①유령회사, 허위서류 통한 보조금횡령 ②국고·지방보조금 간 중복수급 실태 ③정치단체의 보조금 유용실태 지적. 행안부장관 “관리강화 및 환수 철저”

■ (경찰청) 이재명 대표 ‘부실수사 의혹’ 관련 감찰·재수사 필요성 제기

-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유용’ 관련,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 지적 및 경기남부청의 잇따른 부실수사 실태 질타. 경찰청장, “고의부실수사면 감찰 통해 책임 물을 것”
- 라임자금 들어간 카지노 실권자가 이재명 대선캠프 외곽조직 간부로 활동한 의혹 제기 및 관련수사 적절성 여부 질타, 불법커넥션 재수사 필요성 제기

■ (지자체) 고물가 속 비빔밥값도 안되는 ‘결식아동 급식비 인상’ 필요성 제기

- 인천, 충남 등 단체장 급식비 현실화 필요성 공감, 개선 동의

■ (지자체) 서울 ‘도농상생 공공급식 카르텔’, 인천 ‘쌈짓돈 전락한 주민참여예산’ 등 특정시민단체 중심의 담합·이권카르텔 실태 질타

제3부

상임위 의원별
주요성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정·민생·미래 세대를 위한 국정감사

I 주요 내용

■ 서울 도심 경쟁력 강화 위한 ‘탄력적인 문화재 보존정책’ 필요해

- 국가문화재의 26%나 밀집된 서울을 타 시·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예외규정이 필요함을 지적
- 특히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이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역사문화재 지구 규제 권한을 이양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함

■ 문재인 정부, 예술인 파견해서 노총 노조가 영상 만들어…전면 재검토 촉구

- 문재인 정부 시절 예술인들을 녹색병원, 노들장애인야학, 민노총 산하 노조 등 정치적 집단에 파견 지원함. 이렇게 파견된 예술인들은 ▲노조가 영상 제작 ▲정부 비판 ▲불법 시위 참여 등 정치적 활동을 한 것을 밝혀냄

■ 무형문화재 명맥 끊길 위기에 이수자 지원 강화해야

- 무형문화재 개인종목의 61.7%가 명맥 끊길 위기에 있음. 그러나 올해 기준 무형문화재 이수자 총 7,124명 중 15명만 지원받고 있음을 지적. 무형문화재 이수자의 자존과 전통문화 전승을 위한 예산 및 지원방안 확대 촉구

■ 문체부 공익광고 모델, 사회적 물의에도 ‘손해배상’ 조항도 없어…재발대책 이끌어내

- 지난 2년간 문체부 공익광고 유명 모델이 음주운전·강제추행 혐의로 광고 송출이 중단돼 날린 예산이 총 53억원이나 출연료 1억원 환수 외 다른 조치는 없었음. 반면, 일반 기업 광고에는 손해배상 조항이 포함돼있음
- 향후 전 부처에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하겠다는 재발방지대책을 이끌어 냄

■ GKL 일본사무소 횡령사건 등 기강해이·조직 부패 질타

- GKL 오사카 사무소장이 2억 5천만원 가량 횡령하였으나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징계조치 하지 않았음. 외국인 카지노 사업이라는 독점적 사업을 하며 기강해이, 조직 부패가 만연함을 질타하고 감사원 감사 요구

김승수 의원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통한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I 주요 내용

■ 사회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文정부 통계조작·가짜뉴스·여론조작 척결

- 여론조작에 무방비 인터넷 포털, 해외IP 통한 중국 응원 조작 및 野권 유리한 뉴스배열 지적
-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가짜뉴스 이틀 후 국비 공모사업 선정·지원 문제 지적
- 열독률 구간화, 사회적지표 신설로 구독율 6배 낮은 진보언론을 1위로 만든 文정부의 정부광고지표 왜곡 조작 지적
- 영화 ‘그대가 조국’의 허위상영·관객수 조작 실태 고발 및 영화발전기금 회피 의혹 제기

■ K콘텐츠 경쟁력 제고와 국민생활에 밀접한 민생 문제 해결에 만전

- 넷플릭스 독점으로 비롯된 국내 OTT 위기 극복 및 K콘텐츠 지속 발전방안 제시
- 초등학생까지 도박중독, K콘텐츠 불법유통·불법도박광고 공생관계 일괄 타파 방안 제시
- 방치되어온 플랫폼 불법숙박영업 및 국가 이미지 실추 저가 중국단체관광 지적

■ 사회적 약자 보호망 구축,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완화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문체부 시정명령에도 해결되지 않는 검정고무신 故이우영 작가 사건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 지적 및 문화산업공정유통법 등 강제력 강화 방안 제시
- 국립예술단 수도권공연 편중, 수도권 편중 예술인 지원, 작은도서관 부실운영, 지역신문 지원 감소, 지역관광 활성화 등 수도권·비수도권 지원 격차 지적 및 해결책 제시

■ 대한민국의 근간 전통문화 보호 및 계승·발전 방안 모색

- 흥볼트포럼을 비롯한 해외박물관 한국실 부실·왜곡전시 재발 방지 및 공조체계 방안 제시
- 국가무형문화재 122종 가운데 70% 전승 단절위기 지적, 고령화·기피현상 해소 방안 제시
- 국가지정 문화재 보존상태 368건에 달하는 등급 하향 및 보존관리 대책 방안 제시
-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미비, 미흡한 박물관 복원처리, 문화재 지진 대응 방안 제시 등

■ 文정부 시절의 허술하고 비상식적인 행정 실태 지적 및 대안 마련 촉구

- 文정부 문화나눔사업을 통한 선정적 성경험, 동성애, 공유연애 도서 선정, 어린이도서관 배포에 대한 지적 및 향후 사업 재편 시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제시
- 文정부 임명 사감위원 10인 임기만료 앞두고 세금 1억 3천만원 들여 외유성 카지노 단체 관광 출장, 명분도 실속도 없는 세금낭비 문제 지적
- 文정부 국정과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불가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참여 방치, 국내 여행 활성화 취지와 다른 왁싱·마사지·가전제품 등 이용 방치 지적 및 지침 마련 촉구

김예지 의원



장애인선수의 인권침해 방지 대책 및 예술인의 권리 보장 강화 주문, 지난 정부의 정부광고를 활용한 언론장악 시도 지적

I 주요 내용

■ 장애인 국가대표, '인권침해'를 넘어 '장애인 학대' 당해, 엄중 처벌 필요

- 지난 8월, 영국에서 열린 '버밍엄 쇼다운 국제대회'를 앞두고 쇼다운 국가대표 장애인선수들이 감독 및 코치진으로부터 폭언과 학대, 방치 등 장애인 학대 피해를 당한 사례를 소개하고, 피해자들이 참고인으로 참여토록 함.
- 피해 신고를 접수한 '스포츠훈리센터'가 기초적인 피해자, 가해자 분리 조치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고,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주문.
- 문체부 장관에게 동 사건에 대한 조치는 물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답변받음.

■ OTT와 같이 산업이 발전할수록 사각지대에 놓이는 예술인, 대책 마련 필요

- 2023년 1월,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나, 상습적인 계약서의 작성 거부 및 미이행 등 여전한 예술인들이 피해 사례를 소개함.
- OTT와 같은 신산업분야 및 각 분야의 예술인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주문
-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표준계약서 현실화 및 예술인 권리 강화 답변받음.

■ 지난 정부의 정부광고 집행방식 변경을 통한 '언론 길들이기' 의혹 제기

- 지난 정부의 문체부가 2021년, 새로운 열독률 조사 및 정부광고 집행 방식의 변경한 것이 현재 '왜곡', '조작' 의혹으로 수사 중인 상황을 소개.
- 2020년부터 문체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 간 주고 받은 문서, 이메일 등을 통해 ABC협회 부수공사 정책배제에서부터 신규 열독률 조사 실시, 정부광고 집행방식 변경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의 지난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와 특히 정부광고 집행방식 변경이 특정매체사에 유리하게 '설계'된 점을 밝히고, '왜곡' 및 '조작' 여부에 대한 자체 검증 주문.
- 언론재단 이사장에게는 '왜곡' 및 '조작' 검증계획 수립을 주문하고, 문체부 장관에게는 검경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별도의 자체감사 및 감사원 감사 요청 등 책임있는 조치 요구함.

배현진 의원



5년간 은폐된 文정부 문화예술 정책 총체적 부실 드러나

I 주요 내용

■ 文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반국가단체 행사·영화 등 국고 지원 감사해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조총련 산하단체와 함께 진행한 행사에, 영화진흥위원회는 한통련 관계자 대거 출연한 영화 개봉지원 위해 사전 보고 받았음에도 국고 지원한 사실 밝혀내.
- 문예위, 남북 교류 사업 추진 도중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한 서류 제출 의무에서 선택 사항으로 변경. 문제 소지가 있는 단체·행사에 편법 지원 의혹 제기
- 문체부의 감사 요구 → 문체부 감사 확정

■ 文정부 면피용 사업 ‘광화시대’, 1년도 안 돼 절반 이상 폐지에 감사 촉구

- 文 대통령 공약 면피 사업에 400억대 규모 예산 급조, 연구용역도 없이 진행, 국회 2차례 경고에 예산 삭감됐지만 결국엔 3년간 (2020~2022) 총 446억 투입한 사실 확인
- 결국 안전 문제와 저조한 이용률로 8개 프로젝트 중 5개 콘텐츠 운영 1년도 안 돼 폐지.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외압 등 감사 요구에 문체부 감사 확정

■ 文정부 캠퍼드·알박기 인사 그랜드코리아레저, 고위험 펀드에 100억 전액 손실

- GKL, 계약 당시 후순위 고위험 펀드임을 알았음에도 내부규정 어겨가며 본부장 전결로 계약 체결, 이후 펀드 이자·배당금 미지급 상황 인지하였음에도 만기 2달 전까지 조치 전무했던 사실 밝혀
- 펀드 최고 책임자(사장·본부장)는 징계 전무, 이하 실무진만 보직 해임되어 ‘꼬리 자르기’식 인사 조치 질타

■ 스포츠윤리센터 간부진 기소에도 인사조치 전무·근무태만, 문체부 감사 필요

- 文정부 당시 졸속으로 출범한 윤리센터, 3건 조사 요청에도 사건 접수되지 않고 미처리 상태로 방치, 담당자인 팀장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의 허위 인턴십 확인서 발급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 되었음에도 인사 조치 전무
- 사무국장 또한 조직진단 용역보고서 內 국장실에서 골프 연습 한다는 등 근무 태만과 관련된 내용이 공식적으로 실려 문체부 감사 요구 → 문체부 사무 검사 확정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이권카르텔 다파

I 주요 내용

■ 文정부 공공기관의 ‘문지마식 대북지원’ 질타

- 한국관광공사·그랜드코리아레저, 특정 민간단체에 무분별한 남북협력지원 사업감행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도 대북지원사업 지속추진 하면서도 후속 결과 보고 누락 등 비위 발생 문제 지적
- 대북지원사업 진행 경위 감사원 감사 요구, 필요시 지원금 환수 촉구
-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文정부 관광공사장에게 국정감사 자료 유출 등 기관의 조직적인 비위 발생에 대한 감사 및 고발 실시

■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직적인 비위 문제 심각

- 퇴직 간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용역 리베이트 행태 질타
- 자체감사 후 숨방망이 처벌 등 안일한 대처 지적
- 한국콘텐츠진흥원 위탁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 문체부 소속 교육기관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공문서 위조 혐의, △강사 부정채용 논란, △시험문제 사전유출 등 비위문제 지적
- 문체부 소속 교육기관 관리감독 수립 촉구
-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한 문체부 자체감사 계획 수립 필요

■ 스포츠윤리센터 능력 대응 지적

- 성범죄 사건 등 스포츠계 비리 지연처리 문제 심각, 의도적 장기방치 의혹 제기
- 기관 사무국장 근무태만 등 비위 문제 지적

제3부

상임위 의원별
주요성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차 산업 종사자의 소득 악화 문제 대책 마련 촉구 항만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제시

I 주요 내용

■ 대규모 항만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 및 지원방안 마련 촉구

- 부산항만공사 → 부산경남항만공사 명칭 변경 확정
- 불합리한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 조정 확정
- 진해항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촉구

■ 연구개발 분야 강화 적극 요구

- 농가 소득·식량자급률 향상 위한 기초연구 & 실용화 연구 강화 요구 및 기초 연구 분야 펀더멘털 리서치(Fundamental Research) 촉구
- 수산분야 식량자급률 및 수출 실적 향상 위한 R&D 전담 기관 필요성 피력
- 성과가 부족한 산림 R&D 분야 대책 요구

■ 농가 소득 악화 문제 및 농업 생산성 향상 방안 마련 촉구

- 연 평균 농업소득은 1,033만원(1994년) → 948만원(2022년) 수준으로 악화. 농업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증대를 통한 제도개선 촉구.
- 농업생산성 향상 위한 청년농, 스마트팜 및 해외 지원 사업 강화 방안 제시

박덕흠 의원



전 정부 문제 지적 및 현장 의견 반영한 농업정책 제안

I 주요 내용

■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확대 요구

- 운영 안정성을 이유로 손해율이 낮은 시범사업 품목만(일부 농산물만 가입) 운용하며 보험 보장 범위 확대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정부 지적

■ 농산물 오인·혼동 표현 단속 필요 지적

- 국내 유통하는 김치가 국내산 농산물만 쓰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쓰면서도 수입산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다수 확인. 농식품부에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선박 내 전기차 화재 진압에 대한 조속한 대안 마련 필요

- 전기차 화재 진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진압에 어려움이 있음. 해수부 내에 선박 내 전기차 화재 진압에 대한 매뉴얼과 관련 방재 설비가 없음을 지적

■ 비인가 헬기 부품 구매한 산림청, 1억 9천만원 손실 지적

- 산림청 산림헬기에 들어갈 비인가 부품 구입. 관련 문제 인지 후, 부품을 교체하고 점검하는 동안 산불 발생기간 헬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점 지적

■ 쉬운 기술 개발만 하려는 농진청 R&D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 R&D 사업 예산이 10년 동안 늘어났지만 특허 출원 수는 변동이 없음. 특허 거절 사유의 대부분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사전에 가이드라인 마련하여 문제 해결 필요

■ 자체자금 융자지원사업, 철저한 연체율 리스크 관리 필요

- AT는 정책자금 수요 증가로 대한 부족액이 늘어나면서, 신용대출로 자체 재원을 마련하여 융자를 추가 지원하고 있음. 이에 대한 리스크가 우려되니 관련 관리 방법 마련 필요

■ 자격증 있는 직원도 없는데 드론부터 덜컥 구매한 국립수목원 지적

- 국립수목원이 보유한 고가의 연구시설 장비가 1년에 단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않고, 불필요한 장비를 선 구매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을 지적

■ 가축 전염병은 잇따르는데, 검역·방역 인력은 수년째 미달 지적

- 5년 간 검역본부 수의직과 수의 연구직 인원이 모두 채워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음.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농·축산업 방역에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음을 지적

안병길 의원



논·산·바다의 카르텔 혁파 긴급, 개 식용 종식 문제는 결단 내려야

I 주요 내용

■ 개 식용 종식, 동물이 아닌 사람을 위한 결단

- 개 식용 종식의 문제는 먹는 자유의 문제 이전에 과정의 불법성 문제로 접근해야함.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이미 개 식용은 사실 상 불법인 상황임.
- 정부와 정치권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로드맵 도출 등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해 21대 국회 내에 개 식용 종식 문제를 매듭지을 것을 촉구

■ 태양광·보조금 카르텔 문제 혁파 필요성 지적

- 곤충·버섯 재배산업이 위장 카르텔 시설로 인해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문제점 지적, 태양광 카르텔로 인한 농업 피해 최소화 대책 주문
- 산림청 조림·숲가꾸기 보조금 부당 활용 사례 5년새 3배 증가, 보조금 환수 이외에 보조금 규정 위반에 대한 페널티 강화 필요성 제기

■ 대북송금 의혹 관련 금송·주목나무 뇌물성 검증

- 대북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측은 산림청이 금송과 주목나무의 대북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산림청은 해당 수종들이 조경수·경관수로 식재되는 수종이라는 의견을 전달했음을 확인
- 산림청의 검토의견이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음을 강조

■ 북한 재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난맥상 지적 및 대책 마련 촉구

- 엑스포 유치 예정지인 북한 재개발 사업 부지 내 침수대책 보완 필요성 지적, 하천 하부 지역 저류지 및 배수펌프 설치 필요성 제기
- 북한 친수공원 내 누수문제, 고사목 발생 등 부실시공 문제 지적, 지지부진한 오페라하우스 관련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이양수 의원



농업·임업·수산업 종사자 소득안정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당부

I 주요 내용

■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 촉구

- 선제적 수급 관리와 수확기 대책 통한 쌀값 안정 도모 촉구
- K푸드 인기 상승으로 기승부리는 K푸드 복제품에 대한 대책 수립 촉구
- 농가의 부담을 가중하는 운송비 비과세 추진 촉구
- 축산농가 위해 하자육 보험 보장 범위에 수종·근염 포함 상품 개발 촉구

■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요구

- 농업진흥구역 내 자재판매장 및 정부양곡창고 운영 위한 시행령 개정 촉구
- 실효성 없는 불투명 포장재 생산일자 등 표기 규제 개선 요구
- 공공비축미 수매 물량 조기 배정, 수발아 피해 방지 등의 대책 마련 촉구
-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 이자율 개선 요구

■ 수산업 종사자 고통 가중시키는 야당의 가짜뉴스 차단 시급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해역 영향 없어
- 2차 방류 이후에도 국내에는 오염수 관련 피해 발생사례 없어
- 국민 공포심을 자극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 촉구
- 수산물 소비 위축 영향 최소화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 필요성 강조

■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정부의 개선책 마련 촉구

- 어촌임에도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어업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 방안 마련 촉구
- 어업용 면세 경유, 작년 유가연동 보조금의 지급기준을 초과하고 있기에, 올해도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실시 촉구
-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폐업지원금 때문에 어업인이 감척을 포기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 마련 촉구

■ 산림청

- 정확도 7%에 불과한 산사태 취약지역, 실효성 높일 것 촉구
- 친환경 에너지원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산림 환경 해치는 문제점 지적
- 충분한 고려 없이 도입된 탓에 운용 저조한 씨스노클 헬기 문제점 지적



국민을 위한 '민생국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책임국감' 대한민국 미래의 발전을 위한 '희망국감'

I 주요 내용

■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민생국감'

-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자료집 발간)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 외국인 농촌 이민정책,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 전략작물직불제 평가, 농업재해보험 확대 정책 등 주요 농업정책에 대한 대국민 조사 결과와 대안을 담은 정책자료집 발간 등 농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따른 피해 농가의 조속한 복구 지원 및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마련 촉구
-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 경사연 보고서 비공개 결정 과정에 정부의 개입이 없었음을 확인,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불안감 조장 행위 지적,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대응 요구 등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방사능 검사 확대 및 철저한 수산물 안전 대책 방안 마련 촉구
- (무능력 마사회 지적) 마사의 D등급 고객만족도 개선 촉구, 내부만 접속이 가능한 온라인 앱 마권의 외부 거래 등 허술한 관리 지적, 전면 개편 요구

■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책임국감'

-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농업 분야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국정과제로 지정된 그린바이오 산업에 대한 전략적인 육성 정책 마련 촉구
- (R&D 예산 낭비 지적) 18년 만에 농업 예산 증가율이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을 넘어섰다는 점을 강조하며, 농진청 R&D 예산이 줄어든 것은 부적절한 R&D 예산 사용 행태 때문이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 요구
-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해양모빌리티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 마련과 글로벌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 촉구

■ 대한민국 미래의 발전을 위한 '희망국감'

- (세계 경제 불확실성 대응) 국제사회의 안보 위협과 무력 충돌, 기후위기에 따른 범지구적인 자연 재해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농산물 수급 불안정 및 농촌경제 위협 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 촉구
- (연안침식 대응) 기후위기로 인해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연안침식 대응에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촉구
- (탄소중립 대응)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활성화를 통해 농업분야 탄소배출 절감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

최춘식 의원



민주당과 문재인정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송곳 질의!

I 주요 내용

■ 민주당의 모든 가격보장제 법안 비용추계 없이 추진했다

- 민주당은 ‘양곡가격안정제 법안’ 6건, ‘농수산물가격보장제 법안’ 6건 등 12건의 ‘가격보장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음
- 현행 국회법 제79조의2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안을 발의한 경우, 시행에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 반드시 비용추계를 하도록 함
- 그러나 의원실에서 해당 법안들을 전부 조사한 결과 비용추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 원전처리수 문제는 ‘범세계적 문제’, 한국보다 미국·캐나다에 먼저 도달해

- 후쿠시마 원전처리수 문제는 한일 양국의 문제가 아닌 범세계적 문제임
- 해수부에 사실 확인한 결과, 원전처리수는 북태평양 환류를 따라 시계방향으로 흐르고, 대한민국 해역보다 미국과 캐나다 서해 안쪽에 먼저 도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음
- 또한 올해 2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이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방류된 원전처리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우리 해역보다 미국과 캐나다 서쪽에서 더 높게 나타났음

■ 문재인정권 당시 해수부, 6조 5,000억원 규모 대북 사업 구상해

- 문재인정권 시기인 2019년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각종 대북사업 추진에 총 6조 5,000억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한반도 해양수산 종합구상 연구」 수립
- 이후 해수부는 연구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7대 중점사업’을 추려서 「해양수산 남북협력 로드맵」을 작성, 이 계획에는 5,01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
- 당시 해수부가 정권에 ‘코드맞추기’ 위한 무리한 대북사업 계획이라고 할 수 있음



문재인 정부 5년 농어촌 종합파괴세트 전략, 윤 정부에서는 농어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 정책 펼쳐나가야 할 때

I 주요 내용

■ 문재인 정부 농업파괴 현실판 5년, 농민·농촌에 폭탄만 안겨

- 헛물켄 대북사업, 문재인 정부 동안 대북지원 예산 1,500억 편성
 - 대북지원·협력 계획은 UN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엄중한 사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농해수위 소관 10개의 부처와 기관들은 1,500억원의 대북지원 및 협력 예산 1,500억원을 편성, 479억원을 집행하였음.
- 문재인 정부 태양광 비리에 앞장선 농림부, 빗더미에 쌓인 농민
 - 문재인 정부 내 1만6,363건에 대해 총 3조 2,000억원의 태양광 대출 진행
 - 가장 큰 문제는 당시 태양광 대출을 받았던 농민들이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과 대출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
 -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에 따라 태양광 보급률만을 높이기 위해 농지전용 허가과 태양광 시설자금의 대출 과정에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방증
- 방만한 보조금 관리·감독, 윤석열 정부 퇴진운동에 앞장선 농민단체
 - 좌편향 정치적 색깔이 짙은 농민단체들이 농업 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농식품부와 지자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에 사용하는 비정상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함.
 - 50억대 규모의 보조금이 수백 차례에 걸쳐 농민단체들에 지급되었는데, 보조금 중 일부가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정치 편향적 행사와 그 외 해외 견학, 대북지원용 쌀 재배에 쓰였다면 국민께서 납득하지 못할 것

■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는 문정부 시절 예견된 사안

- 만약,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으려 했으면, 방류 결정을 내린 문재인 정부 당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대로 된 대책도, 과학적 근거도 내놓지 못한 것이 현실
- 이를 마치 윤석열 정부가 문 정부 당시 해놓은 상황들을 뒤집고 일본 대변인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잘못했다는 식으로 몰고가는 것은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이자 정치적 선동에 불과함.

■ 문재인 정부 5년, 수산업 외면으로 어업후진국 전략

- 문재인 정부 5년 국내 어업은 어민수 10만명 붕괴, 어업소득 26% 감소, 자급률 최초 60% 대 하락 등 지나친 친중 정책으로 불법어선은 기승을 부리며 어업인의 생존권은 보호받지 못했음.
- 윤석열 정부는 해양수산 확대론 던고 '신해양강국 재도약' 기회를 잡기 위해 지난 1년간 다양한 정책을 펼쳤으며, 그 결과 수산식품 수출 역대 최대치 달성, 해운업 경쟁력 회복,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착수함.

제3부

상임위 의원별
주요성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의원



산업·통상·자원·에너지·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전반 비정상적의 정상화

I 주요 내용

■ 文정부 정책실패로 인한 한전 재정건전성 악화 특단 촉구

- 탈원전으로 전력구매비용 급증한 한전, 요금인상앞서 재무정상화 자구노력 선행 필요
- 文정부의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정에 발생한 역마진 구조 질타
- 한전, 한전공대 아닌 부영혁신도시 조성. 국민부담으로 특정 기업 특혜!

■ 임직원 도덕성 해이 문제 질타

- 가스공사 前 채희봉 사장, 런던 출장서 1박 260만원 호캉스 방만경영
- 가스공사 前 채희봉 사장, 공사 역사상 최초 직원 26명 무보직 유배 제왕적 인사
- 특허청 직원, 성추행 후 징계 시스템 사각지대 악용해 징계 없이 퇴직!
- 한전 임직원 태양광발전사업·다단계판매 등 겸직 및 부당 영리행위 질책

■ 탈원전 가짜뉴스 및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카르텔

- 돌연 폐지된 신재생에너지 홍보사업, 수혜단체 대부분 특정 이념편향단체
- 신용보증기금 신용도 기술보증기금 기술도 필요 없는 신재생에너지 녹색보증사업
- 정부사청 태양광 사기 실태, 알면서도 몇 년 째 방관한 산업부와 한전
- 원전 가짜뉴스 팩트체크 및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 원전 정상화 촉구

■ 경영관리 실태 및 부실정책 지적

- 강원랜드 창사 이래 첫 D등급 최악의 경영평가. 무능력 입증된 사장 책임 필요.
- 수소충전소 위험성 간과하는 산업부. 폭발위험구역 위험성 낮추는 근본대책 필요
- 정책자금 브로커 활개, 지적에도 개선 없이 더욱 기승! 국회 앞에도 사무실!

■ 중소기업·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

-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규제 해소로 소비자 편익 향상 시켜야
- 특허청, 특허소송 침해 변리사 공동대리제도 도입 촉구!
- 법 뒤에 숨어 악덕사채업자 된 기술보증기금, 연대보증제도 개선 필요

구자근 의원



한전공대 방만경영 및 인사채용 비리 지적

I 주요 내용

■ 한전공대의 과도한 복지혜택을 비롯한 방만경영 지적

- 21년~23년까지 한전공대는 교직원 복지 혜택을 위해 약 17억원을 지출
- 법인임차사택 보증금 명목으로 약 69억원을 사용
- 윤의준 총장을 비롯해 35명의 교직원들에게 과도한 임차사택 제공
- 국민들의 전기료로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한전공대의 방만경영

■ 총장 셀프평가를 비롯한 각종 불법과 비리 문제

- 평가규정 마련되지 않은 직원에게 B등급 상여금 20% 지급
- 총장의 과도한 급여, 비행기 1등석 사용,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문제점
-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이 264건(1억 2,600만원)에 달함

■ 한전공대 불법채용 등 인사 비리문제 제기

- 서류전형에서 낙제점 받은 지원자, 차기 채용에서 채용
- 자격조건 미달, 이사회 의결 피해 조교수로 채용
- 인사위원 등을 통해 문제점 지적받은 인사를 실장직으로 임용
- 한전공대 총장의 입맛에 따라 임용절차를 무력화한 문제점 지적

■ 산업부,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한전공대 인사채용 감사 실시 결정

- 한전공대는 21년 개교 이후, 예산회계, 공사, 연구비 등 각종 비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국정감사를 통해 의원실에서 인사채용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함에 따라 특별임용, 서류전형 등 인사채용 전반에 걸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함.

권명호 의원



문재인 정권의 핵심정책과 인사 실패로 인한 피해 날카롭게 지적

I 주요 내용

■ 전 정권의 핵심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 피해 가중된 점 부각

- 산업부, 8차 전기기본에서 밝힌 2030년 전기요금 인상요인 10.9% 전망치 과소예측한 것 인정하도록 이끌어 냄.
- 월성1호기 조기 폐쇄로 한수원 수익 1.5조 상실했고, 한전도 2조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 밝힘.
-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3.5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점 밝힘.
- 고용(51.9%), 투자금액(20%) 감소 등 초라한 성적표 받은 상생형 일자리 사업 지적
- 전 정부의 급격한 RPS의무이행비율 상향에 따른 한전 전력구매비 부담 10조 가량을 윤석열 정부에서 줄인 점 밝혀냄.

■ 전 정권의 인사실패로 인한 피해를 날낱이 밝히고 중기부 대규모 감사 착수

- 낙하산으로 임명된 공영홈쇼핑 상임감사의 법인카드 유용 정황과 감사 재직 중 이재명 후보 특보 역임 등 각종 비위들을 최초로 밝히고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하고 소란을 일으킨 상임감사에 대해 고발조치 함.
- 공영홈쇼핑 대표이사의 부친상에 직원들이 대거 동원된 점, 징계자들의 계속되는 승진문제 등 수많은 방만경영 문제와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 중기부 장관으로부터 대규모 감사 착수하겠다는 답변 얻어냄.
- 가스공사 채 前사장의 프로농구단 사유화를 통한 인사 농단 최초로 밝힘.
-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현지 직원이 코로나에 걸렸는데도 출장을 강행해 유명 관광지 방문 등 외유성 해외출장 지적

■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민생국감에 힘 써

- 공영홈쇼핑이 '젓소'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했지만 소비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최초로 밝혀 대표이사의 대국민 사과를 이끌어 내고 해당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전액 환불되도록 함.

노용호 의원



이권 카르텔을 막고, 에너지 백년대계와 민생을 살렸습니다

I 주요 내용

■ 특정 지역 활동가 양성하는 文정부의 이권 카르텔

-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지난 5년간 비영리법인에 약 2조 5천억 원을 지원함. 그러나 지원을 받은 일부 단체는 국정원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특정 지역 활동가를 양성하는 이념 편향적 단체로 밝혀짐
- 文정부의 이권 카르텔을 사회공헌 명목으로 후원·보조하지 않도록 산업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 주문

■ 허수 신청 68%, 투기수단 된 데이터센터

- 최근 5년 간 전기사용예정통지 접수 2,937건 중 2,013건이 데이터센터였음. 하지만 준공일자와 맞춰 실제 원하는 시기에 전력공급이 가능한 데이터센터는 74개(3.7%)에 불과
- 한편, 데이터센터 부지라고 하며 전기 사용신청을 하면 모두 허가가 나오는 현행 절차 탓에 데이터센터가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전락하는 문제 발생
- 이런 허수 신청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장기송배전설비계획에 과다 반영시키는 부작용을 낳아 전력 설비계획을 왜곡시키고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
- 이에 규정 개정을 통한 재발 방지와 실태조사를 통한 대책 마련 촉구

■ (소상공인) 지역신보 소상공인 대출, 금융기관 출연요율 상향 촉구

- '22년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잔액 비중 34.4%로 급증했으나, 금융기관의 법정 출연요율 비중은 10%에 불과해 불균형 심각
- 대위변제비율의 확대에 따라 요율을 상향하는 출연요율 규정의 취지를 고려, 수지차 적자가 과다한 지역신보의 법정출연요율 상향을 촉구

박수영 의원



전력카르텔과 공공기관의 유용문제 지적, 중소상인 정책제언

I 주요 내용

■ 전기요금 인상 요구 전에 나랏돈 줄줄 새게 만드는 전력카르텔 개혁 필요

- 文정부에서 RPS정산비용 13.3조원, 자회사 만들며 1.35조원 증가 문제
- 한전 발전사의 출자회사 처분 이행실적 0원, 평균 출자금 회수 11.2%
- 주요에너지공기업의 재취업 심사 승인률 99.5%, 역대연봉자 196건 문제
- 람사르협약과 행정기본법 위반하며 법률에 없는 내용을 시행령에 넣어 文대통령이 48조 투자한다던 해상풍력 송전선로를 갯벌에 설치하게 만든 문제 지적
- 남동발전, 수상태양광 사업하며 1200억원 공사에 3000억원 투자하겠다고 계획 제출한 업체 선정 및 이사회 거짓답변 의혹 책임자가 업체 부사장으로 영전
- 서부발전, 새만금 태양광에서 초과이익을 스스로 포기, 배임 혐의 지적
- 중부발전, 새만금 태양광 관련 각 부처에 제출 사업내용 모두 불일치
- 한수원, 비금주민태양광 발전사업하며 800억원 규모의 O&M 우선사업권을 민간업체에 넘긴 문제, 최종 전기위 인가를 받지 않은 문제
- 가스공사 채회봉 사장 당시 법적 목적 위반, 재무상황 악화, 고압가스 부지에 화재 위험에도 태양광 발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문제 지적

■ 중소, 창업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개선 제언

- 온누리상품권의 불법사용으로 환전 불가한 도매상인들에게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므로 도매점 환전허용 검토필요, 나아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내/외 상인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네거티브 방식의 제도전환 검토 요청
- 중기부,산업부 차원의 중기수출지원을 위한 해외팩토링제도 도입 요구
- 스테이션K 입지시, 역사성, 상징성, 도시재생, 확장성을 고려해 선정 필요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처 확대로 국민편익과 접근성 제고 필요

■ 공공기관 기관장 부실운영에 대한 감사와 주먹구구식 제도개선 요구

- 공영홈쇼핑 유창오 감사의 이재명 후보 특보검임과 법인카드 유용은 인사규정, 공운법, 공선법 등을 위반한 것임으로 감사와 수사 필요
- 공영홈쇼핑의 입찰계약 중 제출기한 경과, 접수증 미기재 서류들이 평가되어 낙찰된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기부의 대대적인 감사 요구
- 사회공헌사업을 자신의 출마지에 집중시키는 정치인 사장의 문제점 지적
- 저조한 취업률과 사후관리도 되지 않는 특화교육 제도개선 필요
- 태양광업체 알박기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최성광대표의 관용차 사적이용

양금희 의원



‘에너지’,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 ‘기술’ 정책, 철저한 제도 개선으로 곳곳에 막힌 혈관 뚫어내야

I 주요 내용

■ 규제에 막힌 대한민국, 1년 간 유턴기업 26개로 미국의 1.4% 수준

- 미국, EU, 일본 등은 각각 IRA, 칩스법, 세제 혜택 등을 활용해 첨단산업 유치에 주력하고 있음.
- 한국은 26개 기업이 국내로 복귀했는데 이는 미국의 1.4% 수준으로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결정적 원인을 ‘킬러규제’로 꼽음.
- 킬러규제를 개선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함.

■ 에너지 공기업 해외 신재생 투자 절반이 적자

- 중국 풍력사업에 진출 후 중국 정부로부터 못 받은 보조금이 1,447억원이고 에너지 공기업이 해외에서 투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절반 이상이 적자를 보고 있음.
- 국내에서 취소된 신재생에너지 사업 개발비도 52억에 이르러 에너지 공기업에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의 리스크 관리 체계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함.

■ 창업기업의 성장생태계와 소상공인의 신용불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요청

- 국내 창업기업의 5년 후 생존율이 OECD 평균보다 11.6% 낮은 33.8%로 나타남.
- 중기부에 창업기업 성장생태계 조성을 촉구하고 코로나 대응 보증상품이 우량신용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함

■ 뿌리깊게 내린 기술 카르텔 척결 주문

- 특허청 전직 공무원들이 부정부패 카르텔을 형성해 선행조사 업체에 불공정한 이익을 주는 사례가 확인됨.
- 민간 업체 참여 독려를 위해 완화한 등록 절차를 악용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요청함.

이인선 의원



文정부의 예산 퍼주기로 살찐 공공기관들 철퇴! 다이어트는 필수!

I 주요 내용

■ 文정부 산자부와 한전의 묵인아래 예산 마음대로 펴 쓴 한전공대!

- 한전적자 심각한데 아무도 모르게 호의호식한 한전공대 지탄 받아야!
- 총장 6억, 석학교수 10명 4억 이상 황제연봉에 회계 관리·보고도 엉망
- 교수들 연구비 목적외 사용 심각! 학생들 지원도 과다! 산자부 철저히 감독해야!

■ 국가 신재생에너지 핵심 연구과제를 돈 만 주고 나몰라라 하다 허공에 날린 에기평!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70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실증 국가 과제 부실관리
- 중단된 과제 계좌에서 쓸데없이 국비 내보내고 환수 중인 정신나간 에기평
- 한우회식 100회! 연구비 펴쓰다 RCMS 경보! 부실 R&D 종합판, 철저한 감사 요구

■ 창업진흥원의 도덕적 해이 심각! 공공기관 관용차 사적유용 문제도 뿌리 뽑아야!

- 해외조직에 피싱 사기 국비 1.7억 날릴판... 환수 불투명, 원장은 뒤에 숨어
- 성비위에 대학원 다니며 초과근무수당! 원장 법인카드로 개인 전기차 충전!
- 드라이브, 볼스원샷... '관용차를 내 차처럼' 공공기관 관용차 사용 도덕적 해이

■ 중기유통센터 소상공인지원 부실! 특허전략개발원은 엉터리 일자리 사업 질타!

- 소상공인 1분 쇼츠영상 제작 지원에 편당 264만원... 영상받는데 2~3개월
- 중기유통센터는 사업 내용 모르고 중기부는 민원인 홀대!... 사업관리 부실 질타
- 文정부서 쓸데없는 일자리 만드는데 혈안이던 특허전략개발원 문제도 지적!

■ RE100은 국내 기업에 부담... CFE 확산 통해 무탄소전원 이니셔티브 확산 해야

- 야당, CFE가 RE100을 대체할 수 없다고 정부보고서를 정반대로 짜깁기 해석!
- 국내 환경 여건상 RE100은 에너지 발전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에 큰 부담
- CFE 얼라이언스 이니셔티브 확산과 국제적 연대 필요성 연일 강조!

이종배 의원



정책실패의 나비효과, 민생을 위협하다

I 주요 내용

■ 허울뿐인 정책으로 무너진 대한민국 에너지·통상·자원 정책

- 지난 정부에서 철저한 분석을 결여한 맹목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확대 정책으로 인해 ① 원전 생태계가 붕괴되고 ② 발전사 재정이 악화되었으며 ③ 전기요금 인상 초래되었음을 지적.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최악의 재무상황을 개선할 자구책 강구를 촉구하고, 특히 원전 생태계 조기 복구 필요성 강조
-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해 제조업자들이 지금까지 2조 2009억(2120건) 규모의 자금을 지원 받았던 사실을 지적하며, 실패한 對 일본 통상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제조업체들의 피해를 알림
- 희소금속 확보가 현재 매우 미비한 상황이며(100일 목표/50.2일 확보), 향후 예산을 늘려 확보 하더라도 현재 적재율이 98%를 초과함에도, 추가 비축기지가 마련되지 않아 희소금속 비축이 불가능한 상황. 이를 위해 비축기지 대여 등 다양한 방안 검토 및 희소금속 확보 로드맵의 재구성이 필요함을 지적

■ ‘카르텔’이 곳곳에… 불법·부당하게 집행 된 기금, R&D 예산 등 지적

-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징수하는 전력기금이 위법·부적정하게 집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예산은 5배 늘리는 동안 인력은 늘리지 않았던 사실을 알려, 전력기금 부당 집행은 예견된 문제였음을 지적
- 중진공이 외부 전문가에 중진공 출신을 27% 참여시킨 것은 물론, 출신 컨설턴트에게 3억원이 넘는 사례금을 지급한 사실, 산업기술진흥원이 ODA(공적개발원조) 명목으로 약 500억원을 집행하면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사실 등을 지적하여 중기부 산하 기관들의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되었음을 지적

이철규 의원



R&D 카르텔 혁파 및 전담기관 조직 혁신 요구, 신재생E 무한접속 제도 및 공공기관 모럴 해저드 강력 질타

I 주요 내용

■ R&D 이권 카르텔 혁파 필요

- '18년부터 '23년까지 산업부 R&D 예산의 증가 등 급격한 양적 확대 과정에서 혁신성이 낮은 사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식 R&D 사업이 추진되면서 산업부 R&D의 저성과 문제 및 비효율성 심화
- 보조금 성격, 관행적 추진 사업, 소규모·프로젝트형 R&D를 축소하고 프로그램 사업 확대로 신속성·유연성 제고 등 R&D 카르텔 혁파 완수 필요

■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무한 접속 폐해

-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용망 신설·보강 시 공사비 한전 부담하며 계통 여유와 상관없이 접속신청을 하면 접속 허가
-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연계는 '무비용', '무한 접속'으로 부담은 고스란히 한전 몫인 상황에서 지역편중, 비효율, 무한 접속을 악용하는 '용량 쪼개기' 문제 사례 대거 발생
- 시장원리에 따라 효율적인 계통투자자 입지 설정을 유도하여 전력 계통 부담 완화를 위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를 한전에서 사업자로 정상화할 것을 지적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방위적 조직 혁신 필요

- 공공기관 평가 2년 연속 D등급 등 文 정부 5년 동안 R&D 전담 기관으로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위상 실추
- 향후 조직 진단을 통해 재창사에 준하는 조직 개선방안 모색 당부

■ 공공기관 기강 및 도덕적 해이 강력 질타

- 공영홍소평 상임감사의 정치 활동·법인카드 배임 및 횡령 의혹과 한전, 그룹사(KPS, KDN) 상임 감사 3인방의 코로나19 정부 지침을 위반한 외유성 출장 강력 질타

정운천 의원



산업부·중기부 소관 정책 검토 및 대안 제시

I 주요 내용

■ 자원안보 지키기 위한 '해외자원개발 지원기구' 설립 제안

- 지난 10년간 '정쟁'과 '적폐몰이'로 해외자원개발 산업은 동력을 잃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원 빈국인 일본은 범정부 차원에서 조그맥(JOGMEC)을 중심으로 부족한 자원을 해외에서 개발·생산하여 자국 물량 확보로 자원안보를 지키고 있음.
- 우리도 정권교체, 가격변동에 흔들림 없이 자원개발을 지원하는 해외자원개발 컨트롤타워 KOMEGA(Korea Oil, Metals Gas National Corporation) 설립을 제안.

■ 속도감 있는 원전생태계 복원 촉구

- 탄소중립·경제성을 검토했을 때 원자력 발전은 필수적임. 11차 전기본에 신규 대형원전 건설과 SMR 활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 강조.
- 원전 수출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국내 실증로 필요. 우리 원전을 선보일 '원전 수출전략지구' 종합검토 요구.

■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 가업승계를 앞둔 중소 제조·서비스 기업 대표는 약 19만명에 육박하지만, 가업상속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은 한 해 평균 약 110곳에 불과.
- 가업승계 기업들에 대한 업종변경 제한 요건을 폐지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할 것을 요구.

■ 부실한 청년몰 사후관리 지적

- 9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몰을 조성했으나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은 50만원에 불과하고, 400여개 점포가 폐업하는 등 사업성과 저조.
- 소진공이 집계한 점포수와 실제 운영중 점포수가 상이함.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사후관리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경찰 역량강화

- 범죄수법 첨단화·지능화로 최첨단 기술유출 범죄는 빠른 속도로 진화.
- 기술경찰 인력 충원 및 역량 강화로 기술안보를 지키는 데 특허청이 앞장설 것을 요구.



에너지 안보는 대한민국의 숙명, 지금 당장 원자력

I 주요 내용

■ 실현 불가능한 RE100, 넷제로 달성을 위해 K-에너지믹스 실행 필요

- 文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블랙아웃’ 가능성↑, ‘기후악당’ 오명
-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 대비를 위한 NDC 이행 기반 조성 필요
- 2050년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원전과 재생에너지로 구성된 K-에너지믹스를 향한 사회적 합의 및 실행 필요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LNG) 수요 예측 실패 및 초고가 수입으로 한전 적자 원인 제공

- 文 정부의 LNG 발전 수요 전망 예측 실패, 현물가격(spot price) 물량 급증, 해외 자원개발 투자 부진 등이 초고가 수입으로 연결
- 전력기본계획의 오차율 최소화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기간계약 비중 확대, 민간 수입자의 공동구매를 통한 도입 협상력 강화,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에너지 기업들의 투자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언

■ 산업육성정책 및 소상공인 지원 수도권 집중화 심화 지적

- 文 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편으로 스마트공장지원, 청년창업지원, 골목형 상점가 사업 등의 정책을 시행했으나 지원액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
- 지역과 수도권 기업 역량 및 인력 편차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 필요

■ 특허청, 무분별한 특허로 인한 피해 발생 방지 대책 및 심사 제도 개선

- 자폐 치료, 로또 예측 기술과 같이 악용 사례가 빈번한 특허 실용·실안 심사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 필요

한무경 의원



文 정권의 R&D 카르텔 및 최저임금 통계조작 의혹 제기

I 주요 내용

■ 文 정권의 R&D 및 공급기업 카르텔 의혹 제기 → 감사·수사 필요

- (산업부) 文 전 대통령 며느리 장모 씨, R&D연구비 부정사용 의혹 제기
 - 장모 씨, '엔비저블' 입사 직후 13억 4천만 원 규모의 산업부 R&D 과제선정
 - 과제선정 두 달 후 과제와 관련 없는 논문 발표를 이유로 항공료와 숙박비 지원
- (산기평) R&D 연구비 정산 담당 회계법인들의 연구비 정산 점검률 1.3%에 불과
- (기정원) 최근 5년간 중소기업 R&D 예산 증가 비해 사업화 성과 매우 저조
 - 기정원,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대신 성과 홍보 및 눈속임에 예산 지출
- (중기부) 특정 공급기업들이 각종 지원 사업의 기득권으로 자리잡아 카르텔 형성
 - 정부 예산을 받은 기업들이 유사 과제로 사업비를 중복으로 받는 사례 다수 발생

■ 文 정권의 통계조작 및 불법 특혜와 부실 감사 지적 → 감사·수사 필요

- (중기부) 최저임금 부작용 숨기기 위해 소상공인실태조사 통계 조작·은폐
 - 2018년 최저임금 급등 후 소상공인에 민감한 최저임금 관련 항목 변경 및 축소
 - 중기부, 통계청의 우려에도 '소상공인 특성 반영'이라며 조사 항목·기준 수정 강행
- (중기부) 에디슨모터스 정책자금 특혜 관련 중기부 부실감사 지적
 - 에디슨모터스 관련 중기부 감사 결과, "규정 위반사항이 없다" 발표
 - 특혜 규정을 변경 주체이자 최종 승인자 홍종학 前장관, 중기부 객관적 감사 불가

■ 안전한 에너지 생태계 조성 및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 개선 주문

- (가스안전공사) 수소충전소 10곳 중 9곳 누출 경험, 안전성 미흡
- (산단공) 수소액화플랜트사업, 핵심 부품 성능검사 2차례 실패 등 안전성 미확보
- (가스공사) 대규모 적자 낸 가스공사 출자사 대표, 고액 연봉 지급 개선필요
- (한전) 체리피킹 부추기는 '고정가격계약제도', 전기요금 인상요인
- (산업부) 태양광 발전 시설, 지자체 99% 주민들의 반대로 이격거리 강화

■ 스타트업·중소기업 성장 및 민생 안정에 주력

- (특허청) 왕의 DNA 치료법 특허 논란, 특허 심사 의학적 자문 검토 도입 필요
- (창업진흥원) 제조 창업 생태계 조성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사업관리 및 성과 부실
-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연체이자율 규정 미준수, 중소기업·스타트업이 피해 받아
 - 한국벤처투자 연체이자율 관련 내부규정 12%, 실제 이자율은 15~18%로 책정



제3부

상임위 의원별
주요성과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



필수의료 체계 개선 등 국민 건강권 확보와 저출산 대책 필요성

I 주요 내용

■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체계의 문제점 지적과 대책 마련 촉구

- 지역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사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필요성 강조
- 소아심장외과 의사 급감에 따른 소아 심장질환 의료 공백 발생 우려 지적
-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 개선과 의료 시설의 종합상황판 적시 반영 개선, 응급의료정보 관리자 인력 부족 지적
-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간병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한 간병국가책임제 도입
- 유방암 등 여성 중증질환 혁신 약제 지원 강화를 통한 고액 의료비 부담완화

■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과 사회적 변화에 따른 사회 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촉구

- 유보통합 시행 전,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지원 격차 해소 필요성 제시
-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업의 이행강제금 금액 및 가중부과 상향 등 제도적 대안 제시
-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단체의 운영난 해소 및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마련 제시
- 지역 내 민간사회복지체계 강화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

■ 국민의 먹거리 및 의약품 모니터링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 제시

- 탕후루 등 과당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 필수화 등 제도 개선 촉구
- 반복되는 영유아 이유식 함량미달 및 세균증식 문제 재발방지 촉구 및 관련 강력한 제재 조치 마련
- 마약 오남용 및 과다처방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모니터링 강화 촉구
- 빈곤 계층 결식 해소를 위한 푸드뱅크 식품 안전성 확보 당부

■ 일상 속 국민의 건강과 복지도 고려할 것을 지적

- 생활체육시설 활성화 등 고령인구를 위한 건강증진사업 추진
- 지역가입자 재산평가 시 자동차에 건강보험료 부과 제외
- 노인일자리 중, 공익형 일자리 참여기간 12개월 확대 연장

김미애 의원



아동 권익 제고 및 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

I 주요 내용

■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에 부합하는 가정형 보호체계

-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보호대상아동 시설보호 비율, 아동 최우선 이익 고려하여 입양, 일반위탁 등 가정형보호 강화
- 시설아동의 면접교섭권 실질적인 보장과 유기아동 보호체계 통합관리 필요성
- 미국(안전한 피난처) 등 해외사례 검토하여 보호출산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 국내입양활성화 및 해외입양인 지원 필요성

- 21년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 후, 대기 양부모 증가 및 입양절차 지체 등 입양 현장 혼란 가중
- 25년 시행 예정인 입양특례법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로드맵 및 연장아·의료적 소견 아동 입양활성화 방안 마련
- 미국 등 해외입양인 시민권 취득을 위해 복지부의 실질적인 지원 필요

■ 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

- 백신 피해자 일상회복 위해 인과관계 추정하는 특별법 제정 필요
- 은둔형 외톨이 통합지원사업 차질없는 시행 및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 배려 정책 지원 마련
-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사업 강화 및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예외 적용 필요성
- 법인어린이집 출구전략 및 바이오, 화장품 산업 등 기술유출 방지대책 마련

■ 필수의료 강화 및 튼튼한 사이버 보안체계 구축

-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수단이며, 수가인상, 의료소송 리스크 완화, 국민인식 개선 등의 사전 조치 필요
- MRI 등 급여 확대 기준개선, 의료 과다이용 근절 등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정책 통해 필수의료, 희귀난치질환 분야 집중 지원
- 건보공단 등 국민 개인정보 보유기관의 체계적인 사이버공격 대응체계 구축

■ 청년 중심의 국민연금 개혁

- 개혁논의의 청년세대 참여 보장 및 청년 동의하고 부담 최소화하는 개혁안 마련



국민건강·생활안전 제대로 지켜야!

I 주요 내용

■ ‘마약과의 전쟁’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 마약류 과다처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 필요
-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문제에 있어 수사의를뢰를 신청하고도 수사기관과 공조가 안되고있는 식약처 질타, 부실한 마약류 관리 실태 지적.
-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셀프처방, 사망자 또는 타인 명의 도용, 대리처방, 중복처방과 같은 문제에 대한 식약처의 적극적 대응 요청

■ 포스트코로나 시기, 국민 안전점검 필요

- 극단적 선택, 지난 3년간 3만9453명, “코로나19 사망보다 많아”
-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질병청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기관 확대 필요

■ 출산율 회복을 위한 노력 필요

- 정신건강정책관, 건강정책국 그리고 자살예방정책과를 국으로 격상시켜 새로운 실은 만들어서 관리가 필요함을 질의
- “난임부부 국가 동행제” 제안
- 건보공단 대상, 초음파 지원 확대 필요성을 질의

■ 국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허술한 정책 및 부실 현안 개선요구

- 이태원참사 1주년 관련 철저한 대비 요청
- 최고 자살률과 최저출산율 관련 대책마련 필요
- 동부산권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 필요성 강조
-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율 2%에 불과
- 금연사업 5년간 2631억 투입에도 사업 참여 이수율은 30%에 불과
- 국립중앙의료원 대상 의료분쟁 78% NMC과실, 철저한 안전관리 필요

- 염증 치료등에 사용되는 면역글로불린 제제 안정적 공급 필요성 강조
-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위, 법률위원 절반 불참
- 전국 소아과 줄폐업에 따른 의료 공백사태 우려
-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 참여율 0.3% 활동 주치의 10명중 1명
- 장기이식 대기중 12,000여명 사망 및 뇌사기증자 6% 수준
- 식약처 소비기한표시제도 시범사업 실효성 관련 질의
- 병원선 인력난, 1척당 공보의 3~4명, 1명당 8,000명 진료 수준
- 노인인력개발원 대상, 시니어인턴십 중도 포기 4년 새 10배 급증함 질의
- 성형외과 의료분쟁 1년새 5배 증가, 의료사고 배상금 회수율 8%에 그침
-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전담 인력 부족사태 관련 질의

■ 보건의료산업 관련 질의

- GMP위반업체에 대한 적합판정 취소 제도 신속 적용 요청
- 비대면진료 관련 산학연 등 이해관계자 간의 깊은 논의와 협력 요청

서정숙 의원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전인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I 주요 내용

■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정책 추진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 수호해야

- 건강보험 법정지원금 미지급금이 최근 5년간 19조 3,847억원에 달함을 지적하고,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예산 확보 의무를 다할 것을 주문
- 필수의료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의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고, 의대 정원 확대 논의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설득이 필요함을 강조

■ 마약중독문제는 대한민국 공중보건 위기!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 마약중독 치료 및 재활정책은 정신건강정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의 업무영역임을 강조하고, 타부처와의 업무 범위 조정 및 복지부 역할 확대 필요성 제기
- 지역사회에서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배척당하고 있는 마약중독자 재활시설에 대한 국민인식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마약중독자 정신재활시설을 국가 소관으로 전환하는 등 지원확대 방안 마련 주문
- 환자의 복용 중단 등의 사유로 가정 내에 남겨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지적하고, 현재 특정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수행 중인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의 전국 범위 확대 필요성 제기

■ 사회적 약자 위한 빈틈없는 보건복지정책 추진으로 국민모두가 전인건강한 대한민국 실현해야

- 시각과 청각이 모두 손상된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의 필요성 지적
- 치료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5세 미만 영유아 중증 아토피 환자의 적기 치료 위한 급여기준 확대 및 산정특례 기준 개선 필요성 제기

이종성 의원



포폴리즘 정책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약자복지 실현해야

I 주요 내용

■ 포폴리즘 정책 구조조정 통해 꼭 필수의료 자원 마련해야

-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건보재정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새 정부 출범 2년 차이지만 여전히 文케어를 비롯한 과거 포폴리즘 정책으로 인한 건보지출은 '현재진행형'임
- 포폴리즘 정책 구조조정을 통해 낭비 요인을 줄이고,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분야에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현해야 함

■ 여전히 열악한 장애인의 삶

- 장애인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정책이 가장 핵심사항인 소득·고용 부분 3단계에서 소리소문없이 추진력을 잃어가고 있음.
- 장애인의 낮은 고용환경 속에서 관련 부처인 복지부·노동부조차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동·편의시설 문제도 여전히 소극적으로 대응
- 장애인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자세로 일관하는 실태를 점검하고 장애인복지제도의 칸막이 제거와 장애인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도 도입 촉구

■ 지속 불가능한 대한민국의 현 복지정책

- 큰 틀 속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약자 발굴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마련되거나,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정책 난립
 - 2022년 복지부 전수조사 결과,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1천 개 이상, 지자체 사업 1만여 개 이상인 것으로 확인
- 한편 국민 10명 중 7명은 보편적 복지보다 약자 중심의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기재부, 중장기 재정개혁과제 국민인식 연구)됨.
- 이에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효율적인 복지체계 구현을 요청함.

조명희 의원



‘팩트·데이터 기반’ 정책 질의, ‘필수·지역의료 붕괴’ 해결 선도!

I 주요 내용

■ ‘현장 목소리’ 경청! 사회적 이슈와 접목한 의료계 현안, 국민의 눈이 되다

- 전국 41개 의대 설문조사 실시·공개…수가 정상화 및 ‘건정심’ 개혁 촉구!
- 한의업계 불합리 규제, 기초·임상 ‘연구 이원화’ 폐해 지적…변화를 이끌다
- ‘1600만 경험, 100만 종사’…반영구화장 합법화 당위성과 선결 요건 제시

■ ‘국민 건강 증진’ 정책 실행 점검과 ‘보건복지 취약 계층’ 문제 해결 주문

- 마약에 취한 공직사회 일갈! 코로나 후유증 공론화에 ‘감염병 白書’ 강조
- 욕창 간병비 지원, 돌봄 인력 처우 개선, 필수·지역의료 활성화 추진 천명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시급…이동권 증진 ‘1:1000 전자지도’ 획기적 제안

■ 제도·정책 개선! 피감기관의 폐단을 비판하고 의료업계의 쇄신을 강조하다

- 사무장병원 부당 이익금, 건보공단 직원 46억 횡령…‘환수 저조’ 강력 질타!
- ‘방만 운영, 노조 전횡’…폐쇄 위기 ‘사회서비스원’ 실태 해부! 혁파 力說!
- ‘90억 리베이트 살포’ 논란의 안국약품…증인 엄중 지적에 기관 감독 촉구

■ ‘단독 기사 출고’와 ‘주요 매체 보도’로 증명된 조명희 의원의 ‘질의 성과’

- ‘건보 횡령 직원’ 생존 징후 최초 공개…KBS·SBS·TV조선 등 방송사 집중
- 시사저널·아주경제·쿠키뉴스 등 ‘단독 기사’ 잇따라…他 언론 인용 보도까지
- 욕창·한의학·리베이트…차별화된 질의, 국감 관련 보도만 ‘총 160건’ 기록

■ 黨內 호평에 언론도 격찬…“공공성·영향력 입증, ‘국민의 알 권리’ 향상!”

- 국민의힘 ‘2023 국정감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우수 국회의원’ 選定
- 쿠키뉴스 ‘2023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大賞’ 當選 (4년 연속 수상 쾌거)
- “더 나은 보건의료계 향한 제언”(머니투데이), “민생 현안 성과”(쿠키뉴스)

최연숙 의원



마약류 셀프처방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 강화 및 시스템 구축,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개선 촉구, 치매·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보급 확대

I 주요 내용

■ 마약류의약품 관련 의료인 면허관리시스템 구축 및 셀프처방 금지 법제화!

- 최근 3년 반 동안 총 15,505명*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하였으나, 의료인 면허 관리·감독 부재
* 전체 활동의사(치과의사 포함)의 11% (2022년 기준)
- 2020~2022 동안 61명 점검 결과, 38명 수사의뢰, 15명 송치(수사 중 8명)
-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결격사유이자 면허 정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면허 취소 사례 없음.
- 복지부와 식약처에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 정보 공유 및 면허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강조
- 의원실 여론조사 결과, 의사 마약류의약품 셀프처방이 오남용 우려로 문제있다고 인식(58.7%)하고, 의사 본인 및 가족 처방 규제 찬성(66.8%)

■ 취약계층 가계부담 완화라는 본인부담상한제 취지에 맞도록 제도 개선해야!

- 2022년도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에서 본인부담상한액 환급받는 직장가입자 중 100억원 이상 고액자산가 12명, 30억원 이상 자산가 336명
-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은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낼 뿐 아니라 환급 혜택을 누림
- 2022년 편법 건강보험료 납부자 점검한 결과, 93건 중 29건(31%) 적발
- 직장가입자 허위취득 점검 확대 및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재산과 소득을 연계하는 방안 등 개선 촉구

■ 치매 환자와 발달장애인을 위한 배회감지기 보급 촉구!

- 매년 치매환자(1만3천여건) 및 발달장애인 실종신고 (8천여건) 빈번
- 배회감지기 착용으로 실종자 발견시간 단축
(치매환자 8시간→51분, 발달장애인 46시간→55분)
- 치매환자수 및 발달장애인 수에 비해 배회감지기 보급 부족
 - 치매환자 100만명에 매년 7,000여명만 보급
 - 발달장애인 25만명 중 1,614대(2022년 기준)만 보급
- 배회감지기 효과가 입증된 만큼, 치매환자 및 발달장애인에게 필수 지급될 수 있도록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국민 눈높이에서 날카롭고 예리한 정책 질의, 현실적인 대안 제시까지

I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 의사가 아닌 사람이 대리수술, 비윤리적 의료행위 심각(SBS 보도)

- 대리수술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밀폐된 수술실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의사들이 대리수술을 교사하고 실제로 의료기기 영업사원, 판매사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수술에 가담하거나 보조한 것으로, 일부 비윤리적인 의사들의 외압을 이기지 못해 대리수술행위가 만연한 것을 지적함.
- 의료계의 오랜 문제인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실태조사, 사망자 통계 구축, 후속조치 계획을 빈틈없이 마련할 것을 주문.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대(對) 중독 정책 강화 나서야

- 4대 중독(알코올, 마약류, 도박, 인터넷)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정책은 '치료'보다는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중독문제에 있어서 치료와 회복의 종결책임이 있지만 정작 치료 담당기관이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어 효과적인 치료대응에 한계가 있음.
-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실질적 치료 제공 차원에서 복지부가 도박중독 대응 주무부처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

■ (보건복지부) 자동심장충격기, 정확한 지침으로 보급효율 높여야

- 자동심장충격기가 우리나라에 보급된 후 현재 7만대에 이르는 상황으로 AED 보급도 중요하지만 보급에 비해 효율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
- 보건복지부의 불분명한 지침으로 인해 AED설치가 응급의료 대처라는 본 목적보다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하면 안될 것을 강조.
- AED 보급확대를 동반한 정확한 지침 확립과 인지도 제고, 그리고 노후 장비의 철저한 관리 등을 통해 장비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

최재형 의원



국민 보건·복지 증진 위해 제도 미비점 보완하고, 사각지대 찾아 지원 확대해야

I 주요 내용

■ 사회적 입원 노인들에게 다양한 돌봄 서비스 선택권을 제공해야

- 의료가 불필요한 노인들이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들이 통합재가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 및 인프라 구축 필요

■ 분만 인프라 유지 위해 분만실 운영비 지원 및 의료사고 보상제 개선해야

- 저출산 현상을 감안할 때 수가 인상만으로는 분만실 유지 어려움. 특정 기준(인력, 시설)을 만족하는 경우 분만실 유지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
-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액수(최대 3,000만원)가 적어 의료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 빈번함. 일본의 무과실 보상제도 등을 참고해 보상 금액 늘리고 관련 제도 개선해야

■ 점증하는 이유식 사고, 중대 위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해야

- 원재료 함량 거짓 표시 등 이유식 관련 사고 매년 늘고 있으나, 최근 5년 고강도 처분 없었음. 처분 강도가 낮아 위반사례 지속된다는 지적 있음
- 처분 수위 높이고, 중대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해야

■ 주객전도 탈시설 정책, 로드맵 목표 재검토하고 제도 개선해야

- 탈시설 정책에 따라 지자체와 시설이 신규 입소를 제한하여 입소를 희망하면서도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는 장애인이 대략 1,200명에 달함
- 거주 인원 30명 초과 시 지원 단가를 삭감하는 등의 정책을 일률 적용하지 말고, 시설 특성 및 희망자 수요 등을 검토하여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
- 탈시설 시범사업 결과, 수요가 예상(올해까지 400명 목표였으나 80명 자립)보다 적었음. 과도하게 설정된 탈시설 로드맵의 목표 재검토하고,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해야



제3부

상임위 의원별
주요성과

환경노동위원회



문정부 실정을 지적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환경·노동 정책 추진을 촉구

I 주요 내용

■ 문정부시절 물관리위원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일감 몰아준 사실에 대한 지적(환경)

- 물관리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본인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서 환경부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6억원에 달하는 일감수주
- 조사결과 18건 중 9건이 선정평가 누락 등 용역 선정과정에 문제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하수슬러지 감량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환경)

- 하수슬러지 감량화 정책 10여년 지났지만 큰 효과 못 보고 있어
- 주요 정책인 슬러지의 고�형연료화, 수요 없는데 공급은 계속 발생
- NDC2030 달성,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석탄화력발전 감축 예정에 따라 고�형연료는 더 이상 갈곳 없음
- 통합바이오가스 처리된 이후 잔존슬러지 처리에 대한 새로운 정책 마련 촉구

■ 서울교통공사의 부당노동행위 특별근로감독 필요(노동)

-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교통공사의 방만 운영은 도를 지나치고 있음.
- 노사가 법령을 위반해서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하는 사례 다수 확인
- 조합원 수 1만4000명,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풀타임 16명, 파트타임 32명 이지만 실제 파트타임 311명 사용
- 서울교통공사의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한도 인원을 10배 넘게 초과한 것은 사회통념 상 수긍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보이며, 조합간부의 미출근 용인, 근무협조제 남용 방치 등도 부당노동행위와 배임죄가 성립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요청함.

■ 연기자 임금체불 제도개선 지적(노동)

- 드라마 제작사들은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악용해 출연료 지연 지급과 미지급 같은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가 드라마 제작사들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하며, 관계부처와 고시(표준계약서) 개정을 위한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함.

김형동 의원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 약자 보호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구현에 앞장

I 주요 내용

■ 노사 법치주의 확립 통한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 및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뒷받침

- 민주노총 소속 철도노조의 '정당하지 않은 조합활동'까지 보장하는, 사실상 노란봉투법 수준의 불법 단체협약을 체결한 한국철도공사에게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 의결을 통해 바로 잡을 것을 촉구
- 원주·안동시공무원 노조의 전공노 탈퇴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불법적 노조 탈퇴 방해 행위를 지적하고, 「노동조합법」에서 부여한 자유로운 노동조합 조직·가입·탈퇴 등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대표발의, 23.3)의 조속한 개정을 주장

■ 노동 약자 보호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철학인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구현에 앞장

- 근로자 휴식권 보장을 위해,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14,599개)에 대한 조속한 휴게시설 설치 촉구
- 17개 시·도중 5개 시·도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산업재해 병원 부재. 산재환자 재활 및 치료권 보장을 위해 산재병원 신설 필요
- 급증하는 폭행 산업재해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주문

■ 이상 기후로 인한 홍수 등 자연재난과 녹조 발생 막기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

- 새로운 댐 준설과 지방하천 중심의 하천 정비 촉구
- 국가하천(설치율 415%, 303개소)에 비해 저조한 지방하천(설치율 8.6%, 325개소)의 수위관측소(홍수감지기 센서) 설치 확충 주문
- 댐 녹조가 창궐하는데도 수공의 녹조 저감 예산이 감소하는 부분 지적하고, 녹조 저감 예산 확충 및 해외처럼 '알루미늄염 수처리제' 도입 통해 녹조현상을 저감하도록 정책적 대안 제시

박대수 의원



노동 약자를 위한 정책 제언 및 이념·규제를 넘은 환경 정책 촉구

I 주요 내용

■ 권리보호 및 수급분석 위해 ‘외국인력 통합 평가 관리 시스템’ 마련 필요

-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력 규모가 크게 확대됨
- 하지만 외국인력 비자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부처 간 정보 교환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와 관련된 예방·사후조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흩어져 있는 외국인력 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외국인력 수급분석의 고도화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외국인력 통합 평가 관리의 주체로 나설 것을 주문

■ 중앙노동위원회, 개별분쟁 증가에 따른 권리구제 기능 및 전문성 촉구

- 노동위 사건 10건 중 9건이 개별 노동자 권리 구제인 것으로 나타남.
- 이에 개별 권리구제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불필요한 행정적·경제적·인적 낭비를 막기 위한 ‘화해조정 전치주의’의 도입을 촉구
-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임위원의 증원과 조사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신속한 분쟁 해결 및 권리구제를 제고를 당부

■ 4대강 물관리, 이념 논쟁 아닌 국민 안전 위한 실용적 대책 논의 필요

- 4대강 사업에 대한 보 운영·해체 찬반 논란이 10년 넘게 지속됨.
- 올해, 하천 오염원 관리를 통해 녹조 발생일수가 작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자료를 제시하며, 녹조 발생과 4대강 보의 연관성 적음을 증명
- 이상기후가 일상화되어 지속적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홍수 안전을 위한 댐 건설 및 대규모 준설사업 확대 필요성 제언

■ 과도한 환경 규제로 존폐 위기에 놓인 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 촉구

- (생분해 플라스틱) 22년 급작스런 환경표지 인증 중단으로 업계 붕괴 위기에 처한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 (파티클보드(PB)) 환경부 규제로 PB공장에서 연료로 목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PB산업을 존폐 위기로 밀어 넣은 것을 질타하며 대안 강력 요청
- (비목재 종이) 탄소중립이 대두됨에 따라 환경기술은 계속 발전하는 반면, 관련 인증은 10년 전에 멈춰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못하는 것을 지적

이주환 의원



文정부의 과오 청산, 환경부·고용노동부 정책 허점 짚어내기

I 주요 내용

■ 문재인 정권의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정책 과오 청산

- (통계조작 물타기) 9월 15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조작, 이에 활용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대한 연구용역 몰아주기 의혹 및 고용률 지표 조작 재확인
- (산재 카르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산재 추정의 원칙, ▲산재 환자 전용 특별 수가 신설, ▲산재보험 의학자문운영지침 변경 등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나이롱 환자 급증 지적, 「산재 카르텔 집합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고용노동부 감사 착수 답변 도출
- (환경교육) 올해부터 의무시행된 「초·중학교 환경교육」에 문재인 정부 시절 선발된 국가환경교육지원단 강사 중 반4대강, 장관 탄핵 운동 추진자 등 반정부, 정치적 중립 위반 우려에 대해 개선 촉구. 환경부는 관련 규정 개선키로 함

■ 고용노동부·환경부 정책 관리 부실 관련 허점 짚기

- (이·치수 대책) 이상기후 발생 빈도 증가에 따른 '물그릇 키우기' 댐 리모델링 필요성 및 빗물이용 시설 관리 데이터 확보 필요성 강조
- (전기차 보조금·충전소) 전기차 보급 목표에만 치중한 나머지 전기화물차 보조금 형평성, 충전 인프라, 중국산 전기화물차 보조금 혈세 유출 등 문제 발생, 이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재검토 도출
-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 시행 12년간 현장실습처에 대한 확인 전무,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습처 관리 감독 미흡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 국민의 생명·안전 지키는 정책적 대안 제시

- (이상기후 대비)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 증대에 따른 현장에서의 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방재 기상 지원관 지자체 파견 필요성 피력
- (화학사고) 지자체 화학 사고 대응 계획 및 조례 무방비에 대한 재검토 요청과 관리 감독 강화 주문
- (중대재해) DL이앤씨, KCC 중대재해 발생 관련 책임 회피성 태도 질타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 촉구

지성호 의원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기강해이 문제 및 민노총 불법 정치파업 행태 지적

I 주요 내용

■ 소속·산하기관 감사 실시

- 국립환경과학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각각 연구용역 사업비 목적 외 사용한 사용자에 대해 제재처분을 현행법에 맞지 않게 부과 및 특혜 연구용역 발주함.
- 특히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경우 소속 공무원 A씨가 지도교수에게 연구용역 24억원을 발주 하는 등 두 기관의 기강해이와 비위가 심각한 수준
- 이에 각각 두 소속기관에 대한 환경부의 특별감사 및 복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함

■ 노후상수도관망 세척사업 미흡

- '21년 환경부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 업무 세부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노후상수도관망 세척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한 예산 편성이 없음
- 지자체의 경우 현재 9곳만 관련기준 개정하였고 나머지 지자체의 세부기준 마련은 전무함
- 따라서 노후상수도관망 세척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수돗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실시할 것

■ 민노총 정치파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쟁의권'

- 노조법 제2조5호에 따라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계없는 정치적 이유로는 파업 권한인 쟁의권을 확보할 수 없음
- 그러나 노동위에는 근로조건 향상을 이유로 쟁의권을 획득하고, 실제 파업현장에서는 정치파업을 벌임
- 심지어 총파업 직전 쟁의권 획득 위한 조정신청 5배 급증, 10회 미만 교섭이 86%에 달함
-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를 처벌할 근거를 확보해 불법 관습과 관행 끊어낼 것

제3부

상임위 의원별
주요성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분야 국민 안전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야당의 가짜뉴스, 선동에는 팩트로 반박!

I 주요 내용

■ ‘통계 조작은 역사 조작’, 부동산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한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문재인 청와대와 국토부에 동조한 한국부동산원 질타!

- 통계법 위반 등 문재인 정권 청와대와 국토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관련 불법 사항 지적 및 한국부동산원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촉구

■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일관한 야당 정치 공세 반박, 사업 재개 필요성 강조

- 외압 있다는 증거 없이 억지 주장, 거짓말로 일관하는 야당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방해 지적, 전문가위원회 구성 통한 사업 재개 필요성 강조
- 야당의 남한강 휴게소 특혜 의혹 관련 가짜뉴스와 선동에 대해 지적

■ 국민 안전을 위한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 문제점 지적 및 대안 제시

- 또 다른 카르텔이 의심되는 국토부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특정 기업 대변하지 않도록 철저한 인사검증 시스템 도입 필요성 강조
- 한국도로공사, 사고 방지를 위한 포트홀 관리 촉구 및 고속도로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순찰원의 권한 확대 필요성 강조
- 한국철도공사, SR 철도시설 몰래카메라 범죄 심각성 지적 대책 마련 촉구

■ 국토부와 산하기관, 민생 문제 해결 촉구 및 예산 퍼주기 정책 사업 지적

- LH와 GS 건설에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입주예정자 입장의 보상안 마련 필요성 강조
- LH, 대외여건으로 상승한 민간참여사업 공사비 관련 사회적 비용 발생하는 소송보다는 협의와 중재로 해결하도록 당부
- 인천국제공항공사, 불필요한 인허가로 피해받는 기업 없도록 인천공항내 공항구역과 경제자유구역 중복지정 해제 촉구
- 항공안전기술원, 드론 안전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의 저조한 사업성과 지적가시적 사업성과 창출 노력 촉구

강대식 의원



문재인 정부, 잘못된 부동산 정책 전세사기 여파 및 통계조작 질타, 대통령 지역 1호 공약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 성공을 위한 후속 조치 주문

I 주요 내용

■ 문(文)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낳은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예방책 마련 주문

- 문재인 정부 시절 잘못된 부동산 정책 추진이 집값 상승의 결과를 낳았고, 졸속 임대차 3법은 전세대란을 발생시켜 전세사기의 밀거름을 제공한 것을 지적.
-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인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부담이 쌓여 '3조 원'에 달하는 문제 질타.
-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중 2030세대의 경우 보증보험 미가입한 경우가 많아 대부분 전세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것을 확인. 피해자 사각지대가 없도록 실태조사와 정책보완 의견 제시, 피해자 구제책 및 예방책 마련을 주문함.

■ 문(文)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국기문란' 지적 및 관여 직원 일제 승진 질타

- 부동산원 설립 목적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 유지임에도 94번의 통계조작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 국기문란 및 망국의 지금길 이라는 것을 지적
- 문(文)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력을 받고 부동산 통계조작에 관여한 모두가 종합직 1급으로 승진했으며, 지휘권을 가졌던 국토부 공무원 11명 가운데 9명도 대거 승진하거나 외부기관 고위급 인사로 이동한 것을 밝혀냄.
- 이에 통계조작의 대가로 승진을 보장받은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지적함과 동시에 부동산원이 투명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질타함.

■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대통령 1호 지역 공약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후속 조치 주문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하 TK신공항)은 대구·경북지역의 숙원 사업으로 대통령 지역 공약 1호이기도 함.
- 올해 초 국회에서 TK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 경과가 답보상태였음.
-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성공을 위해 건설 특수목적법인(SPC)에 LH,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이 적극 참여하도록 요구함. 이에 국토부의 좋은 공항 건설 약속 및 범정부 지원 방안 모색, 한국공항공사와 LH의 긍정적인 답변까지 이끌어 내면서 사업 추진 속도에 탄력을 불임.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토·교통분야 발전 방향 제시

I 주요 내용

■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엄정 수사 및 재발 방지 촉구

- 감사원이 발표한 부동산원 통계 조작은 국가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을 해치고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일
- '작성 중인 통계'를 사전에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통계법 위반임을 지적

■ 건축물 및 주거 안전 강화 필요

- 국토부의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의 기준없는 대상 선정 및 과소 표본 선정 문제 지적
- 건설공사 안전점검 부실 및 안전점검 보고서 검증 시스템 오류 지적
- 내진성능평가 적정성 검토 대상이 아닌 경우 내진보강 권고를 할 수 없는 사각지대 개선 필요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해 정비기금 설치,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 선도사업 내실화 등 대책 마련 촉구
- 반지하주택 매입 및 침수방지사설 설치 사업추진 속도 제고 필요

■交通安全 및 편의성 확대 촉구

- KTX 사용연한 도래. 동력분산식 열차 도입에 따른 안전기술 개발투자 확대 및 하자 점검 필요
- 국정과제인 스마트톨링시스템 도입 지연. 기술적·법적 문제의 해결 촉구
- 한국공항공사 보안사고 급증. 기강확립 및 교육강화 필요, AI X-ray 판독시스템 설치 확대 촉구
- 철도사법경찰대 적정 승무 위해 인력충원 필요 지적
- 따릉이 안전을 위해 전용도로 및 분리대 설치 확충, 고장 예방 촉구
- 기후동행카드, 저소득층·청년에 대한 배려와 수도권 지자체간 협의 필요

김학용 의원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게이트, 청와대의 직접 개입 의혹을 밝혀냈습니다.

I 주요 내용

■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게이트 청와대의 직접 개입 의혹을 밝혀냈습니다.

- 문재인 정부때에만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이 무려 58차례나 이례적으로 청와대에 출장은 간 사실을 밝혀냈음. 임원급이 아닌 통계를 담당하는 부장 등 실무진들이 불려간 것으로 파악됐으며, 당시 국토부 실무진들과의 청와대 출장일자가 동일하지 않은 정황을 보아, 이는 청와대가 국토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부동산원에게 외압을 가하고,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 국토부와 부동산원에 즉각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조작 게이트의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함(국토부, 한국부동산원)

■ 철근누락 사태로 인한 보상과 재발방지를 주문했습니다.

- LH 철근누락 사태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도덕적해이 △안전불감증 △전관카르텔에서 비롯된 총체적 부실의 결과임. LH가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고질적 병폐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간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문재인 정부때 보여주기식 징벌적 개혁으로 인해 대폭 축소된 필수 감리인력을 국민 안전 위해 재확보할 것을 주문하였음(한국토지주택공사)
- GS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사회적 재난과도 같음. 하루아침에 입주예정자들이 5년간 원하는 집에 못들어가는 참사에 대해 GS건설 대표에게 책임있는 보상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그 일환으로 LH의 입주자연배상금을 현금으로 선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함(한국토지주택공사)

■ 청년이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주거 정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 최근 많은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음. 혼인신고를 하면 청약 기회가 줄고, 미혼이면 기회가 두 배로 늘어나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혼인신고가 재테크의 일환이 되어버렸음, 국토부에 혼인신고가 내집 마련을 위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지원정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을 주문함(국토부)
- 악성임대인 피해자 80%가 2030 사회초년생임. 전세 사기로 인해 청년들의 꿈이 꺾이는 일이 없도록 악성임대인 공개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구함(주택도시보증공사)



신도시 교통난 해소 대책 마련요구 등

I 주요 내용

■ 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해야!

- 서울 주택난 해소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다수의 신도시가 건설되었으나, 미비한 교통대책으로 입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음.
- 위례신도시의 경우 입주 10년 차 임에도 핵심 교통시설인 위례신사선은 착공도 못 하고 있고, 김포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이 필수적이나 지자체 간 이견으로 노선조차 확정을 못 하고 있음.
- 국토부와 대광위는 중앙부처·지자체 간 이견을 조율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이 규정한 권한을 적극 행사할 필요가 있음.

■ 문재인 정부의 주택통계 조작사건 질타

- 감사원 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 작성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통계수치를 조작한 것이 밝혀짐.
- 이 같은 통계조작의 본질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대비 주택가격(PIR)의 급격한 상승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진 절망적인 상황을 감추고,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함.

■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국토부의 역할 강조

- 국내항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항공기부품의 교역자유화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WTO 민간항공기협정(TCA) 가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주무부처 간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함. 따라서, 부처 간 합의 도출을 위해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함.
- 항공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해외 주요국들은 바이오항공유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관련법에 기준과 정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법적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바이오항공유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함.

박정하 의원



민주당과 문재인정권의 거짓된 실체를 밝혀낸다

I 주요 내용

■ 서울~양평고속도로 총정리 및 팩트체크

-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타임라인을 제작하여 해당 논란이 민주당의 기획적 정치 공세임을 국민께 설명하고, 실제 없는 거짓선동과 가짜뉴스를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검증
- 민주당에서 의혹을 키우고 있는 남한강휴게소 또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바로잡아 근거 없는 정치 쟁점화 차단

■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부동산원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 세척 중 제14조(검증 및 심사) 부분을 개정하며 검증조항을 삭제함
- 한국부동산원은 2022년 9월, 감사원의 부동산 통계 조작 감사 시작 이후 '22.12.26. 업무 세척의 검증조항을 부활시킴
- 위와 같은 사실들을 밝혀내며 文정부 당시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동산 통계 조작이 이뤄진 것에 대해 비판

■ 文정부의 엉터리 LH 혁신안 지적

- 2021년 LH 사태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LH 혁신안에 대해 검증을 실시
- 네 가지 혁신안, ①공직 유관기관 취업제한 대상자를 대폭 확대, ②수의계약 금지 ③설계 공모, 공사입찰 등 계약 관계 업무의 투명성 제고 ④퇴직자의 부적절한 접근·접촉 금지에 대한 허점을 지적하고 文정부의 LH 혁신안이 엉터리였음을 밝혀냄

■ HUG 보증보험 운영 실태 점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의 허위 서류를 걸러내는 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 보게 된 것에 대해 지적
- 9/1일부터 사흘간(영업일 기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600여 건에 대한 서류 점검 결과, 임대인이 허위 계약서를 제출했거나 세입자 동의서를 위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4건 적발
- 기 가입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필요성 제기



사회 민연한 이권 카르텔 혁파하고 공정과 상식 되찾아야

I 주요 내용

■ 尹정부 1년 5개월, 국토부 산하기관 28곳 중 14개 알박기

- 대선 직전 임명했던, 공항공사, JDC 등 4곳 기관장 여전히 알박기 中

■ 불법 무효 단체협약으로 법위에 군림하는 공공 노조

- 근로기준법에 우선하는 철도노조 단체협약, 인사권침해는 기본 징계로 비연고지 전보제한, 누락 호봉도 자동 승급

■ 유엔해비타트 한국위, 문재인·민주당이 만든 사기극

- 기업 압박하고 지역구 챙긴 박수현 前수석 선거법 위반 정황

■ 전관 카르텔의 정점, 도피아! (도성희+H&DE+길사랑)

- 도공 전 사장 → 도성희 회장, 도공 전 본부장 → H&DE대표

■ 말뿐인 해체수준의 혁신방안 NO, 국민이 원하는 혁신 必

- 부동산 투기·무량판 사고 이후 조삼모사 개혁안에 국민 신뢰 추락

■ 문재인 정부의 핵심 주거대책 신흥희망타운, LH의 절망타운 아닌가?

- 文 대통령 고향 땅인 양산 사송지구에 조성된 신흥희망타운 임대형, 23년 상반기 기준 공실률 74.5%...

■ 국민 볼모로 잡는 철밥통 귀족노조의 파업, 이젠 강력히 대처해야

- 금번 파업으로 인한 피해액 90억원, 철도운수사업 공익사업 지정 추진해야

■ 文정부의 민낯을 보여준 대국민 사기 통계 조작!

- 청와대 → 국토부 → 부동산원으로 이어진 통계 조작!

서일준 의원



‘국민’을 위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생 국정감사

I 주요 내용

■ 부동산 통계 조작 관련자 엄중한 처벌 필요

- 감사원 감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최소 94회 이상 조작한 것으로 드러남.
- 부동산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중단을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는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처럼 작성 중인 통계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사항임.
-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을 속이고,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야기한 관련자들은 엄중한 처벌 필요

■ 고속도로 차선 도색 업체 낙찰 방식 제도 개선 필요

- 21년에 도로공사가 발주한 차선 공사에서 명의대여 방식으로 부실시공한 혐의로 업체 30여 곳, 관계자 69명이 검찰에 송치되었고, 이들은 12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남.
- 2021년 도공이 발주한 도로공사에 총 45개 업체가 낙찰이 됐는데, 도색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0%이며, 낙찰받은 모든 업체가 다른 업체로부터 장비를 빌려서 차선도색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
- 불량 차선도색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확실한 패널티를 부과하고 장비를 보유한 업체만 낙찰하는 방식은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이므로 제도개선 필요.

■ 국민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LH에 대해 국토부의 강력 대응 요구

- 무량판구조의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에 이어 LH의 벽식구조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도 외벽 철근을 30%가량 누락한 것이 드러남.
- 지난 7월 31일 국토부가 발표한 철근 누락 공공주택 총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의 시공, 감리, 설계 업체가 LH로부터 벌점 부과 확인(70개 업체 중 23개 업체, 총 48차례 LH로부터 벌점 부과).
- 국민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LH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관련자 일벌백계 요청.



국정감사 지적 사항 및 대안책 마련 촉구

I 주요 내용

■ 근거 없는 양평고속도로 논란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 전문가 검증과 국민의견 수렴해 조속히 재개 촉구

- 강상면 대안노선은 최종 확정된 노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검토중인 노선을 마치 최종확정된 노선인 것 마냥 국민을 현혹시켰음
- 비용편익분석(B/C) 결과, 대안노선이 기존 예타노선보다 13.7% 우수함
-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로 중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전문가 검증 및 국민 의견 수렴해 조속한 사업재개가 이뤄져야 함

■ 공산국가, 개발도상국에서 만행되는 통계 조작 文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져 질타

- 文정권 출범 이후 정부기관·민간(KB주택통계)간 부동산 표본조사 38배까지 차이 발생
- 대외적 신뢰도 추락 우려 속 두 번 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 부당행위자들을 엄벌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전면적인 근절 방안 모색 필요 강조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법인카드 사용 등 국민혈세 낭비에만 혈안

- 최근 5년 반 동안 사용한 법인카드 무려 2,038억, 그 중 업무 간담회 명목 식당 및 술집 등 586억 사용 적발
- 국민혈세 낭비에 혈안 되어 있는 LH 임직원 근본적인 마음가짐부터 바뀌어야 땅에 떨어져 있는 국민 신뢰 회복하고, 진정한 국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 것

■ 2차 공공기관 이전 갈등, 지자체별 공동체 분열 야기

- 전국 30개 시·군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 돌입
- 반드시 법 개정을 통해 과정·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검토되어야 1차 공공기관 이전 실패 답습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음

■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국민과 충북도민 위한 사업, 반드시 제천역 경유하도록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 해야

- 이용객 편의성·접근성, 예산절감 및 열차 정비 등 열차운영의 효율성 증대로 모든 측면에서 제천역 경유가 합리적인 상황임을 강조
- 향후 계획에 제천역이 경유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차원의 면밀한 검토 촉구

유경준 의원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 데이터로 검증하다

I 주요 내용

■ 文정부 통계조작, 재건축부담금 1조원 폭탄

- 문재인 정부의 조작된 부동산통계로 전국 24개 재건축단지 조합원들이 내지 않아도 될 재건축 부담금 약 1조원을 더 내야하는 것으로 밝혀져!
- 부동산원 통계로 산정된 재건축부담금 1조 8,600억원, 민간 통계로는 9,060억 불과
-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정 24개 단지, 통계조작으로 1가구당 평균 8천 5백만원 더 내야 할 상황
※ 2022.09.28. 유경준 의원,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 대표발의(부담금 구간 완화)

■ 文정부 주택정책 실패, LH·SH의 불법 금전지원 정황 포착

-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공재개발, LH 후보지 18곳 모두 표류중!
- LH 서울지역본부·SH, 주민 동의율 확보하고자 주민봉사단(임의단체)에 18억원 불법 자금지원 현황 최초 공개
- 대여금은 민주당 당원 모집, LH직원 접대비 및 시구의원 용돈으로 사용!
- LH·SH 말 잘듣는 주민에게만 현금살포, 주민 갈라치기하는 공공재개발 “전면재검토 요구”

■ 文정부 일자리정책 실패, 최악의 보안사고 발생하는 인천국제공항

- 문재인 정부 1호 정규직 전환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코로나19 당시 줄인 근무시간을 최근까지 유지!
- 인천국제공항공사, 교대근무제 환원에 근로계약서 명시하거나 근로자 동의 필요하다는 노무자문 받았지만 ‘근로계약서 명시X·동의X’
- 다른 자회사까지 번지면 연간 1,556억원 추가 부담 필요, 공사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공사 자체 감사를 통해 문제점 확인 요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강력 규탄!

I 주요 내용

■ (국토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 주택 공급 실패 지적!

- 청와대, 국토부, 한국부동산원이 조직적으로 자행한 통계조작 규탄!
- 문재인 정부 주택공급 실패! 부동산 공급계획 이행으로 안정화 시켜야

■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내부기강 해이, 고속도로 안전문제 개선해야

- 면허부당 취득, 인사청탁 등으로 무더기 징계! 기강해이 바로 잡아야
- 휴게소 내 보행자 안전 및 고속도로 시공이음부 문제 개선

■ (LH) 토지주택대학 폐지하고, 철저한 자산 관리 이뤄져야

- 높은 교육비, 낮은 교원수준, 고위직 인사운영 수단인 LH 대학 폐지해야
- 공공주택용지 연체 급격히 증가, 장기미매각 토지의 철저히 관리 필요

■ (코레일) 철도 파업으로 인한 피해, 손실 최소화 필요

- 철도 파업, 국민과 산업계 피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해야
- 무궁화호 탈선 사고, 열차 선로 전환기 장애 등 유지 관리 부실 개선해야

■ (경기도) 전임 지사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서울-양평 고속도로 조속 추진

- 법인카드 사적유용 방지 대책, 정쟁 없는 원활한 고속도로 추진 필요
- 대북사업 보조금 횡령사건 발생, 경기도 대북사업 철저히 관리해야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공항 보안 강화 및 국제노선 신설 필요

- 상반기 마약 적발 역대 최대! 위험물품도 지속 적발! 보안강화 대책 마련
- 2030 부산세계엑스포 대비, 김해공항의 중장거리 국제노선 신설 필요

제3부

상임위 의원별
주요성과

여성가족위원회

정경희 의원



새만금 잼버리 파행, 윤미향 위안부 후원금 횡령 방관 등 文정권 실정 철저히 바로 잡아야

I 주요 내용

■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근원은 생갯벌을 개척지로 밀어붙인 文정권

- 새만금 개발 위해 생갯벌을 잼버리 부지로 선택했고, 매립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농지기금 1,846억 원을 끌어다쓴 文정권과 전라북도
- 농지로 매립됐기 때문에 대회 내내 배수, 해충, 폭염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대회 종료 후에는 농지로 되돌려놓아야 하므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국민혈세 300억 원이 넘게 투입된 기반시설을 전부 철거해야 하는 상황
-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이런 국제적 망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원 감사 이후 여가부 차원의 철저한 후속조치 요구

■ 위안부 후원금 횡령하여 징역형 선고받은 윤미향에 대해 가능한 모든 조치해야

- 윤미향이 정의연 후원금 횡령, 여가부 보조금 불법 수령, 위안부 피해 할머니 장례금 불법 모금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받음
- 그러나 여가부는 공공 복리를 위해 긴급한 사안의 경우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굳이 사전 통지를 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건만 통지함
- 文정권에서 방관한 윤미향의 불법 행위에 대해 국고보조금 및 이자 반환 명령, 보조사업 배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등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 요구

■ 잼버리 대회 준비한다며 호화 여행 다니며 세금 축낸 공무원들 질타

- 잼버리를 배운다며 공무원들은 지난 8년간 99번이나 해외 출장을 다녀와
- 해외여행을 다녀온 공무원들은 잼버리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와인축제 가고 크루즈 투어하며 국민들이 낸 피 같은 세금 축내
- 잼버리 대회를 핑계로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 축낸 공무원들 문책 및 과도한 인건비 낭비 여부 감사원 감사 촉구

김미애 의원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한부모 가정

I 주요 내용

■ 위기 청소년 상담체계 개편

- 2022년 청소년 자살 수는 884명으로 OECD 35개국 중 4번째로 높으며 OECD 평균(6.4)에 1.6배에 달하는 자살률(10.4)을 보이고 있음
- 사이버 상담센터 상담원 전체인원 중 37.2%가 퇴사를 하고 있어 퇴사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 필요
- 청소년 사이버 아웃리치 사업의 연도별 실적에도 타 기관 연계율이 저조하여 연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 청소년 성폭력 사각지대 해소

- 부산에서 발생한 스터디카페 알바 구인광고 유인 성폭행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존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함께 예방 대책 필요
- '경의선 키즈' 등 성폭력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방문 등의 대안 마련

■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사후관리 필요

- 매년 민관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자체의 조치를 파악하고, 재발하는 업소에 대한 추가 제재 필요
- 점검 지역 선정 시 청소년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파악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방만 경영 점검 필요

-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이행을 관리하는 양육 비행관리원의 변호사 확충 및 처우개선 방안 마련
- 기관 청사 이전 후 임차 관련 비용 및 관용차 렌트 과다 지출에 대한 대책 마련

조은희 의원



예산·조직리더십을 통해 본 전북 정치권의 잼버리 준비 부실 책임규명, 보조금 관리강화 주문

I 주요 내용

■ (여가부) ‘잼밥’에 관심 컸던 전북정치권, 잼버리 계약은 담합·부실 투성이

- 전체 예산의 7.5%를 차지하는 국비로 성공 개최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달리 잼버리 대회 준비 과정에서 새만금 SOC 예산 확보 필요성이 강조된 전북 정치권의 대응 사례를 비교, 전현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 정치권이 대회 준비 본연의 임무보단 ‘잼밥’에 관심이 컸던 것이 준비 부실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을 지적
-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집행위원회가 조직위 사무국의 예산 집행 계획 및 내역에 대해 1차 보고를 받아 심의 의결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에 소홀하여 ▲대회 한달을 앞두고 전체 계약의 30%가 급히 체결된 점 ▲전북도 공무원이 도청 문구점에 급히 연락해 백서 제작을 맡기고, 속눈썹 시술업소에 상징물 제작을 의뢰, 사무기기 판매업체에 편의를 봐달라고 사정해 행사 간식 공급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담합 부실 계약을 체결한 문제를 지적.

■ (여가부) 이례적·기형적 조직위 임원 구성, ‘불박이’ 위원장·사무총장의 책임

- 스카우트연맹 총재·지자체장으로 공동위원장을 선임한 고성 잼버리와 달리 문재인 정부가 2019.6.부터 1년간 진행한 조직위원장 선임 논의 결과, 대회 유치 이후 4번 교체된 여가부장관과 총선·대선·지선 등 정치일정에 골몰한 지역 국회의원을 선임한 문제를 지적
- 특히, 2016년 대회 준비위원장을 시작으로 7년간 ‘불박이’ 위원장으로 활동한 지역 국회의원의 ▲준비위원장 재임 당시 잼버리 외유성 출장 의혹 ▲‘사무국을 구성하여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대회 1주일 전 발언과 달리, 대회 초반에 터진 논란에 대한 부실검증 문제 ▲전문성도 없는 사무총장을 선임한 데 대한 침묵 등에 대해서도 여가위가 함께 책임규명 대상으로 삼아야 함을 제안

■ (여가부) 보조금 부정수급·관리미흡 실태 지적 및 환수대책 촉구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등 여가부가 ‘약자 보호’ 사업에 지원한 민간단체 보조금이 일부 단체들의 ATM기로 전락한 실태를 지적하고 3년간 적발된 부정수급액 환수가 전체의 7.5%에 그치고 있어 제도 개선을 촉구함. 여가부 장관 “관리강화 및 환수 철저”

지성호 의원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정책 필요

I 주요 내용

■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이탈여성 특성 고려한 정책 필요

-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3만 5천여명 중 75%가 여성임
- 그러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이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폭력피해에 쉽게 노출됨에도 성폭력과 폭력에 대한 기본 개념이 부족해 당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 그럼에도 현재 여가부의 북한이탈여성의 지원사업은 이주여성 지원사업의 일부로만 편성되어 있으면 이마저도 5%밖에 차지하지 않음
- 이에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북한이탈여성을 지원할 방안을 요청함

■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확충 필요

- 현재 전국 10곳에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가 지자체 위탁운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분포도를 보면 실제 북한이탈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와 동떨어진곳에 운영이 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임
- 설치된 지역 중 규모가 가장 적은 광주광역시에는 415명의 탈북여성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충북 1,113명 경북 909명, 강원 691명 등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또한 동료상담원들도 각 센터별 1명씩만 배치되어 있어 2인 1조로 현장상담을 출동하는 1366 여성긴급전화와 차이가 남. 이뿐만 아니라 출장비 부족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음
- 이에 센터를 확충하고 동료상담원을 늘려 각종 폭력피해에 노출되었거나 우려가 있는 북한이탈여성들을 보호할 것을 요청함

최승재 의원



국가 간 신뢰에 영향주는 삭감된 청소년 예산과 취약계층·고교과정 중단 청소년에 대한 여가부의 적극적 관심 당부함

I 주요 내용

■ 해바라기센터 운영 내실화 방안

- 인력 부족과 운영난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첫째, 성폭력피해자를 365일, 24시간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야간진료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둘째, 운영기관/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여가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인건비는 낮고, 공간을 무료로 제공해야 하고, 시설운영비 지원이 적어 센터 운영난으로 기존 센터가 폐쇄되고 있으며 유지, 확대가 어려운 현실. 여가부는 해바라기센터가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로서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도록 당부

■ 고교과정 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보연계 근거 마련

- 학업중단 청소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의무교육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고교 과정에 문제가 있음.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것이 제한적임. 전국 220개소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학업중단 청소년이 연계되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안내받고,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 청소년 예산 삭감에 대한 입장

-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인, 청소년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분야별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디지털 등 환경변화와 청소년의 수요에 맞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절실히 보임. 또한, 청소년활동지원 사업 예산 3,825백만원은 전액 삭감이 되었음. 여기에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경우, 국가 간 교류약정 체결(MOU)을 통해 추진된 걸로, 현재 39개국과 체결되어 매년 약 10개국 내외로 초청 파견되고 있는데, 국가간의 신뢰에도 문제가 됨. 나아가, 국제적 경험을 쌓을 기회가 부족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기에 여가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함

최연숙 의원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명령 점검 강화 및 소재파악 개선, 청소년 회복센터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선 촉구

I 주요 내용

■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시설 취업제한 명령 점검 강화 법제화!

- 아동·청소년 시설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 미조회로 과태료 부과된 사례 연평균 300여 건 발생
- 여가부가 적발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시설 취업 사례 매년 100여 건
- 현재와 같이 연 1회 점검 시 성범죄자가 최대 1년 동안 아동·청소년 기관에 취업해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점검 횟수를 반기별 1회 이상으로(연 2회 이상) 상향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성범죄 경력 미조회 과태료 상향 등 관리·감독 강화 촉구

■ 아동·청소년 보호 위해 성범죄자 주소 파악 철저히 해야!

- 2017~2021년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 291건 발생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재범률 55%)
- 성범죄자 중 146명 소재파악 불가(2023년 9월 기준)
(2019~2023년 연평균 약 118명이 소재 미파악)
- 성범죄자 주소 미파악 시 사실상 여가부의 성범죄자 알림제도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법무부·경찰·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성범죄자 관리·감독 강화 대책 마련 촉구

■ 청소년 회복센터 환경 개선 및 교육 지원 개선해야!

- 청소년 회복센터(9곳)의 청소년 대상 연구 결과, 전반적 인지발달 지체가 확인됨
- 발달시기인 청소년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여가부 차원의 교육프로그램과 청소년 회복센터 지원 예산 확대 촉구

2023

국정감사 백서

PEOPLE POWER PARTY

발행일 2023년 11월
발행처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우) 07238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2 국민의힘
02) 6288-0200

2023

**국정감사
백서**